

1993년 1월4일 발행·제4권 제1호·1990년11월14일 등록·라-4859호 발행처/국민경제교육연구소 136-270 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동961-12 전화 (02)561-1400 1991년8월30일제3종우편물(나급)·월간

정책담당자가 만드는 경제전문지

나라경제

1993. 1



**특집/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키운다**

**특별기획/클린턴 新행정부의 출범과
우리의 대응**

**경제정책해설/의료보험 급여범위의 확대와
급여수준의 향상**

편집/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의
발행/국민경제교육연구소

重商主義의 대표적 사상가

토마스 먼

영국의 대표적 重商主義者인 토마스 먼(Thomas Mun : 1571~1641)은 1571년 런던에서 부유한 직물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성장과 교육과정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없으나, 먼 역시 가문의 전통에 따라 일찍부터 상업에 종사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東印度와의 교역에 참여하여 큰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1615년부터는 영국의 동방무역을 독점적으로 담당했던 東印度會社의 理事로 재직하였다.

먼의 대표적 저술로는 『英國과 東印度의 交易에 관한 講座』(A Discourse of Trade, from England unto the East Indies, 1621)와, 1628년 완성되고 그의 死後 출간된 『外國貿易에 의한 英國의 財寶』(England's Treasure by Forraign Trade, or the Ballance of our Forraign Trade is the Rule of our Treasure, 1664) 등이 있다.

토마스 먼의 첫번째 경제학 저술인 『英國과 東印度의 交易에 관한 講座』는 동인도회사와 인도와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銀의 해외유출을 변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이로부터 그의 유명한 貿易差額理論이 싹트게 된다. 『外國貿易에 의한 英國의 財寶』는 그 제목이 시사하듯이 무역수지의 흑자에 의한 화폐의 유입이 國富의 원천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영국 重商主義의 문헌들 중 오늘날까지도 가장 빈번히 인용되는 고전이다.

새로운 보호무역의 개념을 정립

重 商主義(mercantilism)란 16세기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경제사상과 이에 기초한 경제 정책들을 의미하며, 이 용어의 기원은 아담 스미스가 그의 『國富論』 제4권에서 사용한 ‘重商體制(mercantile system)’라는 표현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 시대 경제사상의 핵심은 금과銀으로 주조된 貨幣 및 貴金屬을 國富와 동일시하였다는 것, 그리고 화폐의 국내 유입을 위하여 수입을 제한하고 수출을 장려하는 保護貿易을 실시하였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토마스 먼이 重商主義의 대표적 사상가로 평가되는 가장 큰 이유는 중상주의 시대의 새로운 保護貿易의 개념을 정립한 사실에 연유한다. 먼 이전의 초기 중상주의에서 무역거래 및 화폐의 이동에 대한 규제는 重金主義(bullionism)에 기초하고 있었다. 즉 외국과의 개별 거래들이 모두 貨幣의 유입을 가져와야 하며, 일단 국내에 들어온 화폐가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은 금지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먼은 이와 같은 경직된 규제이론으로부터 탈피하여 개별거래가 아닌 무역수지가 화폐의 궁극적인 이동을 결정한다는 貿易差額主義를 전개하였으며, 나아가 무역수지의 흑자에 기여하는 상업활동의 자유를 주장하였던 점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먼의 이론이 형성된 직접적인 계기는 1620년대 영국경제가 경험한 불황이었다. 이때 東印度會社에 의한 銀의 유출, 즉 印度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銀이 국내의 화폐유통을 축소시켜 불황을 초래하였다는 비판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었다. 이

에 대하여 먼은 인도로부터의 수입품이 재수출됨으로써 결국 보다 많은 화폐의 유입을 가져온다는 주장을 통하여 동인도회사를 옹호하는 동시에, 화폐이동에 대한 직접규제의 無用性을 강조하였다. 결국 이 논리는 영국정부에 의하여 수용되고, 새로운 중상주의 정책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먼을 비롯한 중상주의 경제학의 치명적 결함으로 흔히 지적되는 것은, 무역수지 흑자에 의한 화폐의 국내유입이 결코 장기간 유지될 수 없는 현상이라는 점을 간과하였다는 사실이다. 18세기 중반 데이비드 흄(David Hume)에 의해 설명된 正貨流動理論(specie-flow mechanism), 즉, 흑자에 의한 화폐의 유입은 국내물가의 상승을 낳고, 물가의 상승은 무역수지의 적자를 통해 화폐의 유출을 초래한다는 점을 중상주의자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먼을 포함한 중상주의자들 역시 화폐의 증가가 물가의 상승을 가져온다는 貨幣數量說을 인식하고 있었고, 먼은 여기에서 나아가 국내물가의 상승이 수출을 위축시킨다는 점을 가격탄력성의 개념을 적용하여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논리적으로는 먼이 正貨流動理論에 입각하여 무역수지의 흑자를 단기적인 현상으로 이해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먼이 이 점을 명확히 서술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이론화하기에는 그의 이해가 부족한 때문이었는가, 혹은 중상주의의 이론적 기반이 붕괴되는 것을 우려한 때문인가. 이 의문은 아직 풀리지 않고 있다. 

권두칼럼

새로운 국제질서와 우리의 선택

/사공 일·전 재무부장관

6

경제정책의 산실을 찾아서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한국경제의 조타수/김왕기·객원기자

78

특집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키운다

93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 /정장섭·상공부

12

중소기업의 기술력 제고 /오영호·상공부

16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확충

/김유성·재무부

20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호협력의 강화 /김윤광·경제기획원

24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 -인력수급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

/이태용·상공부

29

중소기업 창업의 활성화 /홍순직·상공부

35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시책이 필요하다

/김청성·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41

특별기획 클린턴 新행정부의 출범과 우리의 대응

총체적 생산성 향상의 극대화에 최우선순위 두어야

/박원암·한국개발연구원

46

수출시장다변화로 미국시장에 대한 의존도 줄여야

/최인범·대외경제정책연구원

49

시장개방에 대비한 금융자유화 前向的으로 추진돼야

/김재천·한국은행

53

기술집약적·자본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제조업구조 개편해야

/이경태·산업연구원

56

한·미간 산업·기술협력 적극 추진해야

/장지종·상공부

60

대미통상정책, 홍보활동이 관건

/전성철·변호사

64

경제수상

철제가구 예찬/김유채·상공부

70

기술로 만리장성을 쌓자/유희열·과학기술처

71

쌀개방 문제에 지혜 모을 때/이상용·농림수산부

72

경제정책해설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 절약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의 신규도입

/김정곤 · 동력자원부 84

시장개방에 대응한 건설기술의 개발

/김동오 · 건설부 87

의료보험 급여범위의 확대와 급여수준의 향상

/양명생 · 보건사회부 90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영

/노희도 · 체신부 9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통한 환경의 보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

/서동헌 · 환경처 98

정밀측정체제 확립을 위한 계량법 개정

/김영창 · 공업진흥청 101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체제 확립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 /최종수 · 건설부 104

해외통신

일본의 차세대 산업기반기술 연구개발제도

/민태식 · 과학기술처/ 주일 과학관 108

한국경제, 아르헨티나처럼 되지 않을까(下)

/안세영 · 상공부/ UNIDO 파견 112

EC의 기술통합

/최건모 · 과학기술처/ 주EC 대표부 과학관 116

경제동향

나라인 감속성장으로 안정과 경쟁력 강화의 토대 마련

/고형권 · 경제기획원 120

나라밖 美·日의 수출입 동향과 전망

/신현수 · 산업연구원 124

출입기자코너

미래를 통찰하는 교통행정을

/정기환 · 중앙경제신문 기자/ 교통부 118

‘우정사업 자율화’를 기대한다

/김 홍 · 조선일보 기자/ 체신부 119

나라경제 논란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계층별 소비지출 구조

/박성동 · 재무부 128

생활경제상담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 /조홍희 · 국세청 132

건강한 삶을 위하여

노인에게 주로 나타나는 퇴행성 장애 -치매

/홍명호 · 고려대 구로병원 가정의학과장 145

경제부처동정 정책일지 · 인사이동 /편집실 134

경제부처 발간자료 안내 /편집실 140

특별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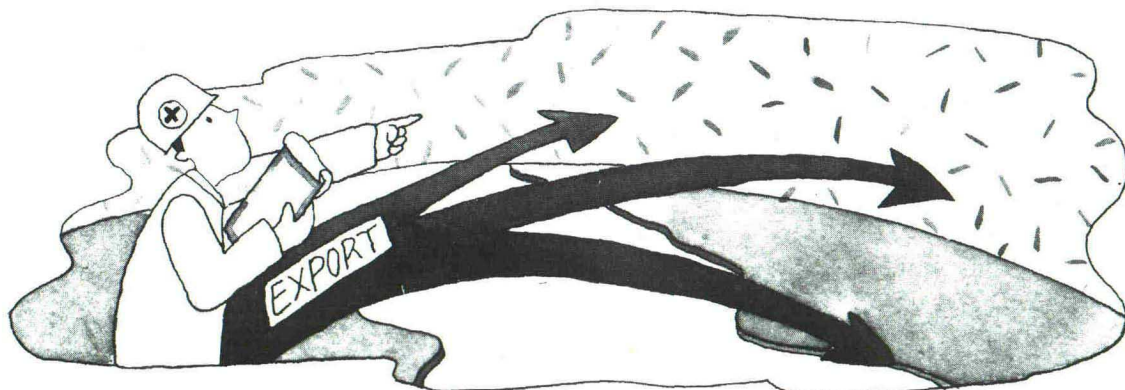
한국형 경제발전모형'을 찾아야 할 때

/송희연 ·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75

노영하 바둑칼럼

군자의 四藝, 74

나라경제 화랑 9



새로운 국제질서와 우리의 선택

司空 壹

前 재무부장관

선진화된 산업구조로의 전환

지난 30여년간 우리는 주로 노동과 일부 資本集約的인 '표준화된 제품(standardized products)'을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수출하는 對外指向的인 경제개발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오늘의 우리 경제는 自他가 인정하는 신흥공업국의 선두주자로 부상하기에 이르렀다. 반면에 이러한 경제개발의 성공은 우리 국민소득의 증가와 생산요소(예: 자본과 노동)의 상대가격구조 변화를 가져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한 단계 더 높은 산업구조로의 조정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즉,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질과 신뢰성이 더욱 중요한 '差別化된 상품(differentiated products)'을 주로 생산하는 선진화된 산업구조, 혹은 보다 자본·기술 및 두뇌집약적인 산업구조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 경제 내부의 변화에 더하여, 현재 일어나고 있는 脫冷戰時代의 국제환경 변화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시의적절한 대응을 더욱 절실하게 하고 있다.

신국제질서의 특징과 시사점

오늘날 세계는 東西陣營間의 오랜 냉전체제의 막이 내리고 탈냉전시대의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한가지 분명한 것은 새롭게 형성되는 국제질서 속에서는 안보나 이념이 아닌 經濟가 국제관계를 결정짓는 핵심요소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세계각국은 자국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자국산업의 경쟁우위 확보에 우선을 두는 시책을 펴나갈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각국간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고 경제적 利害相衝에 따른 국가간의 분쟁의 소지 또한 커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에 얼마전까지의 미국과 같이 세계경제 전체의 변영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유무역체제의 유지와 국제금융질서의 안정과 같은 '公共財(public goods)'를 주도해서 제공할 수 있는 單一經濟超強大國이 없는 것 또한 오늘날 세계경제의 특징이다. 따라서 세계가 필요로 하는 공공재는 주요 경제대국 내지 교역대국들의 '합동리더쉽(collective leadership)'에 의해 마련될 수밖에 없으며, 이들 공공재의 마련에 수반되는 비용과 책임의 분담문제 또한 새로운 분쟁의 소지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주요 교역대국으로 부상한 우리에게도 이러한 책임과 비용분담의 일환으로 우리 경제의 對外開放 加速化와 적정한 환율의 유지 등을 요구하는 밖으로부터의 압력을 예견할 수 있다.

얼마 전 빌 클린턴 미국 민주당 후보가 미국의 새大統領으로 당선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의 對韓通商施策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
새롭게 형성되는 국제질서 속에서는 안보나
이념이 아닌 經濟가 국제관계를 결정짓는
핵심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세계각국은 자국경제의 제고와
자국산업의 경쟁우위 확보에 우선을 두는
시책을 펴나갈 것이 분명하다.
”

볼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앞에서 논
의한 바와 같은 신국제질서와 미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감안할 때, 공화당의 부시 대
통령이 재선되었더라도 미국의 대외경제시책과 그것
의 일환인 對韓通商施策이 大同小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단일경제초강국이 없는 상황에서 안보와 이
념의 덮개가 벗겨진 세계경제는 각국간의 경제적 이
해관계에 따라 圈域化 내지 지역주의 추세를 나타낼
것이 예상될 뿐 아니라, 자칫하면 보호주의의 물결에
휘말릴 우려마저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동안 상
당한 진전을 보여온 EC통합은 유럽 주요국들의 오랜
宿願으로 추진되어 온 것이긴 하나 최근에 와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머지않아 실현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캐나다·멕시코 간의 北美自由貿易地域(NA-
FTA)에 관한 합의 등은 이러한 시각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하겠다.

단지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東亞細亞地域과 미국
과 일본을 다함께 포함하는 환태평양지역의 권역화
내지 지역주의는 이 지역국가들의 정치·사회·문화
적인 다양성과 경제 발전단계의 상이성 등으로 아직
까지는 큰 진전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亞·
太 지역경제협력체로서의 APEC의 지속적인 발전이
이 지역 국가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어 APEC의 꾸
준한 강화가 예상될 뿐 아니라 NAFTA의 확장 가
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하겠다.

앞에서 살펴본 신국제질서의 형성과 병행하여 현
재 세계경제체제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하나의 큰
변화는 세계 주요기업들의 汎世界化(globalization)
추세이다. 과거의 단순한 국제화(internationaliza-
tion) 내지 다국적화(multinationalization) 단계를
지난 범세계화된 기업들은 제품의 생산·판매·부품
공급지의 선택 등을 기존의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범
세계적인 전략과 안목에서 有機的으로 결정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대응

무엇보다 먼저 우리도 국가경영의 우선순위를 경
제에 되돌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승
을 이루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온국민들의
염원인 우리의 남북통일도 경제적 뒷받침 없이는 불
가능하다는 사실과 세계 속의 한국의 입지를 잘 알림
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얻어진 범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경
영의 우선순위가 경제에 주어질 때 인기없는 巨視經
濟政策이나 고통스런 산업구조 조정시책도 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국
내외 경제환경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의 경쟁우위
확보와 신국제질서에의 적응을 위한 構造調整은 지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국내외 경제환경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의 경쟁우위 확보와 신국제질서에서의 적응을 위한 構造調整은 지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농업, 그리고 금융을 포함하는 서비스부문의 구조조정도 '우리의 계획에 따라' '우리의 일정에 따라' '우리의 필요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농업, 그리고 금융을 포함하는 서비스부문의 구조조정도 '우리의 계획에 따라' '우리의 일정에 따라' '우리의 필요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남의 나라나 기타 외부압력에 의해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이 임시변통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한 단계 높은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관건이 技術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교육과 과학·기술개발에 더욱 많은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물론 기초과학 투자도 늘려야 하나 개발된 기술의 산업에의 응용과 商業化에 중점을 두는 시책을 더욱 과감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잊지 말아야 할 일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술도입의 목적을 위해서도 현재 진행중인 세계 주요기업들의 범세계화 추세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안정된 巨視經濟政策과 제반 경제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企業投資에 관한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여주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필요 이상의 각종 규제를 과감히 줄여나가야 한다.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투자는 줄어드는 반면 中國과 동남아 제국으로의 외국인투자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기술이전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가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質과 신뢰성에 경쟁우위의 바탕을 두는 차등화된 수출제품의 경우, 생산기술

못지않게 마케팅과 애프터서비스를 위한 선진기법과 판매망 확보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경제의 圈域化와 地域主義 경향에도 지혜롭게 대응해야 하나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우리로서는 多者間협약에 의해 세계경제의 변영이 이룩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국제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지혜 길러야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友邦도 없다”는 국제외교에서의 상식은 이제 형성되고 있는 국제질서 속에서는 더욱 실감나는 警句가 될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경제나 軍事超強大國으로 國際秩序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입장에 있지 못하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환경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는 지혜를 길러 어려운 국제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선진화와 굳건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조국통일과업을 이룩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남원

93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

우리 경제는 정부가 작년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경제안정화시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물가와 부동산가격이 안정되고 국제수지가 개선되는 등 바람직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내수와 설비투자가 위축되었으며, 특히 작년에는 資金·人力·技術力面에서 대기업에 비해 크게 불리한 중소기업의 부도가 증가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그 어느 해보다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구조조정과정에서 중소기업도 상당한 진통을 겪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유례가 없을 정도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화하였으며, 금융·세제·인력·행정규제 등 중소기업들로부터 제기되었던 각종 요망사항 중 많은 부분을 수용하여 시행하였다.

하지만 정부가 중소기업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이 중에서 어느 모로 보나 국가적으로 아까운 유망기업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유망한 중소기업은 적극 살려 나가겠다는 것이 일관된 의지이며, 중소기업



정장섭

상공부 중소기업정책과장

스스로도 격동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知的·人的 경영자원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등 경쟁력을 기르기 위한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93년도 대내외 경제여건과 중소기업의 과제

올해 국제경제의 흐름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주요국들의 지도자가 바뀔에 따라 제반 정책기조에 변화가 일 것이고 각국은 새로운 정책을 조율할 시간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또한 블랙화와 保護貿易主義 등 국제경제질서의 혼란이 계속되고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가 다소 회복되기는 하나 그 수준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내적으로는 금융·유통시장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의 대외개방이 가속화되고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과정이 지속되어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술혁신 및 정보산업의 발전 등 경제의 전반적 소프트化가 진전되고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가 큰 관심사로 대두될 것이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하에서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

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구조조정과정에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영상 애로를 더 겪게 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을 병행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보호위주의 시책은 가급적 지양하고 자생력 배양을 촉진해 나가되, 이를 위해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 스스로의 자립기반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어 나갈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제조업 주도성장과 2000년대 선진경제 진입을 위한 핵심주체로서 중소기업을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93년도 中小企業育成을 위한 중점 추진시책

중소기업 구조의 고도화

정부에서는 기술·지식집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적극 대응하고 자유시장 경제체제하에서 비교우위를 갖는 강한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위해 경제사회발전 7차 5개년계획기간(92~96년)중 중소기업의 매출액 對比 기술개발 투자비율을 현재 0.25%에서 1% 수준으로 제고시켜 나갈 것이다. 효율적인 기술개발 추진체제 구축을 위해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간 기술교류와 공동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산업기술연구조합의 결성확대 및 異業種間 기술교류를 확산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 構造調整基金의 25% 이상을 기술개발에 투입하고, 각종 재정자금 지원시 중소기업을 우선 배려하는 한편, 기술인력 개발비의 지출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재 25%에서 35%로 확대 지원하고, 신기술 기업화 사업용자산에 대한 일시상각도 현행 취득가액의 50%(外産 30%)에서 취득가액의 90%(외산 50%)로 확대하게 된다.

한편,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술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대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기존의 보호위주 시책은 가급적 지양하고, 자생력 배양을 촉진해 나가되 이를 위해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 스스로의 자립기반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어 나갈 계획이다.

과 각 지도기관의 現役 및 퇴역기술자들의 명단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기술인력을 중소기업들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자 풀(pool) 제를 도입할 것이다. 또한 기술선진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종합적인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중소기업제품의 품질고급화를 위해 최고경영자가 선도하여 회사전체가 참여하는 '品質經營運動(quality management)'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자동화·정보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공업발전자금·중소기업은행·국민은행의 자동화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10%) 적용기한을 92년말에서 93년까지 연장토록 하며, 자동화 시범공장의 지정·운행을 통하여 자동화에 대한 인식을 계속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내에 중소기업 정보은행을 설립하여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금융·경영·인력·입지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産業技術情報院을 중심으로 한 기술정보 유통체제(techno-mart)를 구축하여 기술보유기업과 기술을 이전받기 희망하는 업체들을 상호 연계시키는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

전반적 안정화추세 및 구조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각종 지원시책을 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전담은행을 통한 대출규모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상업어음 할인의 원활한 지원을 지속함과 아울러 중소기업은행 및 국민은행의 자본금 民間公募도 추진하게 된다.

한편, 지금까지 은행을 통하여 지원되어 왔던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 대출토록 하여 금리인하와 절차간소화를 추진하고, 사업전망이 밝으나 일시적 자금난으로 도산위기에 처한 기술집약형 유망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中小企業 構造調整基金내 경영안정자금을 설치하게 되며,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도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담보력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신용보증기관에 대해 1,500억원을 출捐하고, 제2금융권의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연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체제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93~94년 2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20~40%를 특별경감해 주게 된다.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생산기술연구원 등을 통한 기술·기능인력의 양성과 공급을 확대하고, 전국 10개소의 업종별 共同職業訓練院 설립을 계속 추진할 계

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생산직 인력확보를 위한 병역특례제도와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주부인력·고령자·비진학청소년 등 遊休人力을 산업현장으로 유도해 내기 위한 여러가지 지원책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

한편, 중소기업의 입지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아파트형공장과 시화·남동·창원공단 내 영세중소기업용 임대공단 및 수도권내 소규모 공단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기업과의 실질적 협력증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호 유기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 대기업의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유도하여 산업조직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조립대기업과 중소부품업체가 수입핵심부품 개발 초기단계부터 공동참여하여 국산화 성공후 안정적 수요를 확보하고 품질개선을 유도해 나가며, 2차 수급기업체협의회 구성 확대를 통해 중견기업과 소기업간 도급거래를 증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기업 출연에 의한 '계열화 촉진기금'을 설치토록 하여 모기업·수급기업간 공동협력 사업을 지원하고 대기업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관에서 우대 보증토록 하는 連繫保證制度를 적극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대기업사업 중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은 중소기업에 이양토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구조조정 기금 등의 자금지원과 세제지원을 계속해 나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한 도급거래 풍토를 조성하는 데 노력해 나갈 것이다.

국제화 촉진 및 지원제도의 정비

협소한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외로 눈을 돌릴 수 있는 지원시책을 강구하는 한편,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각종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貿易協會內 '해외시장 개척기금'을 96년까지 500억원을 조성하여 지원하고, 수출신용보증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금융 수혜를 확대하며 유망수출기업을 200개 이상 발굴하여 자금지원 및 기술지도를 계속해 나가고자 한다.

수출입절차를 간소화하여 중소기업수출의 간접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년부터는 포괄수출입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1만달러 이하 수출시 수출승인을 면제해 주며 통관절차의 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국제화사업단의 기능을 강화하여 해외투자와 국제기술협력력을 촉진해 나가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및 對中國 수교에 따른 현지투자 진출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이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와 단체수계약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관련법령을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개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 기반의 확충

기업의 원활한 創業環境을 조성하고 지방중소

기업 및 소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산업거변을 확충함과 아울러 중소기업지원의 균형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다.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투자회사·상담회사 등 창업지원 전문기관의 質的 내실화를 도모하고 창업기업 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를 설립·지원하며 창업절차를 계속 간소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한편, 올해부터는 상공부장관이 '지방중소기업육성 기본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하고 각 시·도는 동지침에 따라 다음해의 관할구역 '중소기업육성 실천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되며, 중소기업진흥공단내에 '工場設立支援團'이 발족되어 지방공장건설 대행기능을 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지방이전 및 창업을 촉진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300개 이상의 유망소기업을 발굴·육성하고 구조조정기금, 국민은행의 소기업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소기업지원의 내실화를 꾀해 나갈 계획이다.

도전적 企業家精神 되살려야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도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만들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특성상 그 수가 워낙 많을 뿐 아니라 업종 및 성격도 다양하여 정부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며, 앞으로 자생력이 있는 유망한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중소기업이 안팎으로 거세게 밀려오는 변화의 물결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인식하고 도전적 기업가정신으로 재무장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다.

중소기업은 더 이상 '經濟的 弱者'가 아니라 우리 경제를 이끌어나갈 '牽引車'이며, 중소기업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우선될 때 성장과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본문

중소기업의 기술력 제고

21세기를 目前에 둔 오늘날 세계 지도상의 국경이 이데올로기와 군사동맹이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급격히 달라지고 있다. 과거 냉전시대에 국가의 힘이 총구로부터 나왔다면, 작금의 경제전쟁시대에는 공장의 생산라인과 기술이 체화된 전문기술인력의 머리와 손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벌이고 있는 경제전쟁에서 武器는 고도의 기술력이요, 兵士는 새로운 무기로 무장한 기업인과 근로자들이며 우리 국민은 최대의 支援軍인 것이다.

기술력 확보는 국가경쟁력과 직결돼

이와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세계 경제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민주화 추진에 따른 전환기적 진통을 겪는 과정에서 과거와 같은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量的 성장전략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으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한 시장개방이 經濟 전문야로 확대되고 있어 국내시장 개방이 불가피하게 되어 해외는 물론 국내시장에서도 심각한 경쟁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리 경제가 그동안 경쟁력의 원천이었던 저임금지대에서 고임지대로 '돌아올수 없는 다리'



오영호

상공부 산업기술과장

를 건너 버린 지금, 우리 경제가 선진 공업국을 향한 제2의 도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에 의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품질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인 선결과제가 되고 있다.

기술력 제고 통해 중소기업의 발전기틀 다져야

국가경제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중요한 것은 단지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만은 아니다. 기계·전자·자동차·조선산업 등의 完製品은 그 경쟁력이 수많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부품의 기술수준에 의하여 좌우되고, 산업의 핵심요소기술인 주조·단조·열처리·표면처리·금형·용접 등이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영위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기술력 향상 없이는 세계시장에서의 품질경쟁력 확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은 불가능하다.

특히 창조적 파괴성이 강조되는 오늘날 중소기업은 조직의 유연성과 순발력을 바탕으로 기술혁신에 의한 경제성장예의 기여도가 높다. OECD 5개국을 대상으로 20년간 조사한 76년도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세계시장에 도입된 주

요 혁신들 가운데 약 45%가 중소기업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품종소량생산체제 갖춘 중소기업의 중요성 커져

최근 선진국에서 다수 창업되는 소위 기술집약형 新企業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며 이들은 급진적 기술혁신으로 반도체·컴퓨터·의료기기·정밀화학 등 첨단기술분야에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요컨대 국경없는 시대에 살고있는 소비자의 기호가 다양화되고 소비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술개발이 가속화되는 한편,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후발개도국의 추격이 날로 심한 우리 경제의 현실에서 다품종소량생산체제와 전문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투자도 격감하는 추세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총체적 기술수준을 평가할 때, 기초분야 기술은 물론이거니와 산업기술 분야에 있어서조차 일부 조립기술·생산기술을 제외하고는 설계기술·부품 및 소재기술·공정기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과 상당한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개발 활동이 매우 미흡하고 그 결과 기술개발 수준도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규모가 90년 45억달러 수준으로 日本의 17분의 1, 美國의 33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그 규모를 차치하고 技術開發費를 투자하는 기업체수가 91년의 경우 전체 중소기업의 5.4%밖에 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이는 90년의 10.5%에 비해서도 격감한 매우 우려할 만한 현상이다.

또한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도 업체당 평균투자액이 연간 1,7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 91년도 매출액 對比 기술개발 투자비율도 0.24%로 86년 일본제조업의 평균 3.0%와 비교할 때 대단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지원자금이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발하는 種子돈이 되어 경제사회발전 7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96년에는 중소기업의 매출액 對比 기술개발 투자비율이 91년 0.24%에서 1% 수준으로 제고되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 활성화를 통한 기술개발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기술력 제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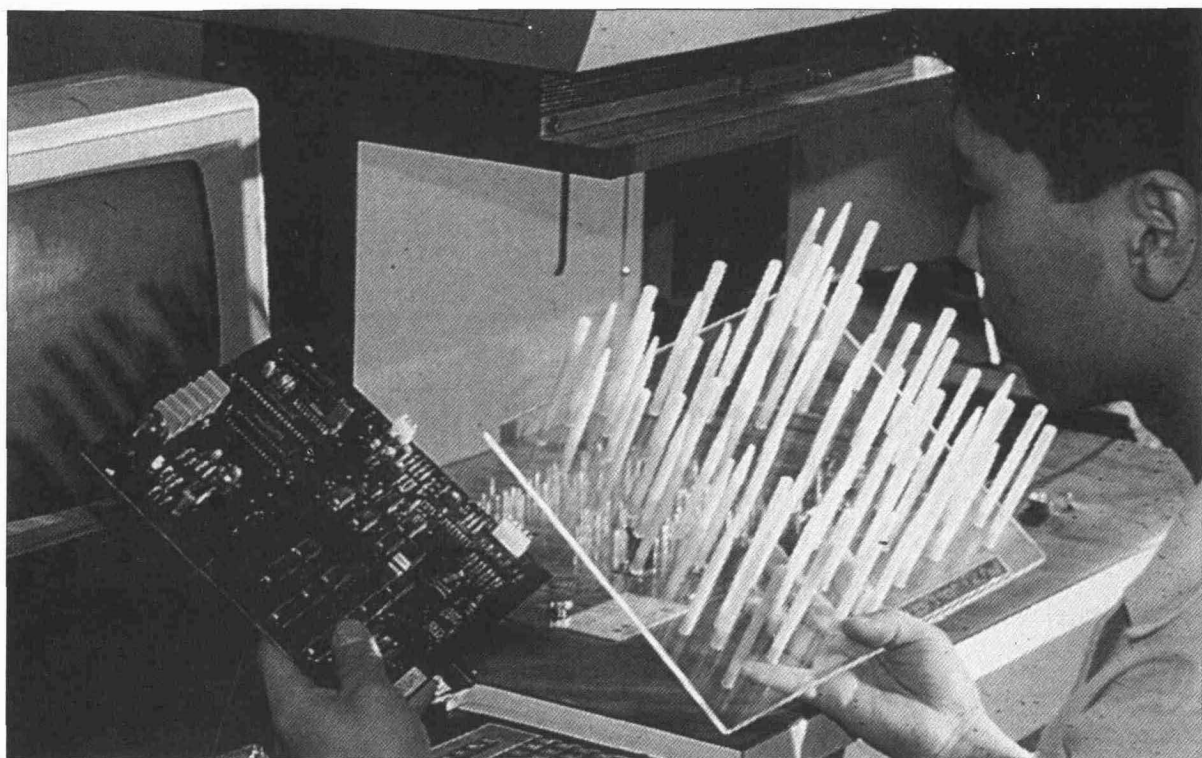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 중 핵심사업으로서 중소 제조업체들이 생산현장에서 공통적으로 겪는 애로기술과, 핵심부품 및 소재나 금형·열처리·가공기술 등 생산기반기술을 집중 개발하기 위해 91년부터 95년까지 919개 생산기술개발 과제를 선정하여 1조5천억원의 기술개발비를 투입하기로 계획하고 91년에 이미 585개 과제의 개발에 착수하였다.

또한 매년 技術需要調査를 통해 발굴한 중소기업 애로기술을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자금·공업발전자금·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중 기술개발자금 등을 포함한 정부자금과 금융기관에서 지원되는 각종 기술개발융자금을 지원하여 개발토록 하고 있다.

기술개발자금 지원의 확대

정부지원자금이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발하는 種子돈이 되어 경제사회발전 7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96년에는 중소기업의 매출액 對比 기술개발 투자비율이 91년 0.24%에서 1% 수준으로 제고되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 활성화를 통한 기술개발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國際收支面에서도 96년부터 연간 21억달러의 수입대체와 15억달러 이상의 수출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효율적인 기술개발 추진체제의 구축을 위해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간 기술교류의 촉진 및 공동개발을 유도하고, 産業技術研究組合의



한편 효율적인 기술개발 추진체제의 구축을 위해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간 기술교류의 촉진 및 공동개발을 유도하고, 産業技術研究組合의 설립확대와 업종별 공동연구소 설립 등을 통해 중소기업간 공동연구를 촉진하도록 계속 지원·조장할 것이다.

기술지도 강화 및 신기술기업화 지원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은 長期低利의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등 간접지원방식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대상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일반적 지원방법 만으로는 충분하다고 하기 어렵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자금 등의 일반적인 애로 외에 자체 기술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기술 자체의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기술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각종 기술개발 지원자금이 보다 내실있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인력·장비 등을 수반한 기술지도사업의 효과적

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공업기술원·생산기술연구원·중소기업진흥공단·한국생산성본부 등 각 기술지도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기술지도사업이 종합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각 지도기관별 특성을 살려 해당분야 전문지도기관으로 特化하는 동시에 기술지도자 및 장비 풀(pool) 제도를 구축, 기술지도기관의 상호협력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한정된 정부재원으로 기술지도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술력 향상에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줌으로써 동기업의 기술력을 단시일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이를 관련업체에 파급·확산시킬 목적으로 92년말 현재 351개 기술선진화 중소기업을 지정, 종합기술지원과 함께 각종 정책자금을 우선지원하고 있으며 99년까지 2,000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진기술을 보유하고도 실용화개발과

사업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無資本 전문기술자에게 기술개발에서 초기 기업화까지 신기술기업화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자금력이나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신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사업 금융회사,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투융자 지원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더욱 강화해 중소기업의 사업화 초기단계에서 필요한 자금부담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기술인력 확충과 기술력의 배양

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계가 기술교육에 참여하여 학교교육과 생산현장을 직접 연계시키는 技術大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관계법을 개정하고 産·學 협동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실업계 고등학교의 확충과 병역특례제도 및 軍人力 활용으로 생산직 인력의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자체 기술개발능력·자금력·위험부담 등으로 인해 신기술의 자체개발을 시도하기 어렵다. 오히려 신기술의 원천소유자로부터 직·간접 기술습득을 통해 기술수준을 어느 정도 향상시킨 후 자체개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는 韓·日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새로 설립된 한·일 산업기술협력재단사업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의 중견기술자 및 중간관리자들이 일본 선진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일본 기업에 대한 현장연수를 國庫로 지원해줄 계획이다.

기술습득을 통한 기술이전을 가속화하고 연수 효과가 중소기업에 널리 파급될 수 있도록 공업기술원·생산기술연구원·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기술지도 전문기관의 지도요원 그리고 각 연구소 및 대학의 연구인력 등을 파견할 예정이다. 또한 업종별 모델기업을 선정하여 일본 전문가팀을 초청, 기술 및 경영자문과 생산성 향상지도를 도모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각 기술지도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기술지도사업이 종합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각 지도기관별 특성을 살려 해당분야 전문지도기관으로 特化하는 동시에 기술지도자 및 장비 풀(pool) 제도를 구축, 기술지도기관의 상호협력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밖에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는 기술정보제공 확대, 기술개발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선진기술의 도입촉진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개발을 위한 총체적 노력이 긴요

한 나라의 기술발전은 국민의 의식수준이나 사회의 문화수준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기술개발투자 규모를 늘리고 기술인력을 육성하는 것 못지 않게 기술발전을 이룰 수 있는 사회적 풍토, 즉 技術文化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우리생활 구석구석에 기술지향적인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이 깃들여질 때 진정한 우리나라의 기술발전이 이룩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오늘날 치열한 경제전쟁속에서 도태되지 않고 세계일류기술 수준의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주체인 산·학·연의 모든 구성원들의 기술개발을 향한 필사적인 노력과 의지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아낌없는 지원을 보낼 때, 이들의 투혼은 더욱 배가될 수 있음을 환기시키고 싶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키운다

中小企業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확충

中小企業은 경제의 뿌리로서 산업의 연관도를 높이고 경기변동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제조업의 경쟁력강화를 주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키며 고용의 창출로 사회적 안정과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여기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 내용과 그간의 지원실적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지원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김유성
재무부 중소기업과장

이상을, 지방은행에 대하여 80%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하고 있다. 단자회사·종합금융회사·리스회사·생명보험회사 등 제2금융기관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義務貸出比率를 설정하여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韓國銀行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중 상업어음할인, 기술개발자금, 수출산업설비금융, 수입대체 소재·부품산업금융, 공해방지 시설자금, 중소기업제품 수요자금

등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극 대출토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자금은 한국은행이 통화를 늘려 지원하는 자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運轉資金의 주요 조달원천인 상업어음 할인도 할인대상 적격업체 선정요건이나 업체별 어음할인 한도에 있어서 우대하고 있다. 수출업체에 대한 무역금융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은 달러당 650원, 非系列大企業은 달러당 400원으로 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融資單價를 우대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담보력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신용보증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토록 하고 있다.

한편, 직접금융에 있어서도 자본금 규모가 적고 증자규모가 적을수록 기업의 有償増資 물량

中小企業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 시책

정부는 그동안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해 우리 산업의 저변을 확충하고 균형있는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金融 및 稅制 支援 施策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중소기업 지원전담은행 설립하여 금융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은행·국민은행 등 國策銀行과 동남은행·대동은행 등 중소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은행을 설립하여 중소기업에 지원해 오고 있다.

또한, 여타 은행에 대해서도 전체 대출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의무화하였는데, 市中銀行에 대하여 전체 대출의 45%

조정에 있어서 우대하고 회사채 발행물량을 조절함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에 대기업보다 評點上 우대하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의 경우 총신용대출규모는 운용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액은 總信用貸出 규모에서 제외하고 있다.

각종 稅制 혜택으로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의 設備投資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계설비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하고 기계설비 투자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투자준비금을 적립할 경우 일정금액을 損費로 인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인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대기업보다 우대하고 있으며,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과 고도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에 대하여는 법인세 등을 감면해 주고 있다.

대도시 공장이나 도시권 法人本社 등의 地方移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이전준비금 적립시 일정금액을 損費로 인정하고 지방이전을 위해 공장 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讓渡差益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와 아울러 수도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감면해 주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약칭)'에 의한 사업전환 계획에 따라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공장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사업전환 이후 일정기간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등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關稅部門에 있어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체가 기계·전기기기 등 施設財를 구입할 때 관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관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중소기업체의 관세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주요 원자재를 대

정부는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금리의 하향안정화를 계속 유도하여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기술개발 등 구조조정과 설비투자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상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割當關稅를 운용하고 있다. 또한 정확한 關稅還給金을 산출하여 신청할 능력이 없는 중소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簡易定額關稅還給制度'를 도입하여 輸出免狀의 제시만으로 관세를 즉시 환급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의 中小企業 支援實績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제도는 과거부터 꾸준히 시행되어 왔으나 정부는 특히 우리 경제의 부문간 균형발전 및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88년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해 왔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설비자금 및 구조조정자금 등을 확대 공급하였고, 貿易金融 融資單價를 종전 달러당 450원에서 네 차례에 걸쳐 650원으로 인상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다양하게 확충하였다.

동시에 중소기업의 상업어음 할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요건의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원시책에 힘입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계속 늘어나 전체 대출 중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 비중이 외국은행 국내지점·주택은행·농수축협 중앙회를 제외한 預金銀行의 경우 87년말의 43.0%에서 91년말에는 56.8%로 대폭 높아졌다.



中小企業의 애로 해소 위한 지원시책

91년 하반기 이후 경기부진 현상이 나타나면서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일부 기업의 경우 자금 사정의 어려움이 계속되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경제의 기조가 안정성장으로 전환되면서 이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의 자금부담이 가중되거나 경쟁력 저하에 따른 수출부진과 수입개방 및 내수진정에 따른 판매부진 등으로 在庫가 누적된 데 기인하고 있다. 일부 기업의 경우, 무리한 사업확장이나 부동산 투자 등으로 자금이 고정화된 것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92년중에 여러가지 지원시책을 마련 시행하였다.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상향조정

정부는 우선 전체 대출규모가 가장 많은 금융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市中銀行에 대하여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종전의 35%에서 45%로 상향조정하였다.

그리고, 작년 7월부터는 중소기업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이고 당면한 문제인 상업어음 할인이 최대한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업체별 상업어음 할인한도를 연간 받을 어음 실적의 3분의 1에서 연간 받을 어음 실적의 2분의 1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신용보증한도도 늘렸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개발 등 첨단기술 관련업종을 再割引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으나 경쟁력이 있고 사업전망이 밝은 유망기업을 중소기업조업을 중심으로 적극 발굴하여 은행을 통하여 2차에 걸쳐 5천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전망이 밝고 경쟁력은 있으나 설비자금의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2,5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자금대출시 담보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한편, 중소기업이 자금을 빌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가 擔保問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취급시, 금융기관이 담보로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의 범위를 運轉資金 등에 대해서도 시설자금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제3자 名義 부동산까지 허용하였다.

또한 신용보증지원이 지속적으로 확충되도록 保證財源을 확대하기 위하여 92년중에는 당초 政府出捐豫算 140억원 이외에 追更豫算을 통하여 1,500억원을 추가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였다. 93년에도 정부예산으로 1,500억원을 다시 출연하는 한편, 단자회사 및 종합금융회사로 하여금 120억원 수준을 출연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단자회사에 대하여 表紙팩토링어음制度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眞性어음의 매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팩토링어음 할인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보험회사의 중소기업 지원업무도 강화

한편, 보험회사의 업무에 있어서도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債券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동일인 발행 채권 인수한도인 10%를 초과하여 인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보험회사의 非上場 주식·채권 취득 등에 대해서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중소제조업체가 발행하는 無議決權 優先株에 대해서는 일정하고 이내에서 보험회사가 자유로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세부문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의 관세환급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簡易定額還給制度를 개선하여 적용대상 품목과 건당 수출금액을 확대하였다.

자금의 흐름을 개선하여 한정된 자금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에 중점지원되도록 계속 지도할 계획이며, 稅制支援에 있어서도 92년말에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92년도 사업실적분부터 2년 동안 소득세·법인세를 20~40% 경감해 줄 계획이다.

앞으로의 中小企業 支援方向

개방화·국제화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은 이제 국내외 시장을 불문하고 국내기업과의 경쟁을 넘어서 외국기업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개방화에 대응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중소기업의 생존 그 자체를 위해 선택적이라기보다는 필수적 전략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금리의 하향안정화를 계속 유도하여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기술개발 등 구조조정과 설비투자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또한 자금의 흐름을 개선하여 한정된 자금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에 중점지원되도록 계속 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稅制支援에 있어서도 92년말에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92년 사업 실적분부터 2년 동안 소득세·법인세를 20~40% 경감해 줄 계획이다.

그리고, 관세부문에 있어서도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과 고임금문제를 해결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되는 자동화기기·연구개발용 기자재 등에 대하여 관세감면을 이용해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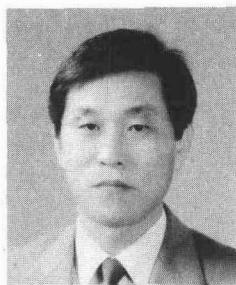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호협력의 강화

우리 경제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협력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고 정책과제로 다루어지게 된 것은 70년대 중반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즉, 중화학공업 육성시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보완적 기능을 인식하고 75년에 '中小企業系列化促進法'을 제정하게 되었고, 78년에는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의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대기업의 시장 침투에 대한 중소기업분야의 영역보호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까지 이 두 가지 제도적 장치가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호관계를 규정한 기본줄기를 형성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호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

여기서 우리는 대·중소기업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중적 인식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전자는 '상호보완과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후자는 '상호대립과 경쟁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前者는 소재생산과 가공분야의 분업체제로 또는 부품생산과 조립분야로 생산메카니즘이 구분되는 업종의 경우 현저하게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국민경제의 성숙도가 높아지고 산업구조의



김윤광

경제기획원 산업2과장

고도화가 진전됨에 따라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後者の 경우, 중소기업을 경제적 약자로 간주하고 지원·보호시책에 중점을 두는 인식을 근간으로 하여 지금까지의 산업정책 추진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국내외 여건변화로 약화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의 개방화로 기업의 경쟁관계가 국내의 대기업만이 아니라 외국의 同種企業 전체로 확산되고 있어 특정국가내의 기업간 대립 경쟁문제를 독립적으로 다룰 수 없게 되었다.

둘째, 기술혁신의 가속화와 수요의 개성화로 신제품의 생산주기가 짧아지고 소량다품종의 생산·판매가 주도하게 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민성·탄력성이 새로운 장점으로 부각되어 약자보 호논리가 퇴색하고 있다.

셋째,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로 기업간 분업이 기업규모별로 차별화되지 않고 제품기획·생산·판매·애프터서비스·홍보 등 기능별로 분화·통합되는 경향이 가속화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광범위하고도 복합적인 협력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 제품에 대한 국내외 시장의 수요가 高品質에 의한 차별화를 요구

하고 있어 완제품과 부품공동의 국제경쟁력 확보가 필수조건이 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대·중소기업이 공동체적인 協力製造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상호협력 실태와 현실적 제약요인

우리나라 대·중소기업의 상호협력 실태를 생산과 판매활동을 기준으로 보면, 70년대말까지 전체 중소기업체 중 25% 이하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가 80년대에 들어 활발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90년에는 도급거래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이 70%에 달하고 수급중소기업의 87.6%가 총판매액의 80% 이상을 도급거래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대·중소기업간의 자본 및 금융협력이나 기술협력은 5% 미만의 저조한 실정에 있다. 특히 자본협력의 경우 경제력집중 억제에 위한

우리 제품에 대한 국내외시장의 수요가 고품질에 의한 차별화를 요구하고 있어 완제품과 부품공동의 국제경쟁력 확보가 필수조건이 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대·중소기업이 공동체적인 협력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30大 系列企業群의 비관련업종에 대한 자본참여가 금지되어 왔는데다가 대기업들도 계열사 신설을 오히려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중소기업의 경우도 經營權 간섭 또는 침해를 우려하는 경향이 강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대·중소기업간 협력실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급거래

도급거래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해방 이후부터이나 70년대초까지만 해도 당시의 경공업 위주의 산업구조하에서 低級技術을 기초로 생산비 절감을 위한 단순노동분업형태가 중심을 이루었고, 따라서 斷續적인 하청관계와 수급중소기업간 과당경쟁을 초래하는 양상을 띠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섬유업종의 경우 노사분규의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도급거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도급거래를 장기적이고 계속적인 전문계열화로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指定系列化 업종품목을 지정운용해 온 것은 79년 이후부터이며, 당시 5개 업종 41개 품목에서 90년에는 42개 업종 1,160개 품목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83년부터는 모기업체 단위별로 총 118개에 이르는 수급기업체협의회를 구성하여 자금 및 세제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기계 및 장비제조업이 전체 품목의 97.3%를 차지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도급거래와 관련하여 ①모기업 측의 저렴한 주문단가 ②대금회수기간이 긴 점

〈표 1〉 중소기업의 수주기업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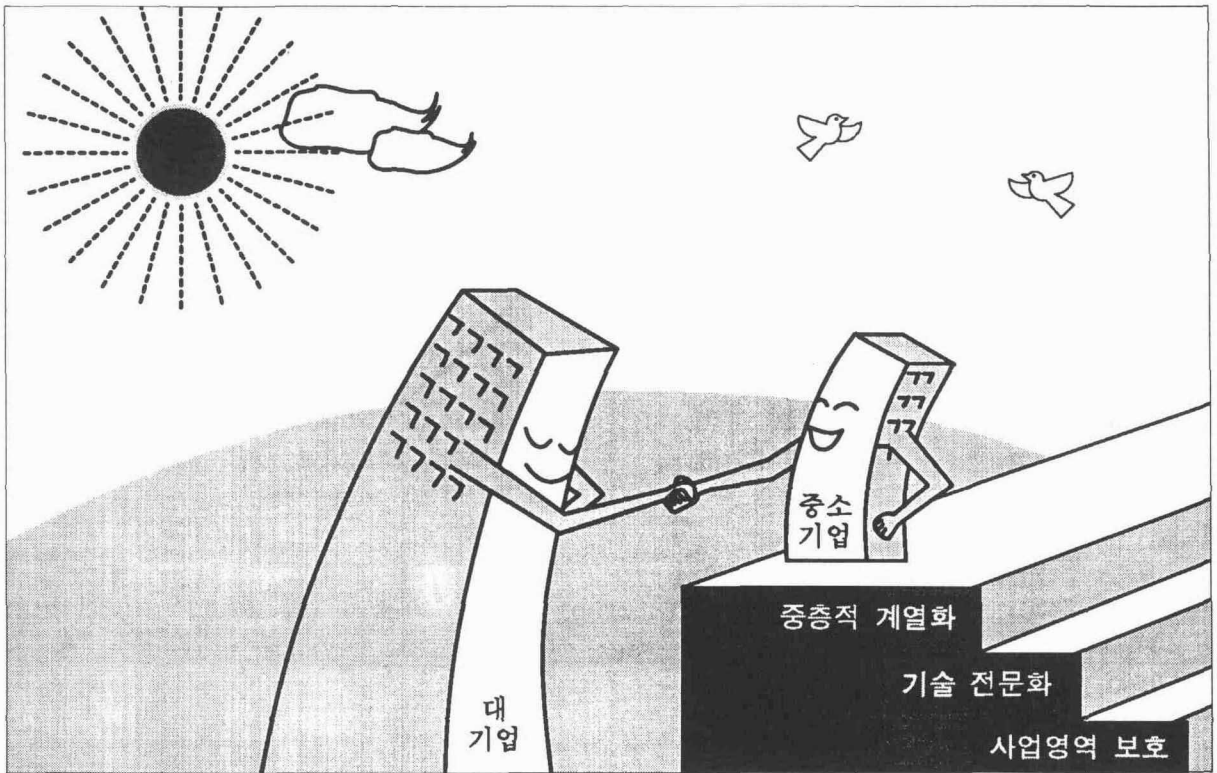
(단위 : %)

	71년	79년	89년
합 계	18.0	25.7	66.6
5~9인	10.1	14.0	55.2
10~19인	23.4	25.0	68.6
20~49인	30.3	29.3	74.4
50~99인	37.1	46.2	74.7
100~199인	48.6	46.9	67.8
200~299인	—	43.9	62.1

〈표 2〉 중소기업의 수주판매 비율

(단위 : %)

	71년	79년	89년
합 계	14.0	18.8	57.1
5~9인	5.6	12.4	60.2
10~19인	15.0	14.2	63.0
20~49인	20.8	21.3	63.1
50~99인	18.6	24.1	54.6
100~199인	11.0	19.1	56.4
200~299인	—	15.9	46.9



③60% 이상의 수급중소기업이 모기업으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이 현실적으로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급거래에 의한 기업분업의 이익이 공유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日本의 경우와 같은 본격적 협력관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는 건전한 도급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선결요건이라 할 수 있는 '상호신뢰관계의 형성'이 미흡하고 기술력 격차에 따른 '교섭력의 불평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본 및 금융협력

대기업의 수급중소기업에 대한 자본참여나 금융협력은 상호간 실질적 협력관계 구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생산 및 투자활동과 관련해서 이루어질 경우 상호간의 계획 경영을 가능케 하고 위험분산을 통해 경영안정에도 도움을 주는 긍정적 측면이 크다.

그러나 실제로 나타난 우리나라의 자본참여 실태는 매우 저조하여 모기업의 수급중소기업에 대한 참여가 7.8%, 수급기업의 모기업에 대한 참여가 1.9%에 불과하다. 금융협력도 주로 수급기업체협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그 대상도 원자재 구매자금 지원·선급금·협의회운영 지원·시설개체자금·신제품개발 순으로 되어 있어 단기적으로 일회성 성격이 강한 초보적 단계에 있다.

기술협력

일본에 비해 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기술협력분야인데, 우리의 경우 母企業의 일방적인 기술지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공동개발 형태는 미미한 수준에 있어 일본의 경우와 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기술협력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요인으로는 ①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이 낮아 전문기

술을 토대로 한 상호협력 생산이 이루어질 수 없는 점 ②중소기업의 시장보호를 위한 제도적 규제 및 조립대기업 제품의 경쟁정도가 낮아 경쟁에 직면한 공동운명체 의식이 공유되고 있지 않은 점 ③협력관계가 아직 성숙되지 못하여 신제품의 개발초기단계부터 共助體制의 여건조성이 미흡한 점 ④경영행태와 세제금융지원 장치들이 '부가가치' 기준이 아닌 '이윤' 중심으로 되어 있어 경쟁행태가 품질보다 가격 위주로 되는 사회적 분위기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89년 이후 모기업의 지원내용이 기술 및 경영지도로 이동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며 고무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현행 지원제도

도급거래의 촉진과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한 法的 장치로서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84.12)이 있는데, 이들 법률이 정부의 사전계획적이고 강제적인 개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대·중소기업간 자율적인 협력관계를 조성·심화시키는 기능은 다소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률들은 계열화품목의 지정과 수급협의체의 구성과 같은 제도적 운영장치와 함께 가장 중요한 지원수단으로 시행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예시해 보면, 먼저 금융지원으로는 수급기업체협의회 會員社들이 추천한 수급기업체에 대한 신용보증상의 우대 및 공동개

수급기업에 대한 母企業의 기술상 협력이나 자금지원 등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인 유인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중소기업간 기술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기술지도 기능 확충과 기반조성 강화를 통해 기술력을 제고함으로써 수급기업의 교섭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발사업에 대한 공업발전기금의 지원, 대기업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構造調整基金의 지원과 신용보증상의 우대, 계열화품목 생산업체와 공동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업체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자금(부품공업 육성자금) 지원 등이 있다.

또한 세제지원제도로서는, 모기업의 수급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국산기계 10%, 수입기계 3%), 모기업의 기술지도에 대한 損費 인정, 지정계열화품목의 창업시 법인세(3년간 100%, 그후 2년간 50%)·등록세 및 취득세(2년간 50%)·재산세(5년간 50%) 감면 등이 있다.

그리고 92년 4월부터 허용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10% 지분참여 조치에 이어 公正去來法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총자산의 40%)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93년 이후 수급기업체와 모기업이 공동출자하는 가칭 '공동기술개발 전담회사'의 설립을 검토할 계획이며, 연계보증제도의 활성화, 대기업 사업의 이양확대 방안 등도 함께 검토될 것이다.

<표 3> 조립대기업의 지원내용
(기계·금속장비 제조업의 경우)

(단위 : %)

연도	기술·경영지도	자금지원	원재료 제공	설비대여	기타	없음
80년	6.5	2.5	14.0	1.9	0.5	77.6
81년	6.3	16.6	10.1	1.9	0.1	73.0
83년	10.3	6.5	10.2	1.8	0.7	73.3
85년	18.7	2.2	17.1	2.0	1.2	65.4
87년	11.8	3.6	9.1	2.5	3.1	75.6
89년	19.8	5.3	16.8	6.1	0.7	62.1
90년	18.0	4.2	15.8	2.5	1.2	64.6

상호협력강화 방향

전문적·중층적 계열화 촉진

계열화의 진전상황이 단일 또는 몇개의 부품 공급위주 형태에서 벗어나 다기능 또는 복합부품 공급형태로 전환되어 갈 때, 수급중소기업이 모기업이 되어 제2차, 제3차 계열을 갖는 重層的 계열화 관계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수급기업에 대한 모기업의 기술상 협력이나

자금지원 등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인 유인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중소기업간 기술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기술지도기능 확충과 기반조성 강화를 통해 기술력을 제고함으로써 수급기업의 교섭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綜合商社의 역할제고를 추진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생산을 맡고 종합상사가 수출을 포함한 유통기능을 담당하여 해외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지도를 강화토록 수평분업적 협력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도 전문적 계열화의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계열화 촉진에 있어 현재 우리의 중소기업들은 경영상의 안정 및 중소기업 단독으로는 획득하기 어려운 각종 지원을 기대하고 있으므로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대·중소기업간의 지원기능이 원활하게 교류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小企業의 기술전문화 유도

계열화촉진에 있어 소기업의 경우 특히 열악한 환경에 있어 중소기업간은 물론 대기업과의 분업형성에 커다란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단순한 제조원이 절감이나 경기변동의 완충역할에 치우치고 있다. 따라서 소기업들에게 계열화를 통한 육성발전의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계열화 자체의 촉진을 위해서는 전문기술로 무장한 소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신용보증제도 또는 대금결제방식의 개선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의 개선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비롯한 사업영역의 보호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면도 크지만, 개방화추세에 부응하지 못하고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시 지속되기가 어려운 점도 없지 않으므로 점진적 축소 또는 폐지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비하여 이들

소기업들에게 계열화를 통한 육성발전의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계열화 자체의 촉진을 위해서는 전문기술로 무장한 소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신용보증제도 또는 대금결제방식의 개선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업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대기업과의 효율적인 분업협력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종래와는 다른 지원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대·중소기업간 협력강화의 요체는 중소기업이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을 넘어 우리 산업전체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는 분업체계를 이루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협력의 확대와 경쟁의 심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남원

경제정책자료 이용안내

경제정책자료 이용에 관해 궁금하신 점이나 자료의 열람·복사 및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다음의 경제자료안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전화

- 과천정부2청사 경제자료안내실
☎(02)502-2312
-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자료안내실
☎(02)316-3447
- 대전직할시 한밭도서관 경제자료안내실
☎(042)580-4414
- 충북도청 경제자료안내실
☎(0431)57-6559
- 전북경제사회연구원 경제자료안내실
☎(0652)253-2771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

— 인력수급 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

인류가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서 계속 진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인류문명의 미래와 관련하여 이미 18세기 말에 맬더스(Thomas Malthus)는 그의 예리한 분석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즉, 인구는 기하학적으로 증가하는데 토지자원의 유한성으로 인해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데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이른바 '수확체감의 법칙'이 그것이다. 그러나 1세기후인 19세기말에 영국의 인구는 100년전보다 4배나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사람들은 맬더스가 걱정했던 그 당시보다 훨씬 높은 생활수준을 즐기고 있었다.

인류의 진보가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맬더스流의 회의론은 그후에도 새로운 시각에서 제기되곤 하였으나, 1차대전후 1926년에 발표된 슈펜글러(Oswald Spengler)의 「서구의 몰락(The Decline of the West)」에서 다시 절정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슈펜글러가 살던 그 당시에는 그 어떤 합리적 예언가도 미국이 그후 50년 사이에 인구가 거의 두배가 되었음에도 1인당 국민소득(불변가격)은 두배반 이상으로 커져 1인당 실질소득 증가율이 인구증가율을 앞지르리라고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태용
상공부 산업진흥과장

슈펜글러의 오류는 인류문명의 진보가 한계에 이르는 시점을 잘못 짚었다는 데 있다기보다 서구문명의 진보를 가능하게 한 원동력과 그 힘을 과소평가한 데 있다. 즉, 서구의 기술진보와 그리고 지속적인 혁신(innovation)의 유발을 용이하게 하는 인간의 자유와 창의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 제도의 현실적응 능력에 대해 맬더스나 슈펜글러가 이를 과소평가했거나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인력수급구조가 국제경쟁력의 승패를 좌우

소재과학의 발달과 녹색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생명공학의 진보에 따라 생산의 요소 중 자연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다. 19세기 증기기관의 발명과 기차의 등장으로 철광석과 석탄은 영국의 國富를 결정하는 귀중한 자연자원이었다. 당시의 기술로는 1t의 철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석탄의 양은 필요한 철광석의 몇배가 되었기 때문에 제철소는 철광석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 아니라 탄광지역에 위치해야만 했다. 그러나 제철기술의 고도화는 석탄광이 없는 나라도 이제는 철강 생산국이 되었고 고도기술의 철강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 경제의 하이테크화·정보화·소프트화의 진전은 자본의 가치보다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기술발전의 가속화는 인력수급 구조의 고도화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의 양성과 개인의 능력 개발은 그 자체가 내포하는 규범적 가치 이상으로 기업과 학계 그리고 정부의 정책 결정자들 모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課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치열한 경제전쟁의 시대에 우리 상품이 가격경쟁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산현장의 노사관계·기업인의 관리·조직능력·효율적인 생산조직·지식의 축적·연구개발과 같은 인적자원의 質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비가격 경쟁력의 강화가 앞으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의 승패를 좌우하는 주요 요소가 될 것이다.

인력수급구조의 변화와 전망

경제 발전에 따른 물적 생산기반의 변화와 기술의 빠른 진보는 생활패턴·경제 참여활동 방식 등에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한다. 인력의 수급 측면에서 보면,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인력과잉의 시대에서 이제는 기업이 스스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훈련시켜야 하는 인력부족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즉, 국민소득의 증대, 경제의 서비스화, 산업구조의 조정 같은 국내 노동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인력수급구조도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1〉 경제활동 인구증가 추이(70년~90년)

(단위 : 연평균증가율, %)

	생산가능 인구 (15세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전 체
70~79년	3.4	3.9	1.9	3.8
80~89년	2.2	2.8	-4.0	2.5

자료 : 경제기획원, 『경제활동인구』, 각 연도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와 건설경기 안정화 시책의 추진을 통하여 人力的 제조업으로의 流入을 유도하고,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위하여 직업안정전산망을 확대하며 경제단체의 지역소재기업에 대한 취업정보 및 알선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中高齡層의 경제활동 참여 비중 증가하는 추세

인구 증가세가 둔화되고 15세에서 24세에 이르는 젊은층의 취학을 상승으로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율도 둔화 추세에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느 정도 완료됨에 따라 인력공급의 中核이라 할 수 있는 15~64세 연령층의 증가율이 70~75년에 연평균 3.4%의 증가를 피크로 80~85년에는 2.7%로 낮아져 그 증가세가 떨어지고 있다. 즉,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인구의 규모가 경제규모 및 경제성장 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70년대 중반 이후 문제가 돼온 과잉노동력의 문제가 완화되고 있다는 것은, 인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강화와 인력수급구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인력공급의 연령계층별 변화를 보면, 진학률의 상승으로 15~24세 연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중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 비중이 증대함에 따라, 노동력 공급시장은 인력의 고학력화와 고령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性別로는 여성의 출산력 저하, 핵가족화에 따른 가사노동의 부담 감소, 여성의 고학력화와 사회참여의식 확대 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0년 39%에서 90년에는 47%로 증가했으며, 남자와는 달리 20~24세 연령 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매우 빠른 증가를 보여준다. 미국(88년 68%), 일본(88년 58%) 등 선진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에 비추어 볼 때 우리도 인

력 구성의 여성화 추세가 앞으로 계속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低年齡層 인력공급 감소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심화 요인

이와 같은 저연령층 인력공급의 감소는 저연령층 노동력에 의존해 왔던 노동집약적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을 가중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여자의 경우에도 15~19세의 저연령층 경제활동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여 70년대까지 여성경제활동 인구의 약 20% 수준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90년에는 약 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섬유·봉제·신발·전기·전자 등 노동집약적 업종의 주요한 인력 공급원이었던 젊은 여성인력의 유입을 감소시키고, 열악한 근무조건과 함께 이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저연령층 인력의 공급감소와 함께 이들 인력의 고학력화 경향은 제조업 특히 중소기업 생산직의 인력난과 임금상승 압력을 가중시킴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의 산업인력 동향을 보면, 대기업의 취업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라는 인력수급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高學歷化 경향도 인력수급 불균형 야기하는 주요 요인

大卒者の 취업률은 매년 감소하여 92년에는 그 수준이 50%에도 이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전체 실업자 중의 4분의 1을 대졸자가 차지함으로써 80년에 전체의 8% 수준에 불과하던 실업비중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한편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은 15~16% 수준에 달해 인력난은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다. 우리의 인력양성 체계가 인문·사회계열 위주로 되어 있고 경제의 서비스화에 따른 제조업 기피현상으로 임금 및 근로조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그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기능 및 생산직의 경우 계획의 70% 수준만을 신규로 충원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자연계 출신 대졸 취업자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36%에 불과하며, 공대 졸업자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기술직의 경우 중소기업은 계획의 50%(92년)만을 신규채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학력자의 失業은 투자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저연령·저학력 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저하시켜 제조업 생산직 인력의 부족을 심화시키고, 고학력일수록 생산직보다는 사무·서비스직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의 인력배분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이다.

서비스업 선호추세로 제조업 취업자 감소

인력수요 측면에서 취업구조를 보면, 서비스업의 높은 소득탄력성의 결과로 80년 이후 산업의 서비스화 경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80년대 후반에 들어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반면 제조업 취업자의 증가율은 88년 이후 지속적으로 둔화추세에 있으며 92년 7월 현재 제조업 취업자가 475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제조업 취업자수의 감소는 신규 취업 인력의 서비스업 선호와 서비스업 부문의 젊은 신규인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데 기인한다. 즉 20~24세 연령층의 경우 경

〈표 2〉 성별·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단위 : %)

	남 자						여 자					
	평균	연 령 계 층 별					평균	연 령 계 층 별				
		15~19	20~24	25~49	50~59	60~69		15~19	20~24	25~49	50~59	60~69
70년	78	47	77	94	83	59	39	44	47	37	43	23
80년	76	27	76	96	85	64	43	34	54	36	53	32
90년	74	11	59	95	86	(50)	47	18	68	46	60	(26)

註 : 괄호 안은 60세 이상의 수치

자료 : 경제기획원, 『경제활동인구』, 각 연도

제활동 인구의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부문에서는 20~24세의 취업비중이 11% 내외의 일정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한편 55세 이상 연령층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에서 모두 85년 이후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력의 고령화와 함께 기업이 젊은 산업인력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령 노동력을 계속 고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기술직의 비중이 증가할 전망

직종별 취업구조의 추이를 보면, 중화학공업 부문의 성장 등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전문·기술직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의 기술집약화 확산으로 전문·기술직의 비중과 취업자수가 앞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생산 관련직은 高賃金과 人力難에 따른 생산자동화의 확산 등으로 그 증가율이 둔화되어 점차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인력 수급구조의 변화는 고용형태에도 영향을 미친다. 노동력 구성의 여성화와 고령화는 상용 근로자보다는 日雇나 시간제 취업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게 될 것이며, 기술발전의 빠른 변화는 인력·투자비용이 고정화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기업은 파견계약 등 단기간의 고용계약을 선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새로운 고용형태는 기혼여성 및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여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고용의 불완전성 등으로 상시고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성

중소제조업이 직면하고 있는 기술·생산직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업체의 수요와 연계한 인력양성체계의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따라서 현행 교육제도를 기술·기능교육을 중시하는 複線型 교육체제로 개편하여 현장 적응력이 강한 산업인력을 産·學협동으로 양성해 나가야 한다.

이 낮고, 失望 실업화할 잠재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들 비정규인력에 적합한 직종 및 고용형태의 개발, 근로환경의 조성 등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요망되고 있다.

인력수급의 원활화 방안

최근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의 인력난은 주로 생산관련직 부문의 인력부족에 기인하며 그 중에서도 단순생산직 및 숙련기능직의 부족률이 가장 큰 애로요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소제조업 중에서도 전기·전자제품, 섬유, 의복 및 가죽제품 제조업과 같은 노동집약적 업종과 기타 제조업의 경우와 같이 자동화나 기계화가 비교적 어려운 업종의 인력난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5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들은 평균 20% 이상의 인력부족률을 보이고 있어 직장의 안정성과 근로조건이 취약한 소규모 기업체의 취업을 근로자들이 기피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농공단지 소재업체와 같이 도시로부터 먼 거리에 위치한 기업일수록 인력난이 심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임금·근로조건·복지제도 등에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 인력의 고학력화에 따른 생산직 기피현상, 경제활동인구 중 젊은 연령층의 감소, 산업체의 수요와 연계되지 않은 교육 및 훈련체계 등등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표 3〉 산업별 취업자 증가추이

(단위: %, 전년 동기 대비)

	90년	91년	92년 1~7월
全産業	3.0	3.0	1.5
제조업	0.1	1.8	-3.4
서비스 (SOC 및 기타)	7.1	6.7	5.5
농림어업	-3.7	-5.7	-3.4

자료: 통계청

中小企業의 人力難 어떻게 풀것인가?

1992.5.11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취업가능한 비정규인력 산업현장으로 유인

우선 단기적 대책으로는 생산직 인력난과 그로 인한 제조업의 空洞化를 방지하기 위하여 활용 가능한 비정규 可用人力을 최대한 산업현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시장여건의 조성과 제도적 장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주부 등 여성인력·고령자·비진학청소년·군인력 등과 같은 취업 가능한 비정규인력에 대한 기업 및 직업교육훈련기관의 단기직업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이들 기업 및 인력 양성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과 직업훈련비용 인정범위의 확대, 세제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工團 및 저소득층지역에 대한 탁아소 등 보육시설의 증설을 위해 재정지원을 확충하고 기업의 보육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법

위 확대, 유치원의 終日制 전환 유도 등으로 여성인력의 육아부담을 덜어주어야 하며, 여성에게 적합한 직무의 개발로 여성의 고용기회를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

여성이나 고령인력의 적극 활용을 위해서는 이들에게 적합한 시간제 취업이나 신축적 근무제와 같은 고용관행의 정착과 제도적 알선 및 보호장치의 마련, 정년제나 재고용제도의 정비를 강구해 나가야 한다. 또한 兵役特例대상자에 대한 중소기업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자에 대한 복무기간의 단축, 병역특례연구요원의 자격완화 등이 필요하다.

製造業으로의 인력유입 유도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와 건설경기 안정화 시책의 추진을 통하여 人力의 제

조업으로의 流入을 유도하고,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위하여 직업안정전산망의 확대 및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과 같은 경제단체의 지역소재기업에 대한 취업정보 및 알선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중소기업은 자본·기술·인력면에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으므로 이러한 취약점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共同化, 네트워크화 및 지역적 特化가 필요하다. 조합단위의 공동기술훈련원, 기술전문대학의 설치, 중소기업연수원의 지역별 설치의 확대, 기술자 풀(pool)제도,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산·학 협동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그리고 공동개발·판매 등 공동사업의 활성화는 중소기업의 기술·기능인력난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기업의 인사제도 혁신을 통해 기술·기능인에 대한 처우가 사무직보다 소홀하지 않도록 승진·임금 및 직급체계 등의 개편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술·기능직 근로자도 관리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생산직근로자가 의욕과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산업체의 수요와 연계한 인력양성체계 확립

현재 산업계 특히, 중소제조업이 직면하고 있는 기술·생산직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업체의 수요와 연계한 인력양성체계의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현행 인문·사회계열 위주의 單線型 교육체계와 이론중심의 교과과정·교육방법으로는, 대학 진학을 위해 매년 40여만명의 재수생이 유동화하고 대학졸업자의 30% 이상이 자기 전공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취업재수를 해야 하는 인적자원의 낭비와 수급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장기적인 비전과 관계전문가의 중지를 수렴하여 현행 교육제도를 기술·기능교육을 중시하는 複線型 교육체계로 개편하여 현장 적응력이 강한 산업인력을 產·學협동으로 양성해 나가야 한다.

저연령층 인력의 공급감소와 함께 이들 인력의 고학력화 경향은 제조업 특히 중소제조업 생산직의 인력난과 임금상승 압력을 가중시킴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직업교육 및 훈련제도도 산업계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도록 공업고등학교 교육 및 직업훈련제도를 실기·실습위주로 개편하고, 직업교육과정의 다원화, 산업인력에 대한 평생교육 기회의 제공, 기업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획기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생산자동화 통해 인력절감 촉진

생산자동화를 통한 인력절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低利의 자동화설비 구입자금을 확대하고,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핵심설비 및 부품에 대한 관세감면 등의 세제지원 조치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제조업체의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야간대학이나 전문대학 등의 입학 우선권 확대 등 稅制·주택·교육기회 등에 있어서 우대하는 방안을 확충해 나가고, 중소제조업체의 신규취업자에 대한 일정기간 소득세 면제조치 등을 강구하여 중소제조업으로의 인력유인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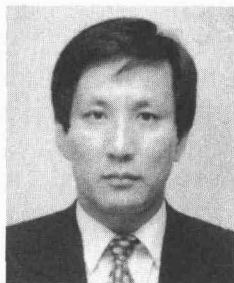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인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기술집약화를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원활한 수급 및 질적 고도화가 시급한 실정이며, 인력양성 및 개발은 그 外部經濟의 효과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산업체의 기술대학 운용, 중소기업의 기술훈련 및 훈련시설 투자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금조성 등을 통하여 재정적인 보조와 지원을 하는 방안도 범정부적 차원에서 검토해 나갈 것이다. 나라경제

중소기업 창업의 활성화

최근 우리 경제가 안정인가 침체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다. 지난 5년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보면 연평균 10% 수준이다. 그러나 작년기준 1/4분기중에는 7.4%, 2/4분기중에는 6%, 3/4분기중에는 3% 수준으로 떨어지는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그동안 과열되었던 建設景氣 등을 진정시키며 안정 속에서 성장을 추구한다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기조는 당연히 경제주체의 하나인 기업에 그 영향을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설비투자의 부진현상을 들 수 있다. 91년에 12.8%이던 설비투자 증가율이 92년 1/4분기에는 8.6%, 2/4분기에는 4.3%, 3/4분기에는 마이너스 3.2%로 하락하였다. 또한 이러한 성장의 둔화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으로 인한 부도증가를 초래하였다. 월평균 부도업체수가 91년의 경우 513개 업체였으나 92년 9월에는 840여개 업체로 급증한 반면, 創業動向의 指標라고 할 수 있는 법인의 설립증가율은 91년의 34.5%에서 92년 9월에는 1.8% 증가에 머물렀다.

이러한 설비투자와 창업의 부진은 물가안정과 무역수지 개선 등의 일시적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공급능력이 위축되어 가는 경제안정은 경제의 악순환을 의미하



홍순직

상공부 창업지원과장

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통화를 증발하여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현상은 우리 경제가 고속성장장에서 저성장으로 진입하는 신호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高成長時代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만큼 경제전략도 低成長期에 맞게끔 변화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 예로 과거와 같이 무리한 수출드라이브 정책에 의한 수출증대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物價·資金의 흐름 등의 부정적 효과도 큰 것이다. 특히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출을 늘리면 될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수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국제수지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수출 한 단위에 의한 수입의 크기를 나타내는 수입유발계수를 보면 일본이 0.078인 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0.347로서 수출에 따르는 수입유발효과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수출품 생산에 소요되는 부품 및 중간재의 해외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부품 및 중간재의 국산화를 통한 수입 대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수지 개선에 중소기업의 역할 개요

이러한 부품 및 중간재의 국산화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부품 및 중간재 하나 하나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창업이 활발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부품이나 중간재는 그 특성상 수입규제나 통상마찰을 야기할 소지도 비교적 적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춘 良質의 부품을 생산한다면 수입대체뿐만 아니라 수출도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부품 및 중간재의 국산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창업이야말로 국제수지 개선 및 조립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 우리 산업구조의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득증대와 함께 소비자의 욕구가 점차 다양해지고 시장이 점차 세분화됨에 따라 기존의 대기업 중심의 대량생산 방식으로는 욕구충족이 어렵고 더욱이 앞으로 소비자 욕구는 보다 더 소프트化·감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보다 탄력적인 중소기업형 제품시장의 확대를 예고하는 것인만큼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새로운 技術集約型 중소기업의 창업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중소기업 창업자를 위한 창업절차의 간소화, 자금 및 세제지원, 창업기업보육센터의 설립과 운영 그리고 創業中小企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용역 지원 등 획기적인 중소기업 창업촉진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政策基調는 새 대통령이 새로운 행정부를 구성한 이후에도 보다 더 강화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된다.

중소기업 창업절차의 간소화

일반적으로 창업절차란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기까지의 절차로서 狹義로는 단순히 법인을 설립하기까지의 절차를, 廣義로는 공장건물이 완성되고 가동되기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商法에서는 開業할 때까지 즉, 후자의 개념에 가깝고,

창업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등은 창업사업계획 승인 하나로 일괄 의제처리가 되도록 지난 12월 정기 국회에서 創業支援法을 개정하여 의제처리대상을 17개법에 의한 26개 인·허가에서, 23개법에 의한 38개 인·허가로 확대 조치한 바 있으며, 이를 완벽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세부관련규정 및 지침을 개정·보완할 방침이다.

기업회계에서는 양자를 분리해서 이해하고 있다. 창업절차 간소화 측면에서는 그 범위를 후자의 개념을 채택하고 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공장부지를 확보하고자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만약 그 토지에 농지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農地轉用許可를 받아야 하며, 또한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창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認·許可 신고 등은 23개 법률에 의한 38개에 달하고 있다. 물론 창업자가 반드시 이 모든 인·허가를 받는 것은 아니고 입지나 업종에 따라 해당되는 인·허가만 받으면 되지만, 창업과 관련하여 10~20여개의 인·허가를 받으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지 않다.

창업관련 각종 인·허가

사업계획 승인 하나로 일괄 의제처리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創業支援法에서는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얻으면 창업과 관련한 여러개의 인·허가를 일괄승인받은 것으로 擬制처리하도록 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창업절차를 보다더 간소화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그 주원인은 창업자가 창업사업계획 승인 이외에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처리에 6개월 내지 1년이 소요되고



市·郡 및 道를 여러번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창업자가 창업과 관련한 행정적인 절차문제로 인하여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거나 기업의 의욕이 좌절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창업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등은 창업사업계획 승인 하나로 일괄 의제처리가 되도록 지난 12월 정기국회에서 창업지원법을 개정하여 의제처리대상을 17개법에 의한 26개 인·허가에서, 23개법에 의한 38개 인·허가로 확대조치한 바 있으며, 이를 완벽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세부관련규정 및 지침을 개정·보완할 방침이다.

市·道の 인·허가 권한 市·郡·區에 재위임

아울러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각 시·군·구가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처리를 위한 道와의 협의절차를 생략하거나 단축하기 위하여 시·도가 가지고 있는 창업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권한을 시·군·구에 재위임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의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또 하나의 주요한 원인은, 여러개의 인·

허가를 同申請書 하나로 일괄 의제처리하게 되어 있어 기재항목이 많고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 창업자가 신청서를 미비하게 작성·제출하는 경우, 시·군·구로부터 수차례에 걸친 서류보완 요청을 받게 되어 그 처리기간이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창업사업계획 승인에 의거, 승인되는 각종 인·허가별로 인·허가 대상 및 기준 등을 상세히 기재한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작성요령을 油印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각부처에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기준 등을 개별적으로 시행령이나 규칙, 고시·공고 등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가칭 '창업사업계획 승인업무처리에 관한 통합지침'으로 통합조정 고시하여, 이 통합고시만 보면 창업사업계획 승인대상과 기준절차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업무효율을 높여나갈 것이다.

또한 창업자가 창업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창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창업절차 대행을 중소기업상담회사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창업절차 대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부가 1백만원 범위내에서 50%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창업자에 대한 자금 및 세제지원

창업단계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자금 문제이다. 기존업체의 경우에는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은행이 있고 또한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영업실적을 기초로 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자금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창업기업인 경우에는 일반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는 것이 현재의 금융관행상으로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투자회사의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따라서 금년에는 기술과 사업성만 보고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투자회사의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활동을 보다 더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투자회사의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실적에 따른 創業支援基金의 지속적인 융자와 투자대상 업종의 확대, 투자회사의 합병 등을 통한 대형화로 투자재원 확충 및 투자를 촉진하여 금년도에 2천5백억원 정도의 자금을 창업기업에 투자토록 유인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자에게 장기적으로 융자·지원을 하고 있는 창업조성자금도 금년도에 전년도 수준을 상회하는 480억원을 융자할 계획이다. 특히 종래에는 同資金의 융자·지원을 시중 금융기관이 대행한 결과 담보위주의 융자에 치우쳐 사업성은 있지만 담보가 미약한 업체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중소기업振興公團이 직접 융자를 취급토록 하여 융통성 있게 자금을 융자·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은행·국민은행 등 4개 중소기업 전담은행을 통한 자금지원도 92년 수준을 상회하는 2천억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세제지원의 대상과 폭을 확대

창업자가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지원제도는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각종 租稅減免制度이다. 현재 창업자에게 주고 있는 세제혜택을 보면, 먼저 소득세와

투자회사의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실적에 따른 창업지원기금의 지속적인 융자와 투자대상 업종의 확대, 투자회사의 합병 등을 통한 대형화로 투자재원 확충 및 투자를 촉진하여 금년도 2천5백억원 정도의 자금을 창업기업에 투자토록 유인할 계획이다.

법인세의 경우 창업연도 및 그후 3년간은 해당세액의 100%를 감면하고, 다시 그후 2년간은 해당세액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다만, 수도권 지역의 경우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연도 및 그후 3년간은 해당세액의 50%를, 그후 2년간은 30%를 감면하여 수도권 이외의 지역과 감면비율에 있어서 차등을 두고 있다.

이 외에도 등록세·취득세의 경우, 創業日로부터 2년 동안 稅額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재산세·종합토지세도 창업일로부터 5년간 해당세액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금년도에는 법인세나 소득세가 3년간 100% 감면되는 농어촌지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市단위 지역이 종전 19개 지역에서 34개 지역으로 확대되어 그만큼 세제지원의 대상과 폭이 늘어나게 된다.

한편 장외등록법인이 소액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을 종전에는 25% 원천징수후 종합과세 하였으나, 금년부터는 20% 원천 분리과세하여 장외등록된 법인의 주식거래가 원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유망한 중소 창업업체들이 場外市場을 통해 직접금융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금년도에도 중소기업 창업자들이 각종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제지원에 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창업자들에게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세제지원책을 꾸준히 발굴·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창업기업보육센터의 설립·운영

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하고 창업기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창업기업보육센터를 설립·운영할 계획이다. 이 센터는 기술 및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 및 장소, 시설 확보의 어려움과 경영관리 능력의 미흡 등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예비자를 대상으로 작업장(공장)과 공작기기·실험용기기·컴퓨터 등 범용제조설비와 자료실, 사무설비 등 창업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제공함과 아울러 경영·기술 및 세무에 대한 상담과 행정지원 등을 함으로써 창업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이고 창업분위기를 확산시켜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원활한 성장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지원센터이다.

창업예비자가 동센터에 입주하여 試製品을 실제로 제작하여 가격과 품질·성능 등에서 경쟁력이 있고 市場性이 확실한 경우에 창업을 하게 함으로써 창업을 쉽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의 성공률을 높게 되는 것이다. 이 센터는 금년도에 1차적으로 공공기관과 민간분야에서 각각 1개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사업주체가 되어 同工團의 안산 연수원 부지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창업기업보육센터를 건립, 금년 11월에 완공할 계획이다. 동센터에는 중소기업의 기술지도를 위하여 연수원이 既確保하고 있는 약 10억원 상당의 각종 기자재와 상당수의 기술자 및 기숙사를 창업예비자가 공동활용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입주하는 창업예비자에 대해서는 創業造成資金의 지원과 아울러 희망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건설·운영하고 있는 공장아파트에 우선 입주도록 할 것이다.

민간분야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창업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 충청북지역이기 때문에 충청북도 영동지역에 중소기업 상담회사를 창업기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하여 보육센터를 건설·운용토록 할 방침이다. 동센터에도 창업예비자가 필요로 하는 범용시설과 행정서비스

지원체제를 갖추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동센터를 졸업하는 창업예비자에 대해서도 창업조성자금의 지원과 아울러 현재 농촌에 廢校된 국민학교의 遊休施設을 활용토록 알선할 방침이다.

이러한 창업기업보육센터는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건설·운영해 보고, 그 결과를 평가·분석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창업자의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의 개선

중소기업의 창업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계속 성장·발전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유망한 중소기업의 창업이다.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업이 부실화되거나 도산하는 경우에는 창업자의 부담은 두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 부담도 큰 것이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기업경영환경 변화를 중장기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유망한 중소기업이 창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창업예비자의 창업사업계획에 대해 현실적이고 심층적인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현재 상담회사가 창업자의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을 제공하여 창업자가 창업을 한 경우에는 동용역비에 대해 정부가 5백만원 범위내에서 50%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동제도의 운영이 실질적인 사업타당성 검토보다는 용역비 산출을 위한 형식적인 면이 없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업타당성 범위를 사업의 경제성과 전망뿐만 아니라 동사업 추진과 관련한 각종 實定法에 대한 검토와 그 절차, 입지의 적합성 여부, 자금조달 규모와 그 방법의 타당성과 실현성 여부, 담보능력, 나아가서는 기술수준의 국제비교, 국제경쟁력의 비교·분석 등을 포함토록 하여 상담회사가 제공한 용역이 중소기업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사업타당성 검토용역 내용을 보완하고 상담회사가 제공한 용역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예비자가 창업을 하여 정상적인 가동이 될 때까지 상담회사가 지원하는 체제를 갖

추도록 할 것이다.

창업은 모든 필요한 조건이 충족돼야 가능

훌륭한 하나의 영화작품은 훌륭한 시나리오와 연기자 및 감독, 음악과 효과, 이를 관람하는 관객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망한 중소기업이 창업되어 훌륭한 기업으로 성장·발전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이 시장성이 있고 생산기술과 품질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아울러 이를 실현시키는 데 필요한 人的·物的 자원의 동원계획이 건전하면서 완벽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가는 기업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임과 아울러 감독자로서 진취적이면서 변화되는 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노사화합과 기술개발 등 기업경영을 총괄·조정하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질이 있어야 함은 물론 마케팅 능력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에 근무하는 기술자와 근로자는 기업목표 달성을 위하여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

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하고 창업기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창업기업보육센터를 설립·운영할 계획이다. 이 센터는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예비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제공함과 아울러 경영·기술 및 세무에 대한 상담과 행정지원 등을 하게 된다.

기술개발, 창의력 등 자기능력을 기업을 위하여 최대한 발휘하는 훌륭한 연기자로서 역할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가와 근로자가 합심하여, 단순히 하나의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과 품질·기능·디자인·자금조달과 판매전략·창의력과 정성 등 이 모든 것이 융합하여 하나의 예술작품을 창출한다는 신념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정부나 금융기관 등이 세제와 자금을 지원하고 이러한 기업을 우리 소비자가 우러러보고 존경하며, 사랑하는 풍토가 조성될 때 세계적 기업이라는 작품이 완성될 것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시책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우리 경제가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성장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설비투자도 부진하다. 91년에 8.4%의 고율성장을 나타냈던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92년 들어 1/4분기에는 7.4%, 2/4분기에는 6%대로 계속 감소 추세를 보여왔다. 더욱이나 3/4분기에는 이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3.1%의 낮은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81년 이래 11년 만의 최저 수준이다. 2000년대를 대비하는 7차 5개년계획의 평균 성장률 목표가 7%선이고 보면, 지금 우리 경제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중소기업 침체로 우리 경제 어려움 더해

또한 앞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가늠할 수 있는 설비투자 증가율 역시 좋지 않다. 92년 1~9월까지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91년 같은 기간에 비해 3% 증가에 그치고 있으며, 92년 3/4분기에 있어서는 전년동기에 비해 3.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91년의 설비투자 증가율 12.8%에 비하면 많은 차이가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정부의 안정화시책에 힘입어 물가와 국제수지 적자가 다소 개선된 점이라 할 수 있겠으나 우리의 수출시장이 아직도 침체되



김청성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정책연구실장

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할 만하다.

우리 경제가 이와 같이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것은 지난날 우리 경제의 발전과정에서 산업의 저변을 구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을 소홀히 한 것도 한 원인이다.

중소기업의 당면 애로점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중소기업이 겪는 애로는 더욱 심해진다. 중소기업은 자금 조달능력, 인력 확보, 입지확보 등에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할 뿐만 아니라 기술력·정보력 등에서도 열세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자금난으로 경영 압박

현재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금난이다.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의무 대출비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비율은 계속 증가되고 있으나, 절대공급량의 부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으로 말미암아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상대가 약한 중소기업으로서 금융기관 이용이 결코 수월하지 않으며 대출

시에다 일정액의 적금을 들어야 하는 등 애로가 많다.

이 밖에도 거래 母企業과의 관계에서조차 불리한 점을 안고 있어 중소기업 자금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사한 분기별 경영실태 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이 원자재를 구입할 때에는 현금구입이 57.7%로 되어 있고 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현금보다는 외상 판매의 비중이 66.8%로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외상대금의 결제기간에 있어서도 구입시에는 3개월 이상이 51.5%이나 판매대금의 결제에 있어서는 66.0%로 높아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기술 및 기능직 인력난 매우 심각

다음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부문이 인력문제이다. 중소기업 생산현장에서는 지난 80년대 후반 이후의 급격한 임금인상과 근로자들의 생산직 기피 등으로 기술 및 기능직의 인력난이 매우 심각하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사에 의하면 91년도의 중소기업 기술 및 기능직 인력부족률은 전체 근로자의 25.7%인 36만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로 인한 생산차질이 엄청나다. 이로 인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이 낮고 기능공의 잦은 이직으로 기술축적이 되지 않아 기술향상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휴·폐업 업체 늘어나

이와 같은 애로사항을 견디지 못하여 중소기업은 생산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휴업이나 폐업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사에 의하면 조합원 2만여 업체 중 80% 이상 정상조업을 하고 있는 업체의 비율이 92년 9월 현재 82.5%로서 전년 同月の 85.1%에 비해 2.6%포인트 하락하고 있으며 휴·폐업 업체수도 증가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의 발표에 의하면 중소기업은 91년에 6,159개 업체가 도산한 데 이어 92년에도 8월까

현재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금난이다.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의무대출비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비율은 계속 증가되고 있으나, 절대공급량의 부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지 91년보다 많은 6,594개사가 이미 도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원시책과 문제점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력을 바탕으로 우리 산업의 효율성 제고와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92년도에 여러 차례에 걸쳐 금융 및 세제상의 특별지원 대책을 강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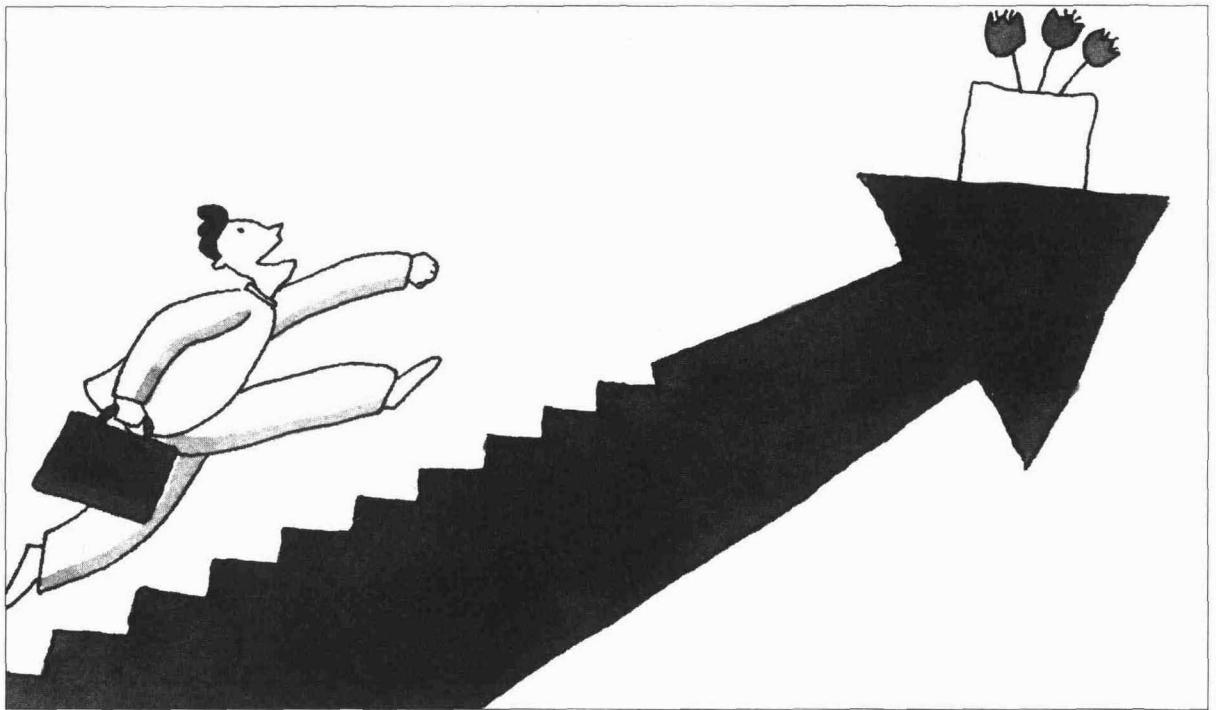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및 세제지원

먼저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긴급자금 5천억원을 방출하였으며,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조달원천인 상업어음의 경우, 한국은행 재할인 비율 70%를 92년 12월까지 연장하고 업체의 상업어음 할인한도를 연간 받을 어음의 2분의 1까지로 확대하고 진성어음에 한해서는 전액 할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담보 부족에 따른 대출상의 애로를 고려하여 運轉資金을 이용할 경우, 제3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제지원으로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임시 특별세금 경감조치로서 중소기업에 대해 향후 2년간, 법인의 경우는 과세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40%까지 경감하고, 1억원 초과시에는 20%까지 경감하였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소득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0%, 과세소득 5천만원 이상의 경우는 20%까지 경감된다.

또한 유망 중소기업과, 기계류·부품·소재 개



발업체 등 17만2천여 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였다.

인력난 완화 위해 외국인 인력 활용 조치도

인력난의 완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자동화 설비자금 지원과 함께 인력활용책으로서 염색·도금·열처리 등 10개 업종에 대해 1만명 한도 내에서 상공부장관이 추천하는 경우 연수목적의 외국인 인력활용이 가능토록 하고, 병역특례 조치로서 중소기업체에서 복무하는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다.

중소기업 범위 재조정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이 극히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92년 9월 1일로 해제 예시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보완하여 58개의 예시품목을 2년간 연장 조치하였으며, 경제규모의 확대와 자동화 투자 증가를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도 재조정하여 자산규모의 상한을 현행의 300억원에서 600억원까지 확대하고 종업원 기준

도 일부 조정하였다.

93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

한편 93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2천년대 선진경제 진입을 위한 핵심 주체로서 중소기업의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중소기업의 자립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영애로 극복을 위한 각종 지원을 병행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중점 추진과제는 ① 중소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의 확대 ② 자금·인력·입지 등의 공급원활화를 통한 경영안정 도모 ③ 대기업·중소기업간 실질적 협력 증진 ④ 개방가속화에 부응한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 및 각종지원제도

의 정비 ⑤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의 발굴 및 지방 중소기업의 본격 육성 ⑥ 중소기업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대책의 수립 등이다.

정부의 지원내용 현실과 괴리 커

그러나 이러한 수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기업자들은 흡족하게 여기지를 못한다. 왜냐하면 제반 지원내용이 극히 일부 중소기업에만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너무 구조조정에만 치우친 나머지 현재의 급박한 중소기업 경영사정을 다소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중소기업이 많다.

또한 당국의 조치를 믿고 은행에 가보아도 은행은 財源이 없어서 대출을 못해 주겠다는 것이고, 업계로서는 담보가 부족하여 여전히 은행자금 이용에는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간의 협의와 협조로 인하여 지원대책이 발표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정작 대책이 발표되었을 때에는 업계의 사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 발표된 시책들도 부처간의 협조부족으로 실천되지 못한 점이 많아 시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문제의 하나로 지적해 두고자 한다.

중소기업 활성화 시책에 대한 업계의 요망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긴급 경영안정 대책 긴요

첫째, 도산방지를 위한 긴급 경영안정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현재 중소기업의 부도는 산업구조조정기의 한계기업의 퇴출로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으나 업계가 인식하고 있기는 유망한 중소기업이 제때에 자금을 공급받지 못하여 쓰러지는 경우도 많다. 또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금의 한계 때문

에 자금을 선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용상에 애로가 많고 적기에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부도가 늘어 나면서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고 있다. 따라서 93년도 육성시책에서도 구조조정자금 중 일부를 경영안정자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조속한 경영안정 대책이 필요하다.

小企業에 대한 특별대책 있어야

둘째는, 소기업에 대한 특별대책이 있어야 하겠다. 현재 중소기업의 86%에 해당하는 15만개의 중소기업이 종업원 20인 미만의 소기업이다. 소기업은 그동안 정부의 시책에서도 많은 혜택을 입지 못하였다. 따라서 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의무대출비율 설정과 함께 소기업에 대한 특별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자율적 경영활동 보장해야

셋째는, 행정규제 완화를 통한 자율적 경영활동의 보장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행정규제 과제를 발굴하여 완화에 주력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규제완화의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구체적인 규정·예규·통첩·고시·행정명령 등의 후속 조치가 없어 일선 창구에서 완화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지원행정기구 확대해야

넷째로는, 중소기업 지원행정기구의 확대이다. 현재 중소기업 문제는 주무국이 상공부 중소기업국으로 되어 있으나 조직 및 예산의 정체로 경제·사회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다양한 중소기업 문제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정책수립 기능의 강화와 이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서는 지원행정기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남광

특 별 기 획

클린턴 신행정부의 출범과 우리의 대응

총체적 생산성향상의 극대화에 최우선순위 두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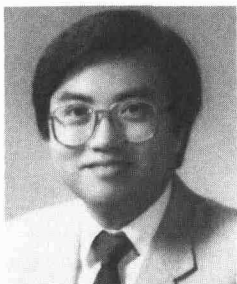
지난해 11월 3일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클린턴후보가 공화당의 부시후보를 상당한 표차이로 누르고 당선됨으로써 현재 미국은 새로운 지도력하에서 새로운 경제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시大統領은 규제완화·減稅 등 경쟁촉진과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레이거노믹스'의 경제노선을 지켜나가고 냉전을 종식시키는 등 나름대로의 업적을 쌓았으나, 그의 재임기간중 악화된 경제사정을 개선시킬 만한 뚜렷한 비전을 국민 앞에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낙선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새로운 대통령 클린턴의 경제정책은 어떤 것이며, 향후 미국경제 및 세계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또한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클린턴의 경제정책기조

지난 미국의 대통령선거에서 클



박원암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린턴후보가 승리함으로써 美國의 경제정책은 70년대 이후 대체로 10년을 週期로 크게 변화한 셈이 되었다.

70년대에는 두차례의 석유과동으로 미국경제가 심한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美政府는 임금 및 물가상승의 억제 등 과도한 市場介入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80년대에는 성장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규제완화, 작은 정부, 減稅를 주내용으로 하는 新保守主義의인 '레이거노믹스'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레이거노믹스'도 과다한 군사비 지출 등에 의한 財政赤字의 누적, 빈부격

차의 심화, 財테크에 따른 과소비와 산업구조 왜곡으로 한계에 부딪히게 되자 90년대에는 戰後世代에 의한 새로운 경제정책인 '클린턴노믹스'가 등장하게 되었다.

경쟁력 강화에 중점 둔

국민제일주의 추구

'클린턴-고어'팀에 의한 '클린턴노믹스'의 기본이념은 한마디로 말해 競爭力 強化에 중점을 둔 國民第一主義(Putting People First)이다. 그러나 그들은 정부의 간섭이나 시장경쟁이나라는 이데올로기적인 논쟁에는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세계의 盟主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도 않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종전과 같이 企業 위주의 경제정책을 펴기보다는 국민들을 일하게 하기 위한 각종 국가재건사업을 추진하며, 교육 및 훈련대책을 강화하여 自國 근로자의 質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社會間接資本 投資를 통한 산업 기반시설 확충을 도모함으로써 특히 고부가가치 상품

을 생산하는 세계적인 기업을 적극 유치하려는 것이다.

즉, 국경이 사라져가고 있는 세계경제에서 기업은 그들의 생산활동을 어느 한 국가에 한정하지 않으므로 세금의 경감이나 공공지출의 삭감을 통한 민간투자의 활성화가 반드시 國內投資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財源은 고소득계층에 대한 누진적 과세, 脫漏稅源의 발굴 및 군사비 지출의 감축으로 조달하려는 것이다.

클린턴 경제정책의 期待效果와 문제점

클린턴 경제정책의 핵심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公共投資 확대, 정부의 행정비용·정보비의 절감과 부유층에 대한 과세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財政·租稅政策에 있다.

향후 4년간 경제활성화, 근로자 지원 및 平生教育 지원을 위하여 재정지출을 2천억달러 이상 늘릴 것이나 정부지출 축소, 공정과세 및 기업의 탈세방지로 약 3천억달러의 재정적자 개선요인을 마련하여 4년 후에는 현재의 재정적자 규모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財政赤字의 대폭 감축계획은 대단히 불확실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케인즈'식의 재정지출 확대가 경기부양을 위해 유효한 정책인가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현재 미국경제가 6조달러 규모이며 매년 500억달러 규모의 추가 지출이 총재정지출의 3%를 밑돌

총체적 생산성 향상의 극대화를 위한 제반여건의 조성에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산업구조조정을 추진해야만 한다.

先進型 産業構造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教育과 기술개발투자를 늘려야 한다.

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정도의 지출증대로 어느 정도의 活力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한편 稅收面에서는 고소득층에 대한 增稅와 중산층에 대한 減稅가 동시에 추진되어 稅收增大 효과는 크지 않을 수도 있다.

美國의 경제예측기관인 WEFA는 최근 전망에서 미국의 재정지출은 93년과 94년에 부시 재집권시보다 각각 3%포인트 및 1%포인트씩 증가해 미국의 경제성장이 0.1%포인트 및 0.3%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보았다. 한편 재정적자의 단기적인 확대에 의한 수요팽창으로 장기금리가 93년과 94년에 각각 0.3%포인트씩 추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94년 이후에는 미약하나마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추가 물가상승 효과를 전망하였다.

또한 稅收는 크게 증대되지 않을 것으로 보았으며 이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95년에는 재정지출이 오히려 약 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결국 WEFA는 클린턴 재정·조세정책의 보다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클린턴 新政府下에서도 재정적자가 쉽사리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향후 美國經濟의 전망과 우리의 대응

競爭力強化와 國民第一主義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클린턴의 경제정책은 확실히 새로운 것이다. 그것은 과거의 자유방임주의적인 사고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國民과 國家를 살찌우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효과적 정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클린턴의 재임기간중 실시한 그의 정책들이 성공을 거두고 이에 따라 再選이 확실시된다면, 그의 경제정책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90년대와 다가오는 21세기의 세계경제 질서와 사고방식의 변화를 예고하는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클린턴 경제정책의 기본골격만 발표되었을 뿐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발표되지 않고 있으며, 그 효과에 대해서도 불확실한 부분이 많으므로 클린턴의 선택이 미국경제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WEFA는 클린턴의 대통령당선

확정 후 발표된 새로운 전망에서 <표>와 같이 미국경제의 전망이 그 이전의 전망에 비해서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였다. 즉 美國經濟는 클린턴의 당선 여부와 관계 없이 소비와 투자의 회복을 기반으로 금년 이후 3%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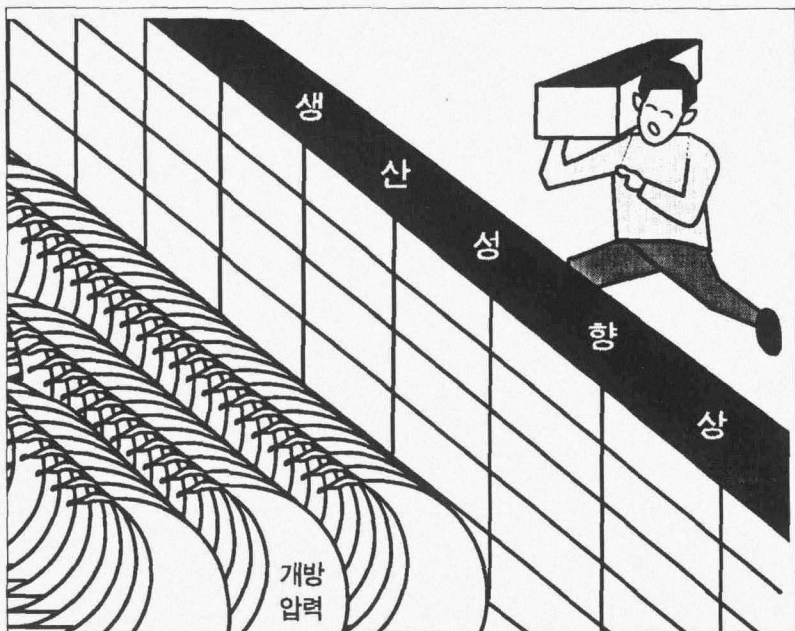
이와 같이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예측기관이 클린턴 이후 미국경제 전망이 그 이전에 비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지 않으나 '클린턴노믹스'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나고 보다 강력한 정책이 수행되는 94년 이후에는 세계경제질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 국민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의 채택으로 정치·외교·경제의 각 분야에서 國家的 利己主義가 보편화되는 한편, 세계경제질서의 재편으로 경제블럭화가 진전되고 무역마찰이 심화되며, 기술보호주의의 팽배로 對開途國 기술이전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표> 미국경제 전망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실질 GDP 성장(%)	-1.2	1.9	2.8	3.3	2.8
소비지출	-0.6	2.1	2.8	2.9	2.8
민간고정투자	-7.1	2.4	6.0	7.0	7.2
수출	5.8	5.2	5.0	6.7	7.5
수입	-0.1	8.7	7.6	6.6	5.3
민간실업률(%)	6.8	7.5	7.3	6.4	6.3
연방정부수지(10억달러)					
NIPA 기준	-210.4	-287.0	-274.2	-267.0	-242.8
통합	-266.8	-327.5	-363.0	-313.7	-291.5
경상수지(10억달러)	-3.7	-56.5	-85.6	-103.4	-109.5
CPI 상승(%)	4.2	3.0	3.2	3.8	4.1
연방기금금리(연, %)	5.7	3.5	3.5	4.5	5.4

자료:WEFA, U.S. Economic Outlook, 1992. 11



이에 따라 세계시장에서의 수출 경쟁이 보다 치열해지는 가운데 특히 미국 및 선진국시장에서의 수출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미국의 변화에 대한 냉정한 판단과 대책이 요구된다.

클린턴의 경쟁력강화 및 국민제일주의 정책은 우리나라에도 시사

하는 바 크므로 우리나라는 탈냉전 시대에 부응하는 國家經營의 우선 순위를 올바르게 설정해야 한다.

총체적 생산성 향상의 극대화를 위한 제반여건의 조성에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산업구조조정을 추진해야만 한다. 先進型 産業構造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敎育과 기술개발투자를 늘려야 할 뿐만 아니라, 기술이전을 수반하는 외국인 直接投資를 적극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하루빨리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통상문제에 있어서는 한·미 양국간에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자유무역·공정무역원칙 준수를 확고하게 천명하고, 信賴性을 제고함으로써 향후의 통상압력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나라경제

특 별 기 획

클린턴 신행정부의 출범과 우리의 대응

수출시장다변화로 미국시장에 대한 의존도 줄여야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빌 클린턴이 당선된 배경에는 부시행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미국경제의 침체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클린턴은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 활성화에 두고, 公共部門 投資擴大를 통한 景氣浮揚策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는 미국내 失業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타개책의 하나로서 수출증대를 강조하고 있으며, 교역상대국의 공정한 무역관행과 시장접근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클린턴행정부는 앞으로 불공정한 貿易慣行이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강경한 통상정책을 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의 수출이 10억달러 증가될 때, 평균 2~3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으므로 클린턴행정부는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가 교역상대국 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장개방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클린턴은 교역상대국의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해 쌍무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하



최인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기 위해서, 지난 90년에 효력이 소멸된 수퍼 310조 무역법을 부활시켜 더욱 강화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클린턴의 對外經濟政策

클린턴은 그의 대외경제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의 經濟安保會議(Economic Security Council)을 신설하여 國家安保會議(National Security Council)와 대등한 위상을 갖게 함으로써 대외통상 정책을 조정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美무역대표

부의 조직개편과 더불어 海外公館의 통상협력기능 강화도 함께 검토되고 있는 등, 클린턴행정부는 앞으로 경제위주의 행정기능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 개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클린턴은 그동안 막대한 對美貿易 黑字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을 비난해 왔는데, 일본에 대해서는 管理貿易(managed trade)의 가능성까지도 검토되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는 인권문제 등을 이유로 最惠國待遇(MFN)를 조건부로 연장해 줄 가능성도 비치고 있다. 그는 또한 조선업과 우주항공산업에 있어서의 補助金問題를 강력하게 비난해 왔으므로 앞으로 일본과 한국의 조선업, 그리고 EC의 우주항공산업이 통상압력의 주요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해서 클린턴은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타결을 지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해 왔으므로 이 문제에 대한 그의 정확한 입장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만

약 클린턴의 대통령 취임전에 부시행정부에 의해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된다면,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협상 결과에 대한 번복이 가져올 수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신 추락과 그것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보완을 전제로 부시타협안을 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는 그것의 기본취지는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나, 그로 인한 미국내 실업증가와 환경오염문제가 해결되도록 협정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최종타결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노동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환경보호와 관련된 부문에 대한 투자, 그리고 농민에 대한 지원 등을 附隨協定(side agreement)에 반영키 위하여 캐나다·멕시코와 3者協商을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사찰 강화와 税金重課

클린턴은 경제활성화 방안으로서 막대한 공공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의 재원마련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외국기업에 대한 稅務査察 강화 및 税金重課를 계획중이다. 특히 미국내의 상당수 외국기업들이 회계장부를 조작해 이익을 누락시켜 탈세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들의 과세부담을 늘리기 위한 세무사찰 강화 및 移轉價格 규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미국내 외국기업의 자회사들이 해외에 재투자할 경우에 얻게 되는

우리 정부는 企業環境改善方案(PEI) 등과 같이 양국간에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행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우리의 자유무역원칙 준수의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주고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앞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비해야 될 것이다.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유예되고 있으므로 클린턴은 이 제도로 인하여 외국인투자가 미국시장을 떠나고, 美國민은 일자리를 상실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사찰 강화로 클린턴은 향후 4년간 450억달러의 세금을 추가적으로 거두어 들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내 일부에서는 이러한 계획이 너무 야심에 찬 계획이며 무리한 정책이 될 수 있다며, 이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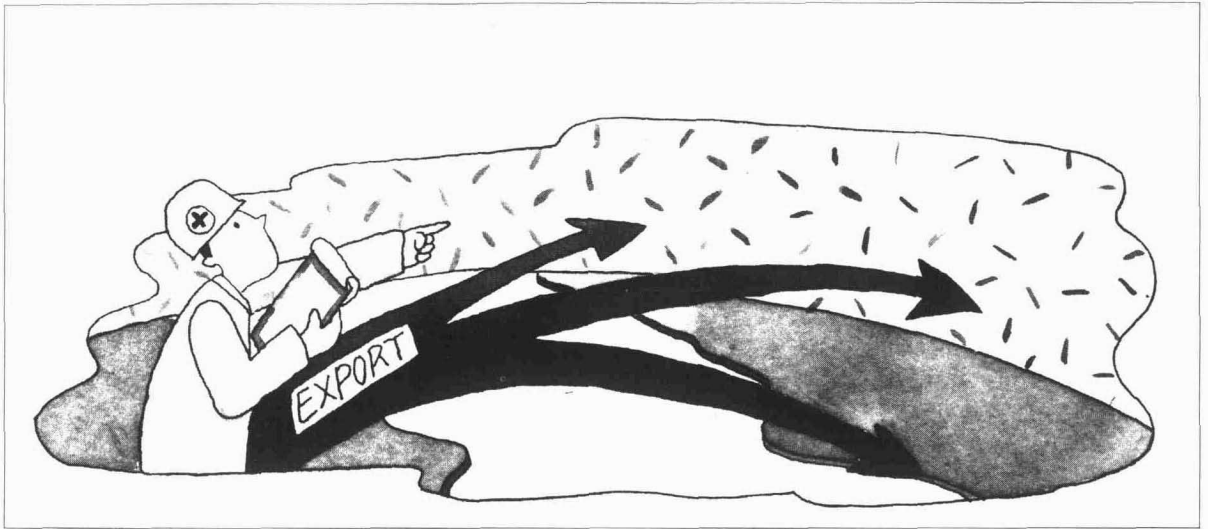
이와 같이 클린턴행정부가 부시행정부보다는 다소 강경한 통상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美 新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이 급격한 변화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재협상을 주장하는 등 초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게파르트 下院 民主黨 院內總務의 의견에 반대의를 표명하는 등 클린턴은 민주당내에서도 상당한 온건파로 불리우고 있다. 클린턴행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을 보다 정확히 전망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클린턴의 통상관련 실무진 인선과 의회관리 방향

등을 면밀히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클린턴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미국의 대외경제정책에 다소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국의 주요교역국 중 하나인 한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도 함께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퍼 310조의 부활 및 강화가 실현될 경우 미국의 優先協商對象國으로 지정되는 국가의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보복조치 등이 예상되는데, 이와 함께 미국에 대량수출되고 있는 우리의 주력수출품에 대한 덤핑판정 등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클린턴은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사찰 강화와 세금중과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미국에 직접투자를 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클린턴은 보다 철저하고 엄격한 환경관련 규제도 검토하고 있으므로 우리 상품의 對美輸出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현재 미국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燃比效率提高法이 통과되고 자동차 배기가스 오염 허용치가 보다 엄격해질



경우, 국산자동차의 對美輸出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클린턴은 그동안 태평양 연안국가의 造船補助金을 무역 불공정 행위라고 비난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주요 조선국에 대한 통상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시장과 지적소유권 분야에 압력 가중될 듯

클린턴은 미국의 수출증대를 위하여 교역상대국의 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시장개방을 위한 對韓 통상압력도 다소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미 통상협안 중 美측의 주요 관심분야인 금융시장

개방과 知的所有權 보호문제에 있어서 對韓통상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시장개방에 대해서는 개방일정(3단계 案)을 앞당겨 줄 것과, 지적소유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보다 철저하고 엄격한 단속과 처벌강화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클린턴은 국방예산의 대규모 삭감을 계획하고 있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우리측 부담 증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또한 우리 정부에게는 예산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對美수출 증대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

그러나 클린턴행정부가 대외통상압력을 가중시킨다면, 그 주요목

표는 한국이 되기보다는 일본과 중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클린턴은 대외통상정책과 관련하여 한국을 직접 거론한 적이 없고, 주로 일본의 對美 무역흑자와 중국에 대한 最惠國待遇 問題 등을 지적해 왔다. 더구나 최근 한·미 통상관계는 비교적 원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양국간 무역수지도 대략 균형을 이루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표〉참조).

한편, 클린턴의 당선으로 인한 미국의 경제정책변화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 만약 미국이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통상압력을 가하여 일본과 중국의 대미수출에 지장이 온다면, 이것은 오히려 우리 상품의 對美輸出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만약 클린턴의 경기부양책이 성공하여 미국경기가 되살아난다면 이에 따라 우리의 對美輸出이 증대될 수 있는 효과를 유발할 수도 있는 것이다.

〈표〉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별 무역수지 추이

(단위 : 10억달러)

	對일본	對한국	對중국	對대만	對EC
88년	-51.8	-8.9	-3.5	-12.6	-9.1
89년	-49.0	-6.2	-6.2	-13.0	1.5
90년	-41.1	-4.1	-8.4	-11.2	6.3
91년	-43.4	-1.2	-12.7	-9.8	16.7
92년(1~9월)	-34.0	-1.4	-13.4	-7.6	8.9

자료 : 美 상무부

우리의 대응

韓·美 양국간 합의사항 준수로

신뢰 쌓아야

앞으로의 한·미 경제관계에 있어서 미국으로부터의 통상압력이 일본의 경우와 같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으나, 클린턴 행정부가 과거 부시정부보다 더 강경한 통상정책을 펴 나갈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企業環境改善方案(P-EI) 등과 같이 양국간에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행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우리의 자유무역원칙 준수의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주고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앞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비해야 될 것이다. 특히 투자 및 기술이전 분야 등과 같이 양국에 호혜적인 분야에 있어서의 상호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며, 한·미간의 주요현안인 금융과 지적소유권 등 美側의 주요관심분야에 대하여 적절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 등의 다자간 협상에도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신념을 보여줌과 동시에, 우리 쌀시장 개방의 어려움에 대하여 美側의 이해를 구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쌀을 제외한 농산물과 금융을 포함한 서비스 시장 개방은 우루과이라운드의 성과와 관계없이 우루과이라운드에서의 약속수준에 맞게 履行計劃을 세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만약의 경우 우루과이라운드가 성공적

미국의 對日本·對中國 통상압력이 가중될 경우, 우리의 對美수출을 신속하게 증대시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역시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수출시장을 다변화시켜 미국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일 것이다.

으로 타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APEC體制內에서의 추가적인 무역자유화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추후 多者間 體制의 강화와 연결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對美 경제홍보 강화해야

이와 함께 그동안 추진해온 우리의 시장개방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을 적극 알리는 등 對美 경제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정확하고 솔직하게 설명하고 한·미간 무역수지 현황 등을 적극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기업환경 개선방안 성과를 홍보하고 아울러 한국 경제와 일본경제의 차이점을 적극 홍보하여 한국이 제2의 일본으로 인식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미국의 對日통상압력의 불뚝이 우리에게 튀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美議會의 보호주의적인 통상관련 입법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美議會의 동정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美議會에 대한 경제홍보를 활발히 전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韓·美 경제관계에 관심이 있는 양국 의원들간의 합동회의

혹은 교환방문 등을 통하여 양국간 의원외교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상관련 입법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美議會 주요상임위원회의 입법보좌관들에 대한 홍보활동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시장에 대한 의존도

줄여나가야

한편 미국진출 기업들도 예상되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비해야 할 것인데, 우선 미국정부의 세무사찰 강화나 增稅에 대비해서 미국내의 유명 회계법인이나 변호사를 고용하는 등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환경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에 대비하여 생산기술향상을 통한 품질개선에 노력하는 한편, 미국의 對日本·對中國 통상압력이 가중될 경우, 우리의 對美수출을 신속하게 증대시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역시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수출시장을 다변화시켜 미국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일 것이다. 나라경제

특 별 기 획

클린턴 신행정부의 출범과 우리의 대응

시장개방에 대비한 금융자유화 前向的으로 추진돼야

클린턴의 경제정책방향은 대내적으로는 공공지출의 확대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대를 충실히 다져나가고, 대외적으로는 교역상대국의 不公正 貿易慣行을 제거하여 미국기업이나 상품의 세계 진출을 촉진시킨다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클린턴 美行政府의 향후 정책방향

우선 대내 경제정책면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는 통신·환경기술·高速運送 등 핵심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을 위해 연간 200억달러 규모의 美國再建基金(Rebuild America Fund)을 조성하겠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기금의 설립에 필요한 재원은 국방비 지출 삭감이나 공무원 감축(연방정부 공무원 10만명 감축) 등을 통해 세출을 줄이는 한편, 高所得者에 대한 세율 인상과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을 통해 세입을 늘려 조달할 계획이다.



김재천

한국은행 통화금융과장

미국재건기금 조성 민간투자 촉진

그리고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혜택도 광범위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즉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해서는 稅額控除制度를 영구적으로 실시하고 중소기업의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액은 이 중 50%를 과표에서 공제해 주며,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日本流의 기술개발방식을 도입하여 첨단기술 및 상품개발을 위한 민간연구개발기관을 설립도 록 유도하고 이를 產·學 協同體制

로 운용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경제의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人的資本(human capital)의 양적 부족과 질적 저하현상을 치유하기 위하여 社會保障支援金 수혜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직업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고용증대를 유도하고, 대학 미진학자에게 기술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전담기구도 설립할 예정이다.

通貨·金融 政策面에서 우리의 대응방안

금융시장 개방 압력

더욱 거세질 듯

80년대 이후 미국 등으로부터의 금융시장 개방압력이 점차 가중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장기적인 개방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맞추어 금융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여 왔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개방속도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견해를 수차례 걸쳐 밝혀 왔는데, 특히 클린턴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금융시장 개방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우루과이라운드 전체 협상의 타결이 지연될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설립인가 및 규제에 대한 公開主義,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內國民待遇 등 그동안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논의되던 문제들이 雙務協商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있으며, EC 국가들도 미국과의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개방압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처럼 금융산업의 對外開放은 피할 수 없는 추세이며, 그 시기 또한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을 보면 불필요한 여러 규제들이 경쟁체제로의 전환을 가로막고 있는 데다가, 금융에 대한 인식 또한 30년전 경제개발에 착수할 당시와 별로 달라진 점이 없어 이러한 상태에서 금융시장이 개방될 경우, 우리의 금융시장은 외국 금융기관에 의해 크게 잠식될 우려가 높다. 따라서 기왕에 확정된 개방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는 한편, 대외 개방에 앞서 金融自由化 등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와 금융시장의 효율화를 위한 체제정비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개방계획의 성실한 이행 및 시장 개방에 대비한 金融自由化의 추진

92년 3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4차 韓·美 金融政策協議會에서의 합의에 따라 우리측이 제시한 단계별 금융자유화 및 개방계획(blueprint)을 성실히 이행하여 금융자유화

클린턴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금융시장 개방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우루과이라운드 전체 협상의 타결이 지연될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설립인가 및 규제에 대한 公開主義,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內國民待遇 등 그동안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논의되던 문제들이 雙務協商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있다.

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확고히 나타냄으로써 미국측의 개방압력을 事前에 완화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이미 발표한 제1, 2단계 추진계획을 당초 계획일정대로 차질 없이 실시하는 한편 金利自由化, 短期金融市場 육성, 外換·資本去來 자유화 등 금융자유화의 핵심과제이며 미국측의 주요 관심사항인 제3단계 추진계획의 구체적 시행방안과 추진일정을 보다 前向的으로 마련토록 해야 할 것이다. 금융·외환·자본시장의 개방은 이들 세 시장 상호간의 연관관계에 바탕을 두고 순차적으로 추진하되, 개방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巨視經濟의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자유화와 시장개방의 확대는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필요성에 의해서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는 점을 國民·企業·金融機關 등 각 경제주체들이 인식도록 함으로써 일시적 고통이나 부작용에 따른 對內壓力 증대로 금융자유화와 개방의 추진이 후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금리자유화를 통한 금리의 가격기능 회복해야

먼저 금리자유화를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금융시장의 효율화와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금리자유화를 통하여 금리의 價格機能을 조속히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리가 가격기능을 발휘하게 되면 자금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金融仲介機能이 활성화된다. 또한 금융기관의 貸出審査機能이 되살아 나고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다양한 기법의 개발이 촉진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며, 특히 현재 대부분의 여신에 대해 자유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外銀支店과 국내 금융기관간에 동등한 경쟁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91년 11월에 4단계로 이루어진 금리자유화계획을 수립하여 이미 제1단계 자유화를 시행한 바 있으며, 제2단계 자유화는 92년 하반기에서 93년말까지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시장금리의 하향안정화로 規制金利와 市場金利間의 격차가 많이 줄어든 데다가, 그동안 우리 경제를 덮어 왔던 거품이 차츰 걷히고 있어 금리자유화 추진을 위한 여건

이 성숙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2단계 금리자유화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실행에 옮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은행경영의 자율화로 자생력 키워야
다음으로 금융기관, 특히 은행경영의 자율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戰略産業에 대해 자금을 원활히 공급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지난 30여년 동안 은행의 내부경영에 깊숙히 관여해 왔다. 그 결과 은행은 경쟁력이나 생산성보다는 정책지시의 이행을 더욱 중시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수동적·소극적인 경영자세가 고착되어 왔다. 이러한 경영자세로는 선진화된 金融技法과 機動性으로 무장한 외국금융기관들과 경쟁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므로 은행 내부경영과 자산 운용 및 조달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은행이 자율적인 환경하에서 자체의 혁신노력을 통해 自生力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금융자유화와 시장개방의 확대는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필요성에 의해서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는 점을 國民·企業·金融機關 등 각 경제주체들이 인식토록 함으로써 일시적 고통이나 부작용에 따른 對內壓力 증대로 금융자유화와 개방의 추진이 후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금융기관 경영자율화가 무분별한 경쟁으로 이어져 금융의 공공성과 安定性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영성과에 대한 사후평가의 강화, 銀行經營公示制度의 확충 등 보완조치도 아울러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금융도 축소·정비해야

이와 함께 정책금융을 점차 축소·정비하여야 한다. 과도한 정책금융의 취급은 통상마찰의 소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은행의 貸出審査機能을 약화시켜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主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단계적으로 축소·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일반은행의 정책금융 중에서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및 중소기업금융을 제외한 여타 정책금융은 특수은행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통화관리방식 간접규제로 전환해야

마지막으로 金融·資本市場의 개방 확대에 따른 海外資本의 流出入 증대로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교란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화관리방식을 종전의 直接規制에서 間接規制로 조속히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자본의 유출입이 확대되면 通貨總量의 적정수준 유지뿐만 아니라 금리·환율 등의 안정도 통화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되므로 통화정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통화공급목표와 더불어 金利 및 換率에 대한 內部目標도 설정하여 이를 조화적으로 운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표〉 금융자유화 및 개방계획의 단계별 추진과제

제1단계(92년중 시행)	제2단계(92~93년중 시행)	제3단계(97년 이후 시행)
〈기본전제〉 ·국제수지:적자지속 ·내외금리차:현 격차 지속 ·물가(CPI) 상승률:9% 내외	·국제수지:균형수준 유지 ·내외금리차:현 격차가 절반 정도로 축소 ·물가상승률:7% 내외	·국제수지:흑자기조 유지 ·내외금리차:격차가 2~3%포인트로 축소 ·물가상승률:5% 이내로 안정
〈추진과제〉 ·CD발행조건 완화 ·외국은행의 은행연합회 및 금융결제원 정회원 가입 ·은행감독규제의 명료화	·점외 ATM 설치 허용 ·외국증권사 지점 추가허용 ·원화의 국제화 추진 ·포지션관리제도 개선 등	·금리자유화 ·여신관리제도 개편 ·단기금융시장 육성 ·외환·자본거래 자유화 ·채권시장 개방 등
(92년 3월말 확정·발표)	(92년 6월말 확정·발표)	(92년말까지 작성완료 계획)

특 별 기 획

클린턴 신행정부의 출범과 우리의 대응

기술집약적·자본절약적 산업 중심으로 제조업구조 개편해야

클린턴행정부가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정책은 미국경제의 재건에 목표를 두고 단기적으로는 경기회복을 위하여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 공공투자의 확대와, 중산층에 대한 減稅 등 케인즈적인 적극적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 構造調整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클린턴행정부의 산업정책

구조조정 주안점은 사회간접자본건설 외에 인력개발과 기술혁신을 통하여 미국 제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미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첨단기술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여 세계시장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유지·강화한다는 것이다.

기술개발 투자 확대

산업기술정책에 있어서는 첨단소재·정보기술·신제조 공정과 같은 핵심기술개발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국방부문



이경태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의 R&D 투자를 民需부문으로 전환하며, 기술의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產·學·官의 생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민간기업체간의 협력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또한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적소유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연방정부 보조를 받는 기술개발프로그램에 외국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 등이 주요 골자이다.

또한 환경보전 시책을 강화하여 환경규제를 더욱 엄격하게 시행하겠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폐기물처리기금법을 강화하고 미확인 출처 오염기준에 관한 새로운

수질오염방지법을 제정하며, 지구온난화의 주원인인 이산화탄소 방출량 동결 및 CFC 등 오존층 파괴물질의 감축 가속화를 공약하였다.

클린턴행정부의 산업정책을 요약하면, 미국경제의 再建을 통한 세계시장에서의 주도권 회복을 목표로 삼고, 강력한 정부개입을 기조로 하는 지원·육성책을 마련하며 산업정책의 주된 대상분야는 사회간접자본 건설, 교육 및 훈련의 강화를 통한 인력의 고부가가치화, 산업기술개발 촉진 및 설비투자 증대에 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클린턴행정부의 산업정책은 비단 미국의 산업뿐만 아니라 국제무역과 자본이동 등을 통한 파급효과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클린턴노믹스’와 미국경제

이와 같은 영향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산

업에 대한 효과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른바 ‘클린터노믹스’는 미국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인데 필자의 생각으로는 현 시점에서 해답을 구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굳이 예측을 한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연간 약 600억달러의 공공투자규모는 미국의 GNP규모인 약 6조달러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제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고, 人的資源의 개발 및 산업기술의 혁신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나아가 재정지출의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이 연방예산적자 축소라는 제약으로 인해서 용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들이 클린터노믹스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투자를 확대하고, 또한 그동안 꾸준히 지속되어 온 기업의 자발적인 경영혁신 노력이 본격화하면 미국경제는 생동감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단계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그 주도적 역할은 서비스분야 및 하이테크 제조업이 하게 될 것이다. 특히 우주항공·반도체와 컴퓨터 및 통신을 중심으로 하는 정밀전자·신소재·정밀화학·의료기기·레이저 및 광전자 등의 최첨단산업들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월등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최강의 경쟁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반면, 가전·섬유·철강·자동차 등 이미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산업들은 여전히

클린턴행정부의 산업정책을 요약하면, 미국경제의 재건을 통한 세계시장에서의 주도권 회복을 목표로 삼고, 강력한 정부개입을 기조로 하는 지원·육성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산업정책의 주된 대상분야는 사회간접자본 건설, 교육 및 훈련의 강화를 통한 인력의 고부가가치화, 산업기술개발 촉진 및 설비투자 증대이다.

급격한 구조조정압력하에 놓이게 될 것이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이와 같은 미국경제의 변화는 우리의 巨視經濟와 산업구조에 대하여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미친다.

긍정적으로는 美國景氣의 회복 → 수입수요의 증대 → 우리의 수출 증대로 이어지는 국제수지개선 효과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며, 그 이외에 미국경제가 전반적으로 호전되면 우리 상품의 수입규제와 雙務協商을 통한 시장개방압력이 다소 완화될 수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부정적인 영향은 첫째, 서비스 및 첨단기술산업 등 우리의 국제경쟁력이 아직도 매우 취약한 분야에서 미국상품의 국내시장 先占의 우려가 있다. 둘째, 기술보호주의 또는 技術霸權主義가 강화되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첨단기술의 이전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셋째, 환경기준이 강화되어 화석연료사용과 CFC의 사용이 규제됨에 따라 국내산업은 대체연료 및 물질을 개발 또는 수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며, 특히 자동차 배기가스기준이

강화되어 자동차의 對美수출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우리의 산업구조조정 방향

국내 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기업 및 근로의욕의 저하, 그리고 후발개도국들의 성공적인 공업화가 상호작용한 결과 우리나라는 최근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활력을 상실하고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었다. 또한, 제조업내에서도 의류·신발·가전 등 주로 저임금노동력을 활용한 가격경쟁력에 의존하던 부문들이 극심한 수출부진을 겪고 있다.

제조업구조를 기술·자원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개편해야

따라서 우리의 産業構造調整은 제조업이 활력을 회복하여 성장주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제조업구조를 기술집약적·자원절약적 산업중심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산업구조조정이 갖는 중요성은 클린턴행정부의 산업정책이 등장함으로써 더욱 커졌으며 더욱 시급을 요하는 과제가 되었다. 왜냐하면 미국경제의 회복에 따라 미국의 輸入需要가 늘어날 때, 그 이

익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산품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미국의 첨단기술공세하에서 국내의 유치산업을 키우고 미국과의 산업협력기회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국내산업의 기술수준 제고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91년도 GNP구성을 보면 농·임·어업 7.2%, 광업 및 제조업 34.4%, 건설 및 서비스 58.4%로 구성되어 있어서 서비스업이 경제성장의 관건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세계무역의 주종상품이 工產品이기 때문에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없이는 무역수지의 만성적인 적자를 벗어날 길이 없다. 또한 제조업은 도·소매, 운수, 금융, 통신 등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자로서 폭넓은 파급효과를 갖기 때문에 제조업이 부진하면 서비스업도 따라서 부진하게 된다.

제조업비중이 불과 20% 남짓하

여 서비스경제임이 분명한 미국에서조차도 MIT대학의 産業生産性委員會는 「Made in America」라는 보고서에서 미국경제의 취약요인은 무엇보다도 제조업의 活力喪失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기 때문에 하물며, 발전도상국인 한국에서 제조업이 갖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하겠다.

제조업수익률 제고 위해 조세감면 확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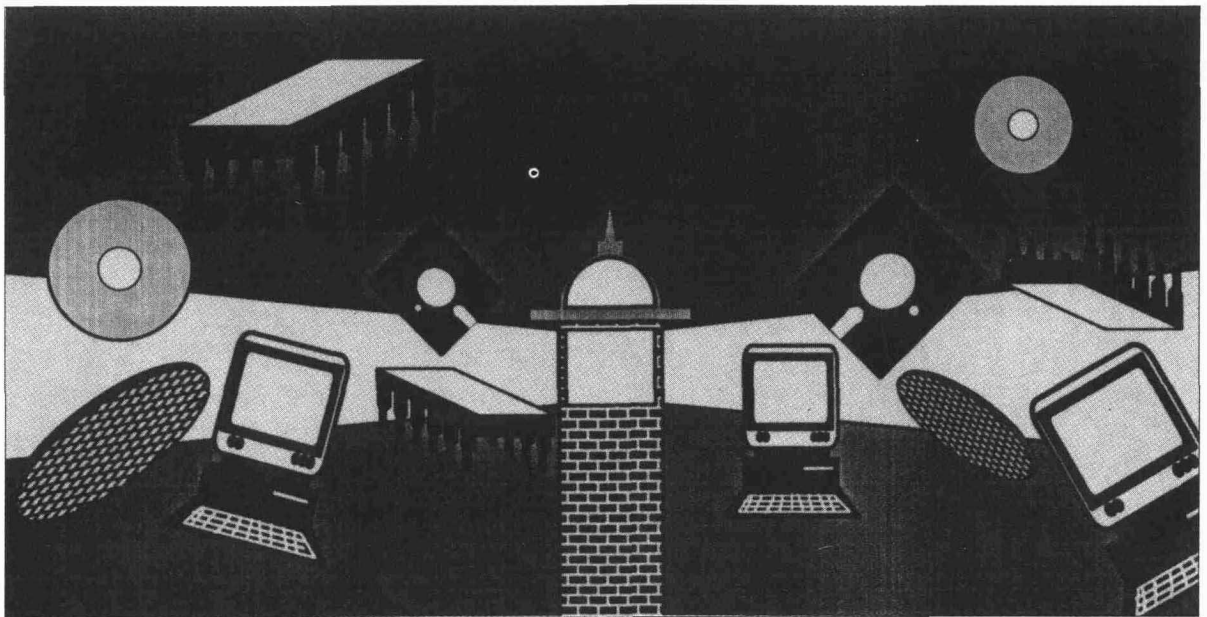
우리 정부가 9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製造業競爭力 強化對策은 인력과 자금이 서비스부문보다는 제조업부문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고, 사회간접시설과 공업용지를 확충하여 경영여건을 개선하며 기술개발지원을 강화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자원은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흘러가

기 때문에 현재 비제조업에 비하여 낮은 수준에 있는 제조업의 수익률을 높이지 않고서는 정책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제조업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서 法人稅를 비롯한 조세감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공산품과 같은 교역재와 서비스 등의 비교역재간에 발생하는 가격왜곡을 시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당화된다. 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할 때 비교역재는 제품가격인상으로 용이하게 전가할 수 있으나, 교역재는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압력 때문에 제품가격인상이 어려워져서 수익률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제조업 구조고도화를 위한 과제

제조업의 구조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화학공업구조의 심화, 경공업의 고급화 및 첨단기술



산업의 발전기반조성이 그 주요한 과제가 된다.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통한
중화학공업 육성 필요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은 급속한 양적 성장에 비하여 질적 구조에 있어서는 아직도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제품설계와 핵심부품 생산 및 해외마케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에 의존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의 상당부분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임금급등 이후 그동안 국내에서 담당하던 단순조립적 생산공정을 해외로 이전함에 따라 製造業 空洞化의 우려마저 낳고 있다. 참고로 중간재의 수입침투율[수입/(중간수요 + 최종수요)]을 보면 우리나라(88년)가 23.7%인 데 반하여, 日本(87년)은 5.6%에 불과하고 자본재의 수입침투율도 우리나라의 34.9%에 비하여 일본은 3.5%로 매우 낮다.

따라서 중화학공업구조를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핵심부품의 개발과 제품설계기술 제고가 필요하며, 우리의 임금수준이 이미 저임금의 메리트를 상실할 정도로 높아졌기 때문에 구조심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 없이는 중화학공업의 양적 성장도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경공업 구조조정 초점,
생산요소의 원활한 이동에 두어야
노동집약적 輕工業은 종래 우리의 주력상품이던 低價의 대량생산품목들이 후발개도국들에게 급속하

우리의 산업구조조정은 제조업이 활력을 회복하여 성장주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제조업구조를 기술집약적·자원절약적 산업중심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산업구조조정은 클린턴행정부의 산업정책이 등장함으로써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으며, 더욱 시급을 요하는 과제가 되었다.

게 시장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패션화, 디자인의 창의성, 소재의 고급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높여야 하며, 자체상표를 개발하여 OEM(주문자상표부착) 수출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나 신발·의류 등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이 개별적으로 自己商標를 개발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공동상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제품이 고급화될수록 시장수요는 한정되기 때문에 경공업제품의 국내 대량생산은 자동화를 통하여 경쟁력유지가 가능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해외이전이 불가피하게 되고, 이에 따라 경공업생산의 증가율은 상당히 둔화되게 된다. 그러므로 경공업의 구조조정정책은 종업원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업종전환을 촉진하여 생산요소의 원활한 이동이 이루어지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첨단기술산업 육성 위해
기술개발에 주력해야

정밀전자·우주항공·생물산업·신소재·광전자·소프트웨어 및 환경산업 등과 같이 科學技術力이 고도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첨단기술산업은 다가오는 정보화사회의 주

역산업이기 때문에 선진국들에게 시장을 독점당할 수는 없는 것이며, 우리도 국가적인 계획하에서 기술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첨단기술의 개발은 위험성이 높고 고급인력과 시험장비가 필요하며 관련 기술간의 융합효과가 크기 때문에 공동연구체제를 구축하고 정부가 자금지원을 해 주어야만 원활한 투자를 기대할 수 있다.

클린턴행정부는 미국 기술정책의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미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첨단기술 분야에 있어서 기업과 정부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이며 산업기술에 대한 정부지원도 강화할 것이다.

우리 기업들은 미국기업들과 기술 및 투자협력을 강화하여 기술이 전효과를 높여야 하는데, 미국 정부가 강력한 技術保護主義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국 첨단기술 기업들의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미국 현지에도 韓·美 합작 기업을 설립하여 기술정보의 획득을 용이하게 해야 할 것이다. 남원

특 별 기 획

클린턴 신행정부의 출범과 우리의 대응

韓·美間 산업·기술 협력 적극 추진해야

이번에 美國 대통령선거 이슈가 미국의 국내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한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가 保護貿易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데에 우리 산업계가 깊은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무역환경 내지 시장여건 변화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가 매우 다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의 민주당정부 탄생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과 우리의 대응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대외통상정책 기조와 한·미 통상관계 추이

클린턴 민주당 정부의 향후 통상정책을 전망하기 전에 금세기 들어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意義있는 일이라 하겠다. 戰後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



장지종

상공부 통상협력과장

서 기간별로 특징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다.

戰後~60년대 : 세계자유무역 창달에 노력

세계대전 이후 60년대까지는 세계자유무역 창달을 위한 노력이 경주된 시대였다. 戰後 패권국으로 등장한 미국은 세계대공항의 쓰라린 경험을 교훈삼아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 자유무역 질서 확립을 위한 대외통상정책을 수행하여 왔다. 즉, 상품 이동에 대한 관세 인하를 담보하기 위하여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를 주도하고, 戰後 세계

경제 부흥을 위하여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창설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대외통상정책 기조로 전후 국제경제체제는 자유무역주의·무차별주의·多者主義를 기본정신으로 하여 선진국의 관세 인하, 수입쿼터 등 수량제한 완화, 외환거래의 자유화 촉진 등을 통한 자유무역주의 창달을 추구하였다.

70년대 : 보호무역정책 강화

60년대 후반부터는 소위 신보호 무역주의가 태동되면서 70년대 들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보호 무역정책이 강화되었다. 미국의 이러한 통상정책 변화기조에는 여러가지 원인들이 있을 것이나, 무엇보다 이기간중 일본 및 아시아 국가들의 급속한 공업화로 섬유·신발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선진국들이 급속하게 경쟁력을 잃게 되고, 이러한 경쟁력 저하는 바로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와 실업 사태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적으로는 긴급수입제한 조

치, 반덤핑 상계관세 등 시장질서 유지협정(OMA)이나 수출자유 규제협정(VRA) 등을 통해 開途國 제품의 미국내 진출을 직접적인 물량 통제로 억제하게 되었다.

80년대 : 상호주의에 입각한

공정무역 추구

80년대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공정무역을 추구한 시기로 특징지을 수 있다. 시장질서유지협정, 수출자유규제협정 또는 반덤핑제소라는 國內法 절차에 의해서는 미국 국내 산업보호가 미흡하고, 공정한 교역 조건하에서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사고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공정무역만이 미국기업들의 경쟁력을 회생시킬 수 있으며, 정부가 국내기업들에게 세계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데에 通商政策의 주안점을 두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기조하에서 88綜合貿易法에 불공정 무역국가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수퍼 301조를 도입하고, 미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서비스·투자·지적재산권 분야에서의 새로운 국제무역규범의 확립을 위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미간 통상관계의 변화

이러한 미국의 대외통상정책 기조변화 및 한·미간 무역수지 추세에 따라 한·미간의 통상관계도 변

한·미간 교역관계가 균형화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전체 교역규모가 89년도 이래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종래의 통상마찰 해소라는 소극적 차원을 탈피하고 적극적인 협력의 場으로 그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하겠다.

화하여 왔다.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초까지는 미국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비교우위를 상실해 가고 있는 섬유·신발·철강 등 斜陽産業에 대하여 수량제한, 반덤핑 등 수입규제로 우리 상품의 대미진출을 억제하였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와서 양국간 교역규모가 확대되고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가 커짐에 따라 우리의 시장개방을 위한 미국의 요구와 우리의 대응이 한·미간 통상관계의 기조를 이루게 되었다.

또한 80년대 후반에 와서는 한국 경제규모에 걸맞는 국제적 책임 및 역할을 강조하고 내수확대, 환율조정 등 거시경제 정책조정을 둘러싼 갈등도 시작되었다. 이러한 한·미간의 제반 갈등은, 88종합무역법에 의한 수퍼 301조 협상을 원만하게 타결함으로써 상당부분 해결되었다.

이후 양국은 무역수지의 균형화 추세, 한국정부의 적극적 개방화정책 추진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인식제고 등으로 상당기간 원만하고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90년에 추진된 근검절약운동을 수입억제정책으로 오인하고 한국의

개방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공격을 함에 따라 급격하게 냉각되었다.

그러나 상공장관 訪美 등 우리측의 적극적인 통상외교 전개로 이러한 오해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92년 1월초 부시대통령의 訪韓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양국간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해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후속조치가 착실하게 진전되었다. 이와 함께 통관절차 지연 등 개별기업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도적인 접근이 이루어짐으로써 현재까지 한·미 통상관계는 큰 문제점 없이 평온한 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다.

미국 新行政府의 통상정책 基調

클린턴 新行政府가 탄생함에 따라 향후 미국의 대외 통상정책의 변화 및 현재의 한·미 통상관계가 그대로 지속될 수 있느냐 하는 데 많은 관심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향후 신행정부의 대외 통상정책을 구체적으로 전망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번 美 대통령선거에서 국내경제 활성화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각되었기 때문에 대외통상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제시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행정부의 통상정책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여부 및 세계 경기동향, 미국의 경제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그 방향이 수정되거나 또는 변화되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시行政府 아래서 민주당의원들에 의해서 발의된 많은 보호주의 貿易法案들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立法化되지 못하였고, 클린턴대통령도 선거유세 기간중 국제경제사회에서의 리더쉽 발휘를 위하여 自國의 이익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것을 강조한 점들을 감안할 때,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강화될 것으로 대내외 통상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또한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는 신행정부가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산업계의 입장을 적극 수용해 나갈 경우, 자칫 단기적인 안목에서의 일부 산업계 보호에 치중하여 세계 통상여건을 악화시킬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클린턴대통령이 미국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편으로 미국시장을 폐쇄하지 않겠다고 공약하는 등 근본적으로 자유무역 옹호자이기 때문에 세계자유무역 창달을 저해하는 통상정책 시행에는 상당한 신경을 쓸 것이라는 전망도 해볼 수 있다.

對韓 통상정책 기조 및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신행정부의 탄생으로 미국의 對韓 통상정책 기조가 근본적으로 변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전망의 근거로서는, 다음 몇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한·미간의 무역수지가 균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클린턴대통령 당선자가 노태우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이러한 균형화 추세에 만족한 평가를

한 바 있으며, 또한 미국의 주요관심이 일본·중국·대만 등 對美 흑자국에 집중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對美 흑자국과의 마찰의 여파가 같은 아시아圈에 속한 우리에게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남아 있다 하겠다.

둘째, 현재 한·미간에는 통상현안 해결을 위한 각종 대화채널들이 구축되어 상호이해 촉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오해로 인한 통상마찰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92년초 부시대통령 방한시 兩國頂上會談 결과로 추진된 양국간 영업환경 개선작업(PEI)으로 美側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부분이 해소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파악된 신행정부의 경제·통상정책 방향을 토대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부정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금융·지적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벅찬 요구를 하여 한·미간의 통상관계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對美輸出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 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反덤핑·상계관세 등이 남용되고, 대통령 선거공약대로 미국내에서 활동중인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거나 환경기준이 강화되는 경우에도 우리의 대미 수출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겠다.

반면에, 신행정부가 국내 산업정책에 적극 개입하는 등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경우에는 양국 정부 차원에서의 산업·기술 협력 추진을 위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으며, 전세계 GNP의 30%를 점하고 있는 미국경제가 살아나면 이는 바로 세계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에 대한 最惠國待遇(MFN) 지위 박탈 등 對美 흑자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규제가 강화될 경우 우리 상품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利點을 예상할 수 있다.

앞으로의 대응 방향

대미홍보활동 강화

이번 선거로 美議會 議員의 약 25%가 교체되었고, 민주당 신행정부의 탄생으로 약 3천명에 달하는 정무직 공무원이 교체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한·미 통상관계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동안 한·미간 많은 통상현안들이 타결되었으나 아직도 금융자유화 속도, 지적재산권 보호문제 등에 대해서는 異見이 있는 부문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역할, 우리 산업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현단계에서 수용이 어려운 부문은 확고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여 美側을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사들이 한국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새로운 통상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력 인사 방한 초청, 홍보물 배포 등 通商外交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또한 대미수출 패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수퍼 301조 부활 등 각종 보호주의 색채를 갖는 법안 상정 등에 대응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미간 산업·기술 협력 적극 추진

현재 한국과 미국 양국은 모두 만성적인 對日 무역수지 적자, 산업의 경쟁력 저하 등 공통의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한·미간 교역관계도 균형화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전체 교역규모가 89년도 이래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종래의 통상마찰 해소라는 소극적 차원을 탈피하고 적극적인 협력의 場으로 그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하겠다.

92년 5월 한봉수 상공부장관의 미국 방문 활동 중에도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상공장관, 하원의장 등 관계 要路에 전달하고 논의한 바 있으며, 또 신행정부가 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증대시켜 나갈 경우 산업·기술 측면에서의 한·미간 협력의 기회가 매우 커질 것이다.

특히 산업·기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영업활동을 순조롭게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매우 중요한바,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제약요인도 이를 과감하게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병행하여 경쟁력 제고를 바탕으로 국제시장여건 변화를 예측·관리하는 능력도 배양해 나가야 할 것이다.

통상마찰이 예상되는 현안사항에 대한 재점검 필요

그동안 한·미간 많은 통상현안들이 타결되었으나 아직도 금융자유화 속도, 지적재산권 보호문제 등에 대해서는 異見이 있는 부문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역할, 우리 산업에 미치는 長短期 영향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현단계에서 수용이 어려운 부문은 확고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여 美側을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원

특 별 기 획

클린턴 신행정부의 출범과 우리의 대응

對美通商政策, 홍보활동이 關鍵

클린턴 행정부 통상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통상정책이 미국의 경제 정책 및 외교정책의 핵심부분이 되면서 대통령의 직접적인 관심과 개입하에 이행될 것이라는 점이다. 대통령 직속의 '경제안보회의(Economic Security Council)'가 생기고 통상장관이 그 구성원이 된 점 등이 모두 그러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즉, 통상문제는 통상장관에게 대체로 맡겨두던 과거와는 달리 '경제안보회의'에서 통상문제가 끊임없이 논의될 것이며, 거기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의 가차없는 개입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반공을 추구하던 미국의 정력이 이제 통상을 추구하는데 모아질 것이라고 생각해도 크게 틀림이 없을 것이다.

美國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필요

그렇다면 훨씬 더 적극적이고 가차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클린턴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해 우리는 어



전성철

김 & 장 법률사무소·변호사

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對美 통상정책을 논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워싱턴의 의사결정 과정의 구조는 주지하다시피 행정부와 의회와 언론의 3각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다만 여기에 브루킹스연구소와 같은 주요 싱크탱크들, 그리고 각 이익단체들이 영향을 미치고 압력을 행사한다).

미국 정책결정의 구체적 과정은 그것이 매우 공개적이고 논쟁적이라는 면에서 한국과는 매우 다르다. 미국의 정책결정 과정을 비유하자면 마치 우리나라 시골의 장터와 같다. 시골장터에서는 모든 상

인들이 소리 높여 호객행위를 하고 시끄럽게 흥정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시장 돌아가는 것을 환하게 알며 시끌벅적하게 움직인다. 소문이 빠르고 모두가 모두에 대해 알기 때문에 바가지 씌우다가는 금방 탄로가 나버리고 너무 좁고 뻥하기 때문에 거짓말이 잘 안 통한다. 이 시골장터와 같은 곳이 바로 워싱턴이다.

워싱턴은 알고 보면 몇천명의 엘리트가 지배하는 곳이다. 행정부 관리·언론인·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그리고 학자 그룹들 몇천명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비판하고 흥정한다. 이러한 비판과 토론과 흥정이 끊임없이 보도되고 또 논의되는 곳이 워싱턴이다. 이들 간의 정보의 확산속도도 지극히 빠르다. 또 모두 다 공개되기 때문에 워싱턴에서는 비밀이 별로 없다. 한마디로 百家爭鳴의 곳이다. 거의 완전경쟁에 가까운 생각과 견해의 시장터가 바로 워싱턴이고 이 시장터에서 공개적으로 여론이 형성되어 가는 것이다.

이러한 百家爭鳴의 곳에서는 누

구도, 또 누구의 견해도 즉각적이고도 공개적인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적당하게 은밀한 처리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에서는 어떠한 정책도, 또 입장도 반드시 합리적인 논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비판을 적게 받을 수 있는 논리, 그리고 비판받았을 때 반박할 수 있는 합리적 논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합리적 논리 없이는 어떠한 정책도 입안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살아남을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작동원리하에서 움직이는 워싱턴을 상대하려면 우리의 對美 통상 활동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對美通商機能의 세가지 측면

對美 통상기능은 크게 다음 세가지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첫째가 정보 수집기능이고, 둘째가 로비 내지 홍보기능이며, 셋째가 정부간 협상 내지 조율기능이다.

정보수집 기능

대미 통상정보는 크게 나누어 공개정보와 비공개정보가 있다. 워싱턴처럼 여러가지 다양한 소스로부터 정보가 홍수같이 쏟아지는 곳에서는 이들을 제대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우리에게 미치는 의미를 분석하는 것도 상당한 노하우를 필요로 한다. 80년대 중반 이후 우리 정부 및 무역협회를 비롯한 유관단체의 꾸준한 노력으로 공개정보의 수집은 이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

對美 통상정책을 논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워싱턴의 의사결정 과정의 구조는 주지하다시피 행정부와 의회와 언론의 3각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다고 보여진다.

반면 비공개정보, 즉 인맥을 통해 얻어지는 정보의 수집기능은 아직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공개적인 사회로서 사실상 미국을 움직이는 정보는 대부분 공개정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對美通商에 있어 필요한 정보의 95%는 공개정보에서 얻을 수 있다. 비공개정보의 획득은 후술하는 로비 기능이 발전되면 자동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여진다.

로비 및 홍보기능

우리는 언뜻 로비라 하면 찾아가 만나서 그동안 쌓인 情理와 의리에 호소하며 부탁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워싱턴처럼 모든 사람들이 서로 끊임없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비판하는 百家爭鳴의 곳에서는 한 사람에 대한 로비란 그런 의리나 정리만으로는 도저히 안된다.

미국에서의 로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논리, 효과적인 홍보활동, 국내 진출 미국기업(Amcham)과의 합리적 관계, 광범위한 인맥구축이라는 네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

■ 합리적인 논리의 개발

미국에서 로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도울 의사가 있는 사람이 밖으로부터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올 비판으로부터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고 옹호할 수 있도록 합리적 논리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 한 그 사람이 아무리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것이다. 모두가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논리나 합리가 결여된 행동을 취할 수가 없는 것이다.

미국에서의 논리란 대체로 다음 3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짜여진다. 즉, 세계적 이상, 미국의 국익, 그리고 공정성(fairness)의 개념이다. 자주 미국국익에 반해 싸워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 '세계적 이상'과 '공정성'의 개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정확한 데이터와 사례에 의거한 '공정성'의 논리를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논리를 세우는 데 있어서의 전문가는 물론 변호사들이다. 따라서 능력있는 변호사의 고용은 대미 통상로비에 있어 필수적이다. 한국은 지난 수년 동안 상당수의 저명한 외부 변호사 회사들을 고용하여 이용해 오고 있다. 문제는 변호사의

질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부릴 수 있느냐 하는데 있다.

■ 홍보 내지 여론 조성활동

미국에서 우리의 로비 대상이 우리 측 말만 듣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미국과 같이 百家爭鳴의 사회에서는 우리의 로비 대상은 끊임없이 해당문제에 대해 다른 곳으로부터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읽고 듣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논리의 허점이나 약점은 금방 탄로나기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로비 대상은 여론의 흐름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고 여론의 방향을 어지간해서는 거스르지 않는다. 외국에게 유리한 결정은 자국의 여론이 후원하지 않으면 내리기가 지극히 어려운 법이다. 따라서 우리의 로비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여론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거나, 적어도 중립적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로비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홍보 즉, 여론의 조성작업이 필수적이다. 로비와 홍보는 수레의 양쪽바퀴와 같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 對美通商로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결함은 효과적인 홍보활동의 부족이라고 하겠다. 전통적으로 세인의 관심을 끄는 일을 꺼리는 동양의 전통을 가진 한국의 통상요원들은 많은 경우 홍보활동에 대해 소극적인 경우가 많고 이것이 한국의 로비 활동이 발전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다.

이 홍보활동 결여를 가장 단적으

로 보여주는 예가, 90년에 우리나라의 과소비 추방운동으로 韓·美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을 때 그 당시 우리의 입장과 시각을 옹호하는 글이 단 한 편도 미국의 통상관계 신문이나 잡지에 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 당시 전세값 인상에 절망한 근로자의 자살 등 총체적 난국으로 규정된 절박한 우리의 사회적 상황에 대해 논리적인 설명이 담긴 글이 미국의 통상관계 신문이나 잡지에 실릴 수 있었다면, 그것은 대부분의 통상관계자들에게 읽혔을 것이고, 적어도 전체적인 상황을 중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을 것이다.

1년에 한 두번씩 홍보책자를 돌리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한국에 불리한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신문 및 통상관계 잡지에 우리의 입장을 알리는 기고문을 실을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유리한 사항은 널리 알려야 한다. 온갖 사람들이 모여 시끌벅적한 시골장터 같은 미국에서는 자기의 생각을 소리높여 외쳐야만 겨우 주목을 받을까 말까 한데 침묵을 지키며 점잖빠고 앉아 있어가지고 서야 아무런 대접도 받을 수 없다. 용기있게 나서고 논쟁에 불을 질러야 한다. 글이 꼭 실리지 않더라도 주요 언론인에게 우리의 입장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상비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나라 고위 통상관리들의 미국방문도 그렇다. 미리 홍보전문가들과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그 관리의 핵심적 메시지가 미국의 언론·의회·연구소 등 통상관계자들

의 뇌리에 박히도록 준비를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다. 몇몇 사람들에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효과가 적고 또 있었다 하더라도 여론의 관심이나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곧 희석되기 십상이다. 이런 점에서 對 언론관계를 전문으로 하는 홍보회사와의 지속적이고도 정기적인 관계가 대미 통상에서는 필수적이며 우리가 가장 관심을 쏟아야 할 분야이다.

■ 국내 진출 미국기업과의 합리적 관계 유지

아무리 우리가 美國에서 홍보를 잘 해도, 한국에 있는 미국 회사들이 본사에게 불평을 하고 이 본사가 국회의원과 무역대표부 등에 불평을 하거나, 혹은 주한 미국신문 특파원들이 한국에 대해 나쁜 기사를 쓰면 우리의 홍보효과는 급속히 감소된다. 따라서 우리의 통상 전선은 사실상 미국과 한국의 두 군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 미국기업, 즉 Amcham 회원들을 상대하는 방법은 역시 합리성을 기초로 하고 신속하고 책임있는 대응이 아닌가 싶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인들은 어릴때부터 합리적인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납득을 쉽게 하지만 그렇치 못할 때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분통을 터뜨리는 편이다. 슬슬 피한다든가, 까닭없이 지체시킨다든가 혹은 부처간의 관할권을 모호하게 해버림으로서 접촉을 어렵게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가장 해로운 방법이다. 미국인들에게는 합리적인

논리에 바탕한 정공법 즉, 당당하고 명쾌한 대응이 대부분의 경우 옳은 방법인 것으로 생각된다.

Amcham이 발행하는 불평사항을 담은 정기적인 리포트에 대해서도 우리의 협회같은 곳에서 합리적인 대응논리를 담은 설명서를 정정당당하게 발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워싱턴의 통상관계자들이 미국측 이야기만 듣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한국 나름대로 역사적·사회적 불가피성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것을 미국측에 논리적으로 제시할 때 거기서 양국간의 신뢰가 쌓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 광범위한 인맥의 구축

어느 인간사회나 결국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간관계의 기반이 필수적이므로 언론·행정부·의회·싱크탱크 등 각 분야의 주요 인사와 인간적인 유대를 맺어 놓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상황을 이해하는 知韓派가 워싱턴에 많을수록 여론형성이 용이하고, 또 그들의 지원사격이 때로는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통상요원들이 각 분야의 주요 인사들과 광범위한 유대를 맺기에는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다.

첫째, 몇 안되는 통상요원들로서는 이들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어나간다는 것은 역부족이다.

둘째, 설혹 숫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문화적 제약이 많다. 소꿉잔을 기울이며 코가 비뚤어지도록 마시는 가운데 깊은 인간관계를 맺는

우리나라 對美通商 로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결함은 효과적인 홍보활동의 부족이라고 하겠다. 전통적으로 세인의 관심을 끄는 일을 꺼리는 동양의 전통을 가진 한국의 통상요원들은 많은 경우 홍보활동에 대해 소극적인 경우가 많고 이것이 한국의 로비 활동이 발전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다.

것에 익숙해온 우리 통상요원들이 부부동반하여 양식을 먹으면서 재담을 함으로써 인간관계를 깊이하는 미국식 방식에 익숙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 결국 워싱턴에서의 인맥 구축을 위해서는 미국의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전문가들로 하여금 미국 인과의 관계를 해결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그것이 더 효과적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외부 전문가들을 쓰는데 있어 주의할 점이 있다. 즉, 한 사람이 모든 분야를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환율문제가 이슈일 때는 財務省에 정통한 사람을 써야지 무역대표부쪽에 정통한 사람은 별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 또 미국같이 자본주의·시장경제가 발달한 곳에서는 유능한 사람은 반드시 비싸기 마련이다. 많은 돈을 주고라도 좋은 사람을 써야 한다. 각 분야별로 그 분야에 정통한 유능한 사람들을 고문 또는 자문위원으로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분야의 사람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며, 또 가능한 한 소개도 받고 하면서 먼 장래를 바라보며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

이 필요하다.

미국 전문가들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이렇게 볼 때, 우리는 합리적 논리의 개발, 홍보 및 인맥구축등 효과적 로비를 위한 모든 면에서 미국의 전문가들을 고용하고 부려야 한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사람들을 상대로 직접 로비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결국 우리의 성패는 미국인들을 제대로 부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미국의 전문가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부리느냐 하는 것이다.

사람을 제대로 부리기 위해서는 부리는 자가 그 분야에 대해 알아야 한다. 또 그 사람들의 문화적 배경도 알아야 한다. 한국에서 자라고 교육받은 사람이 미국에 도착해서 對美 로비를 맡는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몇 년 지나서 미국을 배우고 전문 분야를 배우고 나서 뭘 좀 할 만하면 귀국할 시간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통상요원들 중 미국에 대해 충분히 알고 現地에서 미국인을 제대로 부

릴 줄 아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하루빨리 많이 양성해야 된다. 외국에 유학도 보내고 또 미국에서 오래 공부한 사람들을 채용하기도 해서 미국인들을 제대로 부릴 줄 아는 사람들을 현지 통상요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적어도 부책임자는 미국 현지에서 평생 살 생각을 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좋고 이들에게 물론 좋은 대우도 해주어야 한다.

기타 가능한 한국의 인적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저명한 싱크탱크와 한국의 우수 연구소들과의 유대를 강화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 싱크탱크에 속한 학자들은 자주 정책의 기본 아이디어들을 제공할 뿐 아니라 정책수립자들의 긴밀한 의논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다. 또 이들은 정권의 교체에 관계없이 오래오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들과 긴밀하고 장기적인 관계를 수립해 놓으면 장기적인 정책수립이나 여론형성에 한국의 입장이나 시각을 투입할 수 있게 해 줄 뿐 아니라 주요 정책결정자와 접촉이 필요할 때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다.

2~3년전 한국의 환율문제로 韓·美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한국개발연구원과 미국의 IIE(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와의 합동 세미나와 동연구소 연구원들의 호의적인 입장 표명 등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된 적이 있다.

우리나라 有數 연구소의 연구원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교육을 받아서 이들 연구원들과 문화적인 공통

점도 있기 때문에 이들과 사귀는데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들 싱크탱크들과의 정기적인 세미나 등의 학술 교류를 통해 유대를 넓혀 나가는 것은 미국에서 장기적인 한국의 인맥을 구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간 협상 및 조율기능

通商의 가장 첨예한 현장은 역시 정부간의 접촉 현장이다. 우리의 로비와 홍보활동이 아무리 좋아도 이 정부간 접촉의 모양이나 결과가 좋지 않으면 통상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와 접촉한 미국측 관리의 의견이 언론이나 기타 관계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능력있는 통상요원들의 역할이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라 하겠다.

필자는 직업관계상 소위 말하는 협상 테이블에 많이 앉아 보기도 하고 관찰도 할 기회가 있었다. 협상의 테이블이란 한 마디로 논리와 지식 및 술수가 혼전하는 정글이다. 무엇보다 우리의 입장을 합리와 논리로 포장하여 제시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상대방 입장의 허점을 즉각 즉각 파악하여 이를 합리와 논리의 잣대로 깎 수 있는 능력, 상대방의 그러한 공격에 즉각 합리와 논리로 대응할 수 있는 순발력, 이러한 능력들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곳이 바로 협상장이다. 협상장은 토론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공방은 결국은 양측이 가진 힘에 의해 조율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논리와 합리에 의해 무장된

주장은 협상의 최종결과를 상당부분 좌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와 합리 및 지식의 정글에서 활동하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배양되는 것이 아니다. 다년간의 경험과 훈련을 통해 서서히 배양되는 것이다.

통상 전문요원이란, 우선 이러한 협상의 기술을 충분히 습득한 자라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상대국의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고 그곳의 통상관계 인사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는 국제적인 대인관계 기술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통상이란 완전한 하나의 전문분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현 통상체제에 대해 필자가 갖고 있는 몇가지 인상들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현 통상체제는 통상의 전문요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다.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다가 통상부문에 와서 2~3년 있다가 훌쩍 떠나버려 가지고서야 오랜동안의 경험을 요하는 통상전문가가 될 수는 없다. 적어도 5년, 10년의 쌓인 경험과 훈련만이 노련한 통상전문가를 만들 수 있다. 비전문가가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는 것은 주요한 국익을 아마추어의 손에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수련의 교재로서 국익의 주요 사안이 이용되는 것은 너무나 비싸게 치이는 수련교재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점은 우리의 지나간 여러가지 경험으로써 확인되고 있다.

둘째, 현재의 우리 통상체제는 너무 복잡다기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청와대·경제기획원·재무부

· 외무부 · 상공부를 비롯하여 농림수산부 · 체신부 등 각 이해관련 부처가 뒤엎혀 필자가 통상관계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로는 요즘 통상현안이 터지면 각 부처 관계자들이 모여 회의시간의 80~90%를 어느 부처가 그 문제를 담당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데 쓰고 실제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10% 밖에 쓰지 못한다고 한다. 너무나 낭비가 아닐 수 없다. 통상체계의 정예화와 전문화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通商專門機構의 설립 검토되어야

결국 필자는 우리나라 통상체계의 근본적인 기반조성과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통상전문기구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편이다. 그 전문기구는 우선 통상을 좋아하고 통상을 평생의 업으로 삼겠다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즉, 협상과 교류를 통해 외국과의 경제적인 마찰을 해소하는 것을 평생의 업으로 삼겠다는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 그 사람들에게 대해 통상에 관련된 모든 분야, 언어는 물론 논리의 전개방법, 질문에 대한 전술적인 대응법 등의 각종 협상기법, 그리고 기타 세계 통상체계 발전의 이론적 근거 등에 대해서까지 전문훈련을 시킴으로써 그들을 통상 전문요원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고도로 훈련된 통상의 '勇士'들이 끊임없이 통상관계를 연구하고 대외적으로 또 협상테이블에서 한국을 대변하고 뒷받침해 줄 때, 우리의 통상은 비로소 항구적인

우리나라의 현 통상체제는 통상의 전문요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다.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다가 통상부문에 와서 2~3년간 있다가 훌쩍 떠나버려 가지고서야 오랜동안의 경험을 요하는 통상 전문가가 될 수는 없다.

적어도 5년, 10년의 쌓인 경험과 훈련만이 노련한 통상전문가를 만들 수 있다.

발전의 기반을 갖추게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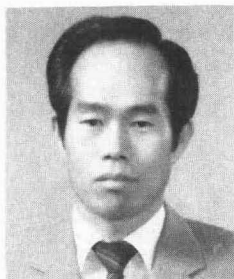
몇년전 한국에서도 통상 전문기구의 설립이 검토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때 그것을 무산시킨 가장 큰 논리는, 우리는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 같이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나라가 아니고 수비적이기 때문에 무역대표기구가 있으면 통상압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즉, 각 부처로 분산시켜 놓으면 어디에 어떻게 압력을 넣을지 몰라 압력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필자는 이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오리무중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당장에 시간을 좀 벌지 모르나 한국의 이미지는 그때마다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상대국으로서는 한국이 오리무중으로 숨어 버리는 데 대해 약이 오르게 마련이고 약이 오른 상대국은 언젠가는 보복하게 마련인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합리화시대, 地球化 시대에서 장기적으로 그러한 미봉적인 대응이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도리어 정면 돌파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대

화를 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다.

문제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있는 능숙한 통상의 전문가들이 빨리 많이 배출되어야 하고, 그들이 아무런 제약없이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빨리 만들어 주는 일일 것이다.

공산주의의 붕괴와 함께 이제 세계적으로 종전의 국방의 개념은 통상의 개념으로 代置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현상을 맞아 과거 우리가 국방의 체제를 정비·강화했듯이 이제 통상의 체제를 정비·강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김유채

상공부 기초공업국장

철제가구 예찬

지난해 12월 5일부터 8일까지 한국종합전시장(KOEX)에서 국내 최초로 금속제가구 전시회가 열렸다. 金屬製家具라는 단어부터가 우리에게 낯설다. 우리는 木製 생활권에 있었기 때문에 가구하면 책상에서 시작하여 탁자·옷장·응접세트까지 전부 목제로 만든 것만을 생각한다. 목제가구 중에서도 고급가구를 선호하여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고급 호화가구까지 구매하는 경향마저 있다. 이에 비해 철제가구는 사무실에서 주로 쓰이는데 그것도 하급직 직원용으로만 쓰이고 있고 간부급들은 다 목제가구를 쓰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日本의 경우는 우리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페인팅 기술의 발달과 인체에 적합한 디자인의 개발에 힘입어 金屬製家具가 80년대 중반부터 개발보급되어 최근에는 연간 금속제가구 매출규모가 5천억엔에 달하고 있다. 또한, 事務自動化 등 사무능률 향상을 위한 '뉴 오피스' 조성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도 큰 폭의 수요신장이 전망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오히려 목제가구보다 금속제가구를 갖춤으로써 사무실의 품격이 올라간다는 금속제가구 선호경향이 일반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여러가지 여건을 생각해 보면 금속제가구가 목제가구에 비해 유리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原料調達面에서 금속제가구가 훨씬 유리하다. 연간 나무 수입액이 18억6천만달러에 달하는 등 막대한 量의 나무를 수입해서 쓰고 있는데 반하여, 鐵鋼은 우리나라가 세계 제6위의 생산국으로 값싸고 질 좋은 原資材를 공급할 수 있으므로

목제가구를 줄이고 금속제가구를 더 많이 쓸 경우 국제수지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다음에는 수요면에서 볼 때도 최근 하이테크기술 개발로 컴퓨터 등 고급 사무용기기가 보급됨에 따라 事務自動化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무자동화 추세에도 금속제가구가 보다 적합하다. 또한 국내 금속제가구 제조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디자인과 주위 환경과 어울리는 각종 색상의 고급금속제가구의 공급이 가능해져서,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사무실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최근 대두되고 있는 환경보호 측면에서 볼 때에도, 폐품처리면에서 목제가구에 비해 금속제가구가 훨씬 유리하다. 왜냐하면 목제가구는 수집하거나 처리하기에 매우 곤란한 반면에 금속제가구는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가지 면에서 유리한데도 금속제가구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와서야 싹트고 있는 데 대해 晩時之嘆의 느낌이 있기는 하나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라도 이번 금속제가구 전시회를 계기로 해서 에너지·자원·국제수지·사무환경 개선, 더 나아가 환경보호 측면에서조차 유리한 금속제가구를 널리 보급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나라경제



유희열

과학기술처 기술협력국장

기술로 만리장성을 쌓자

지난해 10월 韓·中 과학기술협력 증진방안 협의를 위해 북경을 방문하였을 때 중국측의 안내로 만리장성을 돌아 볼 기회가 있었다.

장기간에 걸쳐 엄청난 인력과 돈을 투입하여 50억 개의 벽돌로 축조된 만리장성을 바라보면서 그 규모의 거대함과 중국인의 끈기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막대한 국력낭비와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역사의 현장이라는 점에서 깊은 감회에 잠겼었다.

더구나, 원래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축조된 만리장성이 뒷날 중국 관리들의 부패로 인해 외적침입시 관리들이 뇌물을 받고 성문을 열어주어 본래의 목적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였으며, 이제는 단지 관광객을 위한 장식용 유적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욱 큰 감회를 느꼈다.

여기에서 우리는 로마의 역사를 기술한 역사학자 Gibbon이나 수많은 학자들의 이야기를 빌리지 않더라도 한 국가의 멸망은 외적의 침입이 아닌 내부분란과 부패에 의한 국력의 쇠퇴에 기인한다는 교훈을 다시 깨닫게 된다.

동서냉전이 끝나고 새로운 국제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격변기 속에서 중국은 국가의 흥망이 과학기술에 달려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科技興國'의 기치하에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은 과거 만리장성의 쓰라린 경험을 토대로 국가발전을 위하여 엄청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 11월 한·중 과학기술장관 회담차 訪韓하였던 중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宋健 주임은 중국이 과학

기술분야에서도 빠른 속도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예컨대, 연구소와 대학에서 안주하던 研究員들에게 自力更生の 원칙하에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촉구한 결과, 지난 7년간 40만명의 연구인력이 연구소와 대학에서 독립하여 2만여개의 기업을 세웠으며 이러한 시장경제체제로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연구원이 연구소에 안주하던 시대는 사라지고 개발된 기술로 시장에 진출하여 기술의 만리장성을 쌓아 가고 있는 것이다. 즉, 연구소의 만리장성이 이제 시장경제의 만리장성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기술개발을 통한 산업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겠다. 美國·日本 등 선진국의 연구결과의 실용화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한 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35%로 상대적으로 높지만, 한 시도 고삐를 늦추지 말고 이러한 추세를 지속하여 시장기술의 만리장성을 쌓아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내부결집과 강력한 지원이 요청되고 있다. 96년까지 과학기술진흥기금 1조원 조성, 기술복권 발행, 정부투자기관과 민간기업의 기술개발투자 확대뿐 아니라, 기술인력의 선진국 파견확대 등을 통한 고급 과학기술인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창의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체제구축, 產·學·研간 긴밀한 협동연구개발,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사업추진, 국제기술협력 등 제반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도 기술의 만리장성을 쌓아나가야겠다. 남원



이상용

농림수산부 공보담당관

쌀개방 문제에 지혜 모을 때

최근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급진전됨에 따라 우리나라 농산물, 특히 쌀의 시장개방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이미 잘 알려진 바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과정에서 美國 등 주요 농산물 수출국들은 모든 회원국들에 대하여 둔켈草案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농산물의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되, 국내의 가격차이는 관세로써 보완하자는 이른바 '예외 없는 관세화'案에 동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한국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쌀을 비롯한 농산물의 시장개방 압력이 갑자기 대두된 새로운 사실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미국의 대통령선거에서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한 민주당의 클린턴후보가 당선됨으로써 미국정부의 시장개방 압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던 차에, 그동안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미국과 EC간 수출보조금 감축 등 농산물 분쟁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에서 한국의 쌀시장 개방문제가 본격적으로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그동안 우리와 입장을 같이 해오던 일본이 최근 소위 '大勢論'을 들어 쌀시장의 개방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우리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현재 각국이 유지하고 있는 각종 교역장벽을 낮추어 상호경쟁력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을 확대시킴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세계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우루과이라운드의 기본취지를 반대할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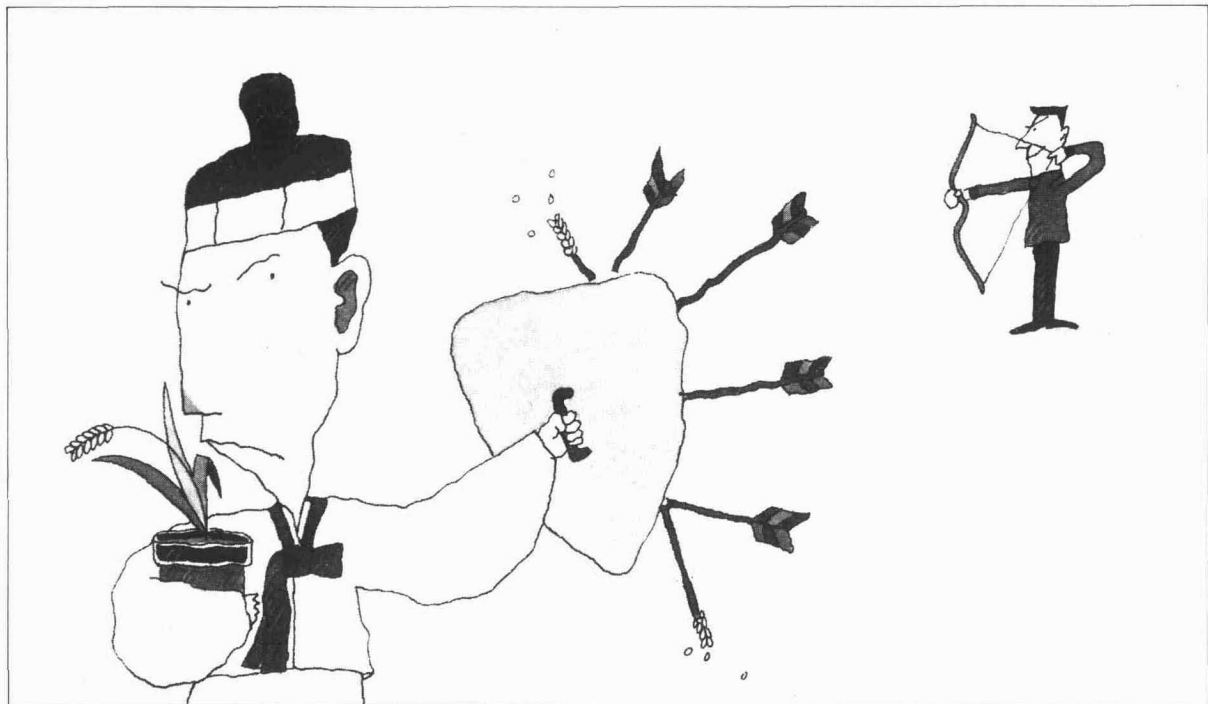
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쌀문제만큼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다. 지난 87~89년 기간의 우리나라의 쌀생산비는 10에이커당 435달러로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높은 데 비해 미국은 122달러, 그리고 세계 최대의 쌀수출국인 태국은 겨우 37달러밖에 안된다. 반면 쌀의 농가판매가격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일반미값은 t당 1,353달러인 데 비해 美國產은 224달러, 태국산은 201달러밖에 안되어 우리나라의 쌀값이 6배 이상이나 비싼 편이다. 이를 두고 우리 국민들 중에서는 우리쌀에 비해 훨씬 가격이 싼 미국쌀을 사다 먹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단순히 현재의 외국산과 국내산 쌀값만을 비교하여 말한다면 그와 같은 견해도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쌀은 단순한 상품적 가치로만 환산할 수 없는 특수한 품목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쌀은 우리 국민의 기초식량이며, 식량은 국방·에너지와 더불어 인간의 생존과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자원 중의 하나이다.

최근에는 식량수출국이 自國의 정치·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식량자원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경향을 표면화하고 있으며, 실제로 식량자원의 무기화 가능성은 70년대 이후 이미 여러번 곡물수출국의 공급중단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바 있다. 이와 같이 식량자원이 바로 무기화될 수 있으며, 우리 입맛에 맞는 쌀의 수출국가와 수출물량이 제한되어 있어 우리의 쌀생산기반이 무너짐과 동시에 쌀의 국제시세가 훨씬



높아질 것임을 고려한다면, 국민의 기초식량을 불안정한 해외시장에 의존한다는 것은 식량안보상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쌀은 우리 농가소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작목으로서 농업소득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농민에게는 가장 중요한 소득원이다. 밀·옥수수·콩 등 주요 식량작물은 이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팔·녹두·인삼·고사리 등 잡곡과 특용작물들까지도 값싼 중국산에 밀리고 있어 쌀을 대체할 만한 主所得作物도 없는 실정이다.

그밖에도 쌀의 생산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자연환경보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논은 쌀생산기능 이외에 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쌀의 국내생산을 포기할 경우 홍수조절과 환경보존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삶의 터전을 잃는 농민들이 대도시로 대거 이동할 경우 일부 농촌에는 空洞化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대도시에는 인구집중으로 엄청난 사회·정치적인 문제점들이 대두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쌀은 교역대상으로서의 단순한 상품이기에 앞서 우리 민족과 국가의 死活이 걸린 양보할 수 없는 자원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도 쌀시장은 개방할 수 없다는 이러한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장차 개방에 대비하여 우리쌀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업농을 육성하고 영농규모의 확대와 기계화 등 농업구조를 개선하여 생산비를 낮추어나가는 한편, 米質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이러한 농업생산기반 조성이나 품질개량에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쌀과 우리 농업의 이와 같은 특수성 때문에 우리 정부도 현재 진행중인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예외 없는 관세화'는 물론, '최소시장 접근'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상대국을 계속 설득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곡물자급도가 40%를 밑도는 '농업후진국'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GATT의 혜택을 누려 경제발전을 이룩한 수출주도국이라는 이중구조 속에서 우리의 입장을 어떻게 관철시켜 나가야 하느냐가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쌀은 지켜나가면서 우루과이라운드가 추구하는 자유무역주의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국제적 흐름에 동참할 수 있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고 본다.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의 노력은 물론 국민 모두의 성원을 기대한다. **남원**

‘韓國型 經濟發展模型’을 찾아야 할 때

우리가 世界史의 무대에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힘, 즉 경제력을 배양하는 일이다.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民族自存을 지키는 관건은 그 나라의 경제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키워 나가느냐에 있기 때문이다.

西勢東漸의 波高가 드높았던 19세기 후반만 보아도 그렇다. 영·불의 東進, 미국의 西進, 러시아의 南進政策으로 말미암아 열강이 제국주의의 물결을 타고 물밀 듯이 韓半島로 물려들지 않았던가. 거기다가 주변 강대국들인 청·러·일의 탐바구니에 끼여 얼마나 시달림을 받았던가.

그러나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망국의恨과 분단의 아픔을 딛고 우리는 60년대초부터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왔다. 오로지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굳은 신념으로 수출주도의 제조업 생산력 강화에 국력을 총동원한 덕에 오늘날 新興工業國家의 一員으로 부상하였다. 80년대 전반의 對外競爭力 향상과 80년대 후반의 이른바 ‘3低 효과’로 開發年代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큰 성과(88~89년의 193억달러 흑자)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대내적으로는 민주화, 대외적으로는 개방화라는 전환기적인 진통으로 인해 최근에는 국제경쟁력이 크게 약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송희연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나라경제』 발행인

경제력에 좌우되는 國家의 位相

우리 경제가 전환기의 진통을 겪는 동안에 국제질서는 地殼變動을 일으켰다. 舊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독일의 통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EC를 중심으로 한 서구의 경제통합이 현실

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동북아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이미 일본이 亞太地域의 패권국으로 재등장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미국·EC와 더불어 21세기 세계경제운용을 주도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우리와 갓 외교관계를 맺은 중국만 해도 하루가 다르게 일본 다음가는 거대경제권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실정이다. 黃海 연안지역만 놓고 보더라도 1인당 GNP가 2천달러나 되고 인구도 우리의 3배 정도인 데다가, 최근 GNP 성장률은 연 15~20%로 급성장하고 있다. 당장 이 지역에서 생산된 공산품과 우리 상품이 세계시장에서 불꽃튀는 판매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러시아는 어떤가. 아직은 시장경제체제로의 移行過程에서 혼란과 침체를 겪고 있으나 무시 못할 경제대

국으로 떠오를 잠재력을 갖고 있는 나라이다. 2000년을 전후해서 시장경제체제가 뿌리내리고, 풍부한 기술인력과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외국자본의 생산기술을 유치한다면, 이 나라 역시 무시 못할 超經濟大國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우리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겪었던 좌절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經濟力을 가급적 빠른 속도로 신장시켜 나가는 길밖에 없다. 만약 우리의 경제력이 크게 신장되지 못하면 자칫 주변 강대국의 경제적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될 것임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周邊國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強大國의 흥망성쇠」라는 저서로 유명한 폴 케네디 교수도 지난 5백여년간 강대국의 흥망성쇠가 경제력의 성쇠에 의하여 결정되었다고 說破하지 않았던가.

총체적 생산성향상 통한 국가경쟁력의 강화

우리나라가 선진경제로 발돋움하려면 국가운영에 있어서 總體的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民生安定에 역점을 두는 길밖에 없다.

우선 총체적 생산성을 향상하려면 광의의 社會間接資本부터 조성해야 한다. 광의의 사회간접자본으로는 다음 일곱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倫理的·精神的 기본질서의 회복

첫째, 윤리적·정신적인 기본질서의 회복이라는 사회간접자본의 형성이다. 생산성 향상의 主體는 사람이며, 사람들의 언행을 좌우하는 것은 마음이다. 온국민이 옳은 정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이 일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열심히 일한 데 대한 올바른 평가기준이 설정되고 이 기준이 준수될 때, 비로소 신바람나게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

人的資本의 개발과 양성

둘째, 知的인 사회간접자본의 형성이다. 즉, 올바른 교육을 통하여 적절한 人的資本을 개발·양성하는 일이다. 기능인력이나 고급두뇌인력뿐만 아니라 고도의 문학 및 예술인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동시에 기

우리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겪었던 좌절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經濟力을 가급적 빠른 속도로 신장시켜 나가는 길밖에 없다. 만약 우리의 경제력이 크게 신장되지 못하면 자칫 주변 강대국의 경제적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될 것임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周邊國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술개발 및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투자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야 한다.

셋째, 物理的인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다. 수출과 산업생산에 애로가 되고 있는 도로·항만·창고·내륙 컨테이너基地 건설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종합화물유통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도시교통문제도 시급히 해결하여야 한다.

우리 문화와 여건에 맞는 제도 및 관행의 개편

넷째, 제도적인 사회간접자본의 형성이다.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모든 제도와 관행을 우리 문화와 여건에 맞도록 개편·정착시켜 나가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 낡은 제도와 생각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낭비요소가 존재하는가? 정부의 각종 法令과 조직은 물론 금융산업구조와 관행,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관계 및 산업조직 그리고 기업문화 및 윤리 등이 조속히 개편되어야 한다.

다섯째, 개방경제체제의 구축이다. 市場開放은 통상마찰을 완화하고 비효율적인 산업의 경쟁을 촉진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결코 피한다고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기업의 국내진출과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은 우리에게 부족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環太平洋의 중심국가로서의 위치 구축

여섯째, 특히 북태평양지역 국가들의 정치·경제체제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環東海·環黃海를 끼고 있는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교통·통신·무역·금융 등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각 나라의 체제의 상이성을 극복할 수 있는 中心地域(Hub Country) 내지 가교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지리적·경제적 기본여건을 갖추고 있는 나라이다. 중심 국가가 되기 위한 모든 여건을 갖추어 가는 데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그것이 또한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을 위한 여건조성 즉, 廣義의 사회간접자본의 형성이기도 하다.

선진국 기업들이 한반도내에 투자하겠다고 몰려드는 환태평양의 경제중심국가가 되어 북태평양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중국·소련·일본·미국 등 경제대국으로부터 항상 아낌을 받는 나라로 발전하는 길만이 강대국의 틈에서 民族自存을 유지하면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에 대하여 하루빨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민간주도-정부협조형’ 시장경제체제의 정착

일곱째, 정부의 정책결정과 기업의 경영전략 결정의 민주화이다. 몇 사람의 지도층이 정부정책이나 기업전략을 결정하여 집행부에 내려주는 이른바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는 복잡다기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가 어렵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주도-정부협조형’ 시장경제체제의 구축, 즉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사회정책 운용방식을 정착시키는 동시에 국가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발전전략에 대한 國民의 공감대 형성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는 의사결정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참여욕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공동운명체 의식을 제고시킴으로써 새로운 경제환경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권위주의적인 소수의 독단, 상의하달 및 對外秘방식의 의사결정관행을 과감히 청산하고, 다양하고 복합적인 경제문제에 대하여 국민의 지혜를 총집결하여 풀다는 발상의 전환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경제운용방식을 하루빨리 정착시켜야 한다.

民生의 安定 통한 국가경쟁력의 향상

이상에서 지적한 廣義의 社會間接資本 형성과 함께

우리나라가 선진경제로 발돋움하려면

국가운영에 있어서 總體的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民生安定에 역점을 두는 길밖에 없다.

우선 총체적 생산성을 향상하려면 광의의 社會間接資本부터 조성해야 한다.

필수불가결한 것이 民生의 안정이다.

농어촌 생활환경의 개선, 서민주택문제의 해결, 교통난 해소,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부동산 투기근절, 환경개선 등의 대책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일반대중의 생활을 안정시켜야만 한다. 民生의 안정 없이는 국가경쟁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과 공감대 형성

광의의 사회간접자본을 조성하는 동시에 민생을 안정시켜 나가려면 경제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증진과 공감대 형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망된다. 일찍이 피히테는 「독일국민에게 곱함」이라는 유명한 강연에서 나폴레옹의 야욕을 교육력으로 이겨나가자고 力說하여 독일국민의 의기를 북돋우지 않았던가. 단지 학교교육만을 전부인 것처럼 잘못 인식하고 있는 우리 풍토에서는 더더욱 경제교육과 연수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 까닭은 새로운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資源貧國의 악조건을 이겨내자면 각 경제주체들의 전폭적인 참여와 합의도출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은 국민의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운용방식을 하루빨리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한국형 경제발전모형’을 찾아야 할 때이다. 나라

한국경제의 操舵手

경제기획국의 기능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우리 경제가 지향해
나아가야 할
장기방향을 제시하고
단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전체흐름을
조율·관리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韓國經濟의 操舵手'
역할을 하는 셈이다

객원기자/ 김왕기(중앙경제신문 기자)

經濟는 흔히 人體에 비유된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경제에도 두뇌와 혈관, 팔다리 역할을 하는 곳이 있고 이들이 다 제기능을 발휘해야 건강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들 기관 중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지만, 思考하는 기능이 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동물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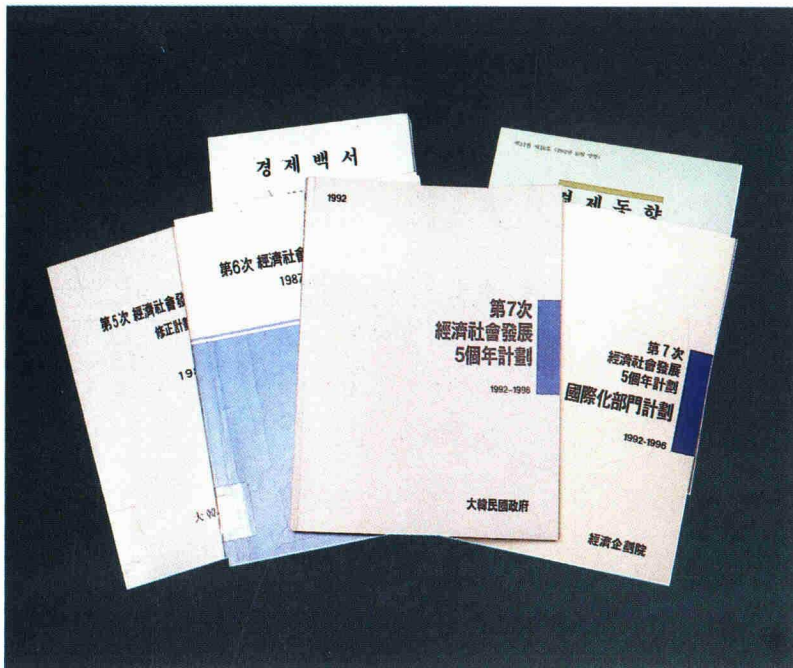
우리나라 경제운용에 있어 이처럼 중요한 두뇌역할을 하는 곳이 經濟企劃院 經濟企劃局이다.

경제기획국의 기능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우리 경제가 지향해 나아가야 할 장기방향을 제시하고 단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전체흐름을 조율·관리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韓國經濟의 操舵手' 역할을 하는 셈이다.

지금은 다소 의미가 퇴색되긴 했지만, 경제운용의 큰 맥을 잡아 주는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이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업무이고, 한해 동안의 국가경제를 꾸려가는 경제운용계획 수립을 비롯, 사람·돈·땅 등 경제활동의 핵심



한국경제의 이정표인 제7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비롯한 수 많은 정책들이 경제기획국의 손을 거쳐갔다.



요소와 관련되는 각종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종합조정하는 역할은 중·단기 과제 중 일부이다.

경제기획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조직구성을 살펴보자.

張丞玕 局長이 진두지휘하는 기획국은 6개課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기획원내에서 가장 큰 局이다.

종합기획과(과장:李根京)는 사실상 한국경제의 일선사령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을 비롯, 연간 경제운용계획 등이 모두 이곳을 거쳐야 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자금계획과(과장:趙學國)는 재무부와 한국은행의 역할 중 상당부분을 옮겨놓은 곳으로 볼 수 있다. 통화 및 금융관련 정책을 수립·조정하고 국제수지와 외환 관련 정책을 조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지역투자계획과(과장:韓成澤)는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주택문제를 비롯, 부동산과 국토이용, 지역개발·건설 등 국토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인력개발계획과(과장:張秉浣)는 노사·임금문제를 비롯 국가관리의 근간이 되는 인력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사회개발계획과(과장:吳鍾南)는 환경·복지·의료 등이 주업무.

동향분석과(과장:玄晳錫)는 국내외의 경제동향을 분석, 우리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파악하는 일을 맡고 있다.

얼핏 보더라도 이들 6개課의 업무는 사실상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축소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님을 알 수 있게 한다. 이 밖에도 부총리나 차관 등 간부의 강연·대담 원고에

다 인터뷰자료 작성 등의 업무도 예외없이 경제기획국의 차지이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경제기획국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경제기획원이 창설된 지난 61년. 배고픔을 벗어나기 위해 ‘輸出立國’의 기치 아래 각종 개발계획이 시작된 이후 경제기획국은 줄곧 선봉에 서 있었고, 지금도 위상이 다소 달라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중추역할을 맡고 있다. 때문에 경제기획국의 역사는 한국경제의 발전과정과 흐름을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기획국 초창기에는 기능과 역할뿐 아니라 이름도 지금과는 달랐다. 창설 당시의 이름은 종합계획국이었고 종합조정과, 1차산업과, 2차산업과, 3차산업과 그리고 경제조사과 등 5개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후 1·2·3차산업과는 투자심사국을 거쳐 현재의 정책조정국과 심사평가국으로 떨어져 나갔다.

또 한때는 물가정책과와 대외협력계획과도 경제기획국 내에 있었으나 물가정책과는 73년 현재의 물가정책국으로, 대외협력계획과는 해외협력위원회를 거쳐 86년에 대외경제조정실로 각각 소속이 바뀌었다.

초기에는 예산실과 통계국을 제외한 경제기획원 업무 중 거의 대부분을 경제기획국이 담당한 셈이다. 그후 업무가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면서 현재의 거시경제 및 임금·인력·부동산·건설·복지 등의 관련정책을 수립하고 부처간 의견을 조정하는 업무만 전담하게 된 것이다.

경제기획국은 가장 먼저 업무 전산화에 앞장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켰다.



경제기획국의 주요 업무성과를 일일이 열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제목을 들으면 알 만한 크고 작은 정책 중 이곳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90년대 들어 최근 몇년간의 예만 보자.

李承潤 前부총리의 등장과 함께 만들어진 '4·4 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을 비롯, '4·14 부동산 투기억제책', '5·8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특별보완대책', '7·6 산업인력수급대책' 등이 90년의 작업 중 일이다.

91년의 경우 新年벽두인 1월 15일에 만들어진 '국민생활과 환경개선대책'과 연이어 나온 '건설경기진정대책', '9·19 물가안정 및 국제수지 개선대책' 등이 있고, 올해부터 시작된 제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도 이곳에서 집대성된 한

국경제의 이정표다.

올들어 나온 대책만도 '경제안정 및 산업경쟁력 제고대책', '인력수급 장단기대책 및 총액임금 중점관리대상 관리방안', '하반기 금리안정과 자금흐름 개선방안' 등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이렇듯 많은 일을 담당하다 보니 걸림돌이나 어려움도 적지 않다.

경제기획국 직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6共 들어 민주화 과정에서 정부내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소위 '鄒處 이기주의'이다. 張국장은 "서로 만나서 토론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대화부족 때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얹히거나 외부에 부처간 이견충돌로 비쳐지는 예가 많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 서기관은 "전체보다는 개별 부처의 입장에서 문제에 접근하기 때문에 조정이 쉽지 않다"며 어려움을 토로했고, 한 사무관은 "각

부처가 소관 정보를 독점하여 공개하지 않는 경우 총괄조정부서로서의 정보부족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단기성과에 집착한 정부 내외의 따가운 눈총도 경제기획국 관계자로서는 견디기 힘든 일 중의 하나이다. 경제정책이 결실을 맺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한데, 이를 참지 못해 비판이 나오고, 결국은 도중하차하는 경우가 있어 경제기획국 직원들을 안타깝게 한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경기논쟁도 경제기획국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아닐 수 없다.

"최근의 진통은 우리 경제구조가 선진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일입니다. 지금 부양책을 쓰면 다시 경기가 과열되는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3/4분기 GNP 성장률이 예상외로 낮은 수준인 3.1%에 그치자 '우리 경제가 거덜나는 게 아니냐' 하는 비난이 쏟아져 관계자들의 입장이 무척 난처해진 모습이다.

세계에서 유례없이 급변하는 한국경제를 담당하다 보니 경험부족으로 예측을 잘못해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때는 당혹스럽기도 하다.

지난해 경상수지적자가 30억달러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가 적자가 87억여달러로 커져 경제기획국의 입장이 난처해진 것이 한 예다.

물론 이 과정에는 잘못할 속사정도 있었다. 경제기획원은 당초 50억달러 안팎의 적자를 예상했으나

한국은행이 먼저 대통령에게 전망을 낮게 보고하는 바람에 ‘말도 못하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된서리를 맞은 것.

현안업무에다 잡무가 많아 정작 본연의 업무는 뒷전인 것도 경제기획국 관계자들의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고충이다.

“경제기획국은 미래지향적인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나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은 각종 눈앞의 현안에 쫓기다 보니 매일매일의 일에 급급하는 형편입니다”

경제기획국을 이끌고 있는 張丞珪 국장은 경제기획국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데 대한 아쉬움을 이렇게 털어놓았다.

역할이나 비중에 비해 시쳇말로 ‘춥고 배고픈’ 곳이고 실권도 없는 곳이 경제기획국이다. 다른 실무부처처럼 정책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아 상대방을 설득해 나가는 ‘論理’가 最強이자 유일한 무기라 다른 부처보다 몇배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한다.

경제운용의 주도권이 민간에 넘어가고 정부의 역할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경제기획국의 위상이 축소되었고, 이에 따라 경제기획국의 역할도 과거에 비해 훨씬 줄어들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3D현상이 정부내에까지 파급되면서 일주일에 3~4일은 야근을 해야 하는 경제기획국에 대한 선호도가 과거에 비해서는 줄어들었다.

**경제운용의 큰 맥을 잡아 주는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이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업무이고, 한해 동안의
국가경제를 꾸려가는
경제운용계획 수립을 비롯,
사람·돈·땅 등 경제활동의
핵심요소와 관련된 각종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종합조정하는 역할은 중·단기
과제 중 일부이다.**

한 사무관은, “힘들고 승진기회가 적어 과연 이 생활을 계속해야 하느냐에 대한 회의가 일 때도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기획국 직원들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최근 들어 양상이 조금씩 달라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인사이동 때 경제기획원 직원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 중의 하나가 경제기획국이다.

과장들의 평균 연령이 젊은 것만 큼 패기도 만만하다. 뿐만 아니라 局·課長 6명 전원이 우리나라 최고수준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S大 출신이라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엘리트들의 집결지이기도 하고, 직원 한명 한명이 모두 一當百의 최정예임을 자랑하고 있다.

경제기획국은 시대변화에 발맞춰 기획원내에서 가장 먼저 업무전산화에 앞장서 산더미같이 쌓인 서류철을 없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시키기도 했다.

경제기획국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까지 경제기획국장을 거쳐간 面面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현직 경제기획원 차관보인 康奉均 씨를 비롯, 李鎭高 경제수석, 이형구 產銀총재, 姜慶植 前 재무장관, 故 金在益 前 경제수석 등...

그러나 경제기획국의 강점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경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나가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의견도 적지않다.

그 중 하나가 현실을 기초로 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비난. 현실에 대한 접목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고, 심지어는 경제기획국 직원들을 ‘구름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혹평하기도 한다. ‘지나치게 강한’ 프라이드 때문에 관계부처와의 사이에서 생기는 마찰도 경제기획국 관계자들로서는 반성해야 할 점이다.

어쨌든 이런 일부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경제기획국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헌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이 같은 지적 하나하나가 모두 우리 경제의 조타수 역할을 하는 경제기획국에 거는 기대와 관심이 크기 때문이다.

경제기획국이 새로운 시대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 같은 지적을 얼마나 겸허하게 받아들일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필**



경제정책해설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 절약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의 신규도입-

지난 8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는 경제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해 왔으며, 그 결과 91년도 에너지수입액은 최근 3년 사이에 두배 이상 늘어난 123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러한 에너지소비 급증현상 및 이에 따른 에너지수입액 증가는 국민경제 운용에 큰 부담요인이 되고 있으며, 기업의 국제경쟁력 측면에 있어서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6월 리우환경회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환경보전 측면에서의 에너지사용규제 가시화 움직임은 향후 우리 경제의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내외적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절약, 특히 기술개발 및 제품의 효율 향상을 통한 원천적인 에너지수요 절감대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 위해
'에너지효율등급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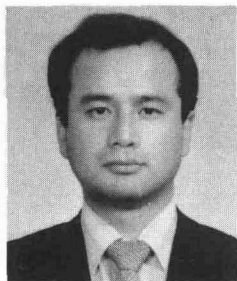
이러한 배경하에서 정부는 지난 92년 9월 1일부터 에너지효율등급 표시제를 도입·실시하게 되었다.

이는 냉장고·승용차·조명기기·에어컨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또는 사용량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입할 때 손쉽게 에너지절약형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업체가 절약형 제품을 생산하면 우수등급을 매겨 시장점유에 유리하도록 함으로써 생산단계에서의 원천적인 에너지절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 실시 현황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는 가정에서 에너지사용 비중이 크거나 여름철 냉방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제품 중에서 기술개발 여하에 따라 절약의 여지가 많은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효율등급표시제는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가정의 에너지 사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0%에 달하는 냉장고·조명기기 및 에어컨과 최근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에어컨 및 지난 6년 사이에 보유대수가 약 5배 이상 늘어난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산품과 수입품에 모두 적용된다.

영국·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미 위와 같은 품목에 대해 등급표시제 또는 효율표시제를 실시 중에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는 일정한 효율수준 이하의 제품에 대한 수입까지도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정곤
동력자원부 에너지관리과장

제품의 제조 및 수입통관시
등급 표시해야

에너지 效率等級은 가장 좋은 등급인 1등급에서부터 가장 나쁜 등급인 5등급까지 크게 5단계로 분류

된다. 이러한 등급은 동력자원부가 고시한 일정한 등급부여 기준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부여하게 되며, 등급을 부여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의 제조회사 또는 수입통관시에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냉장고·에어컨의 경우는 제품의 전면 또는 측면, 승용차의 경우는 제품의 측면 또는 후면에 등급을 표시토록 하고 있으며, 조명기기의 경우 제품의 포장물에 표시토록 하고 있다.

또한 이런 대상상품에 대하여 TV·신문 등의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광고를 할 경우에도 효율등급

효율등급표시제는 가정의 에너지사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0%에 달하는 냉장고·조명기기와 최근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에어컨 및 지난 6년 사이에 보유대수가 약 5배 이상 늘어난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산품과 수입품에 모두 적용된다.

을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등급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산제품 효율수준, 외국제품과 거의 대등 총 4개의 등급표시 대상품목 중

냉장고·승용차의 경우는 92년 9월 1일부터, 조명기기의 경우는 92년 10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에어컨은 93년 1월 1일부터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이미 실시된 냉장고·승용차·조명기기의 등급부여 현황을 살펴보면, 국산제품의 효율수준이 외국제품의 효율수준과 거의 대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승용차의 경우 국산제품이 외국제품보다 뛰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효율등급표시제가 실시된 이후, 市場性 확보를 위해 국내 업체들이 고효율제품 개발에 노력한 결과, 조명기기의 경우 당초에 비해 최고 24%의 효율개선을 이룩했을 정도로 단기간에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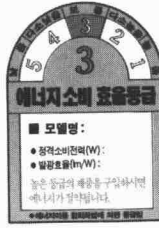
향후 효율등급표시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認知度가 점차 높아지고 홍보효과가 가시화될 경우 생산업체의 이러한 고효율기술개발에 대한 의욕은 더욱 제고될 것으로 보여진다.

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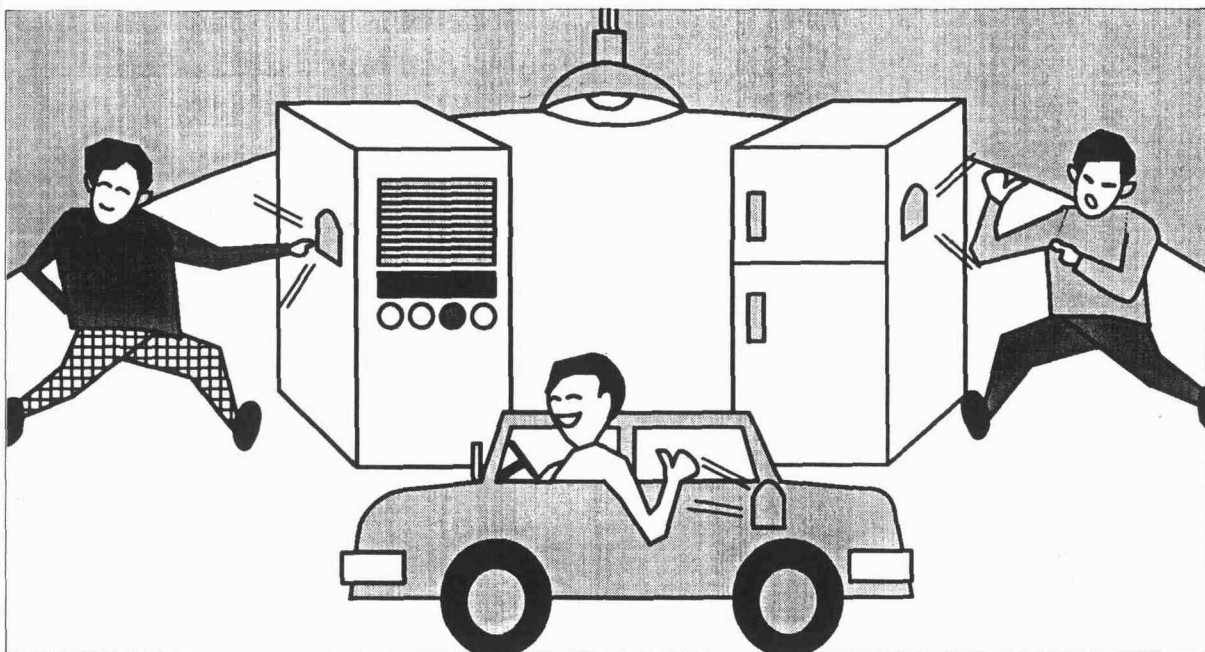
정부에서는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을 강구하고

〈표〉 효율등급 부여 현황(92년 11월 25일 현재)

(단위 : 대, 개, %)

	냉 장 고	승 용 차	조 명 기 기	
			형광램프	백열전구
1등급	3 (4.1)	2 (1.5)	6 (8.8)	2 (3.8)
2등급	28 (38.4)	20 (14.7)	19 (27.9)	11 (21.2)
3등급	34 (46.5)	60 (44.1)	18 (26.5)	20 (38.5)
4등급	4 (5.5)	39 (28.7)	9 (13.2)	16 (30.8)
5등급	4 (5.5)	15 (11.0)	16 (23.6)	3 (5.7)
계	73 (100)	136 (100)	52 (100)	
등급표시 라벨				

註 : 조명기기의 경우 92년 11월 10일 현재
괄호 안은 비율임.



있다.

첫째,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홍보내용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등급부여 현황을 홍보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둘째, 업체의 기술개발의욕을 제고하기 위해 高效率 냉장고·에어컨·조명기기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정부구매에 있어서는 종합낙찰제를 통해 고효율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셋째, 시중판매제품에 대한 등급표시 여부의 확인 및 사후관리를 통해 등급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며, 특히 수입품에 대해서는 稅關通關시에 등급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막대한 유류절감 효과 기대돼

효율등급표시제도의 실시에 따라 소비자들이 에너지효율등급을 참고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 고효율기기 또는 高燃比 승용차의 기술촉진 및 보급확대 효과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발전소 건설비용 및 유류비의 절감을 가능하게 한다. 참고로 승용차의 경우 연비 1% 향상시 유류절감 효과는 약 310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 실시에 따라 생산제품의 효율수준이 향상될 경우, 가전업계 및 승용차업계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함께 환경보전 차원에서의 국제적인 에너지효율 규제를 통한 무역규제 움직임에 事前的으로 대처하는 효과도 아울러 기대되고 있다.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되어야

에너지절약을 통한 국제수지 개선 및 국제경쟁력 제고는 향후 우리 경제의 운용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생산단계에서의 원천적인 에너지절약시책의 추진은 향후 정책수립에 있어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다. 효율등급표시제는 이러한 사전적인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에 착안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소중한 에너지를 아껴쓴다는 생각으로 생활 속에서 사소한 절약이라도 실천하는 자세를 갖는 일이며,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에만 정부의 에너지절약시책 추진은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나라경제



경제정책연구소

시장개방에 대응한 건설기술의 개발

우리 건설업은 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사회간접자본의 형성을 비롯하여, 70년대의 중동진출 등으로 국민경제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量的 성장을 거듭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건설자재 및 인건비의 상승, 신규 건설업체의 증가와 建設市場 개방압력 등으로 향후 건설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와 관련, 최근 우리나라가 GATT 사무국에 제출한 건설분야의 시장개방일정에 의하면, 일반건설업(토목·건축·토건)은 94년 1월부터 국내에서 100% 단독투자를 허용하고, 96년 1월부터는 支社設立을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전문건설업(특수·전문·전기·통신·소방시설)은 96년 1월부터 100% 단독투자를 허용하고 나아가 98년 1월부터는 지사설립을 허용하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물론 앞으로의 협상결과에 따라 일정 등이 다소 달라질 수도 있겠으나, 우리는 앞으로 전망되고 있는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한 제반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技術競爭力을 길러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건설산업은 그동안 노동집약적인 施工위주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기술수준이 낙후되어 있으며, 기술집약적인 공사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약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내외의 건설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건설업체들의 적극적인 기술개발이 요청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해서 각종 조세감면 혜택과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

하는 등 기술개발 촉진제도 및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이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기술보호 및 우대제도

국내에서 개발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개량된 건설기술에 대하여는 이를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新技術로 지정하고 신기술을 사용하는 者로 하여금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보호하고 있다.

신기술 개발을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신기술을 적용하는 工事に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92년 5월 11일자로 예산회계법시행령(제104조 ① 마항)을 개정하였다. 또한, 예산회계법시행령에는 정부가 발주한 모든 공사에 대하여 건설업체가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후에 발주자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공사비를 절감하였을 경우 절감되는 금액 전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규정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김동오
건설부 기술진흥담당관

보상절차에 관한 규정을 建設部 훈령으로 92년 2월 14일자로 제정한 바 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신기술의 경우에는 신기술 개발시에 드는 試驗施工費用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3년으로 되어 있는 신기술 보호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신기술 개발비의 5% 이내로 되어 있는 신기술사용료를 신기술을 사용하는 당해 工種의 순공사비의 5% 이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기술경쟁 입찰제도

신기술·신공법의 개발과 경제적인 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복합공종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의 대형 신규공사와 복합공종공사로서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 공사 중 대안입찰 또는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유리한 특정공사에 대해서는 대안입찰 또는 설계·시공 일괄입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방식은 프로젝트 기간의 단축이 용이하며 설계·시공 기술상의 피드백(feedback)이 가능하므로 기술축적에 효과적인 입찰제도라고 할 수 있다. 종래에는 기본설계입찰에서 실시설계입찰 참가 적격자 5인을 선정한 후 다시 실시설계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케 함으로써 업체에 많은 부담을 주었으나, 92년 5월 11일 대형공사 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 특례규정(제9조)을 개정하여 기본설계에서 낙

우리의 건설산업은 그동안 노동집약적인 시공위주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기술수준이 낙후되어 있으며, 기술집약적인 공사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약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내외의 건설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건설업체들의 적극적인 기술개발이 요청되고 있다.

찰자를 결정하도록 입찰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세제상의 지원

정부에서는 해당기업에 대해 기술개발 준비금의 損金算入,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다.

건설업 및 기술용역업을 하면서 기술개발 및 관련 활동에 투자하기 위한 계획금액을 투자개시 전에 미리 손금으로 산입하고, 이를 4년 이내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개발준비금의 損金算入制度를 운영하고 있다(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이와 함께 건설업 및 기술용역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 지출한 기술 및 인력 개발비의 일정률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또한 기업내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세액공제해 주거나 취득가액의 일정률을 특별상각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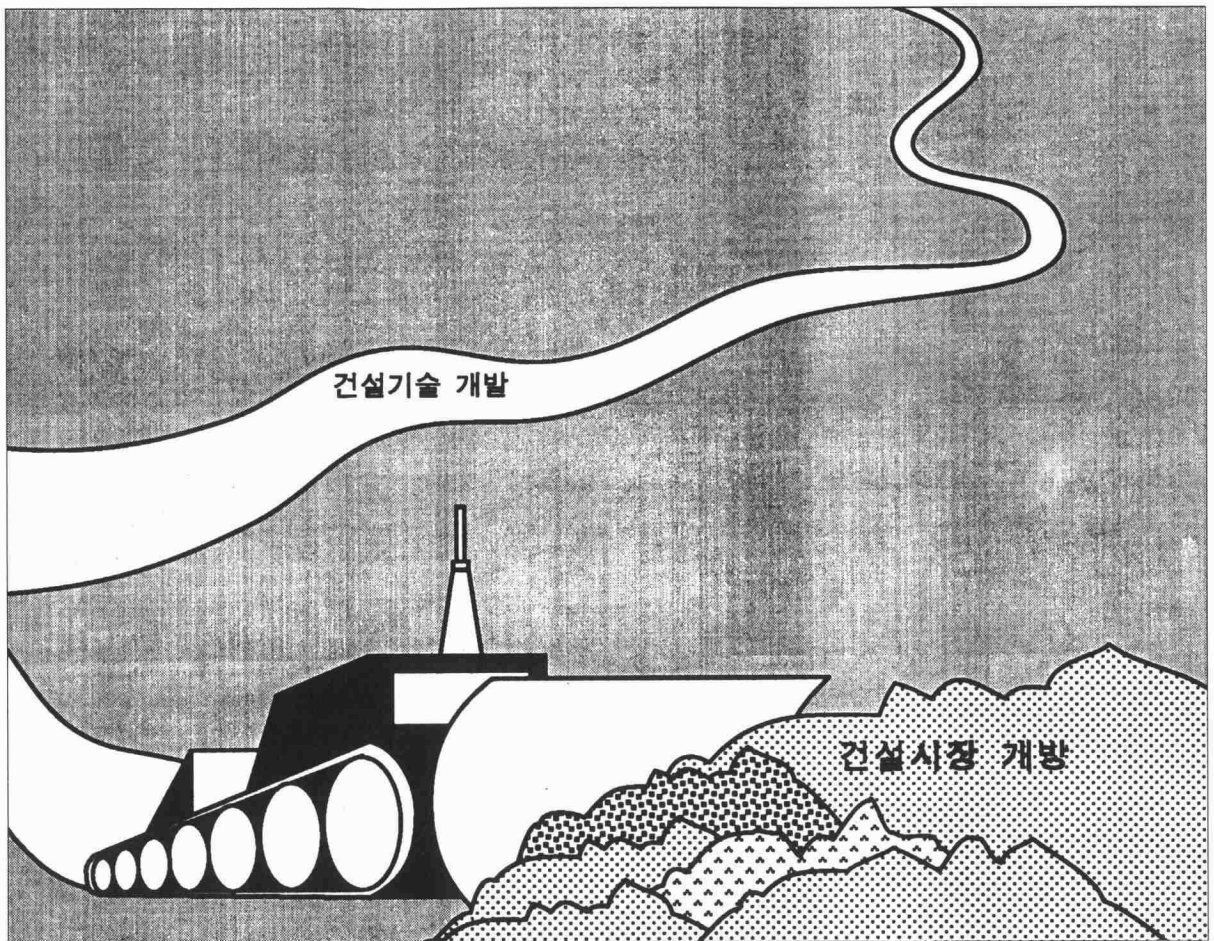
이 외에도 학술연구용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동제도는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연

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정부에서는 92년 1월 4일자로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현행 100분의 65의 관세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대상품목도 현행 연구용 실험실습기기 등 257종 외에 원자재·시약·부분품·건본 등 기업의 연구용품에 대하여도 80%의 관세감면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에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시험·연구용의 건본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으며,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자금의 지원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등의 금융기관과 국민투자기금 등에서 기술개발 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는데, 91년에 1조2,400억원, 92년에 1조5,800억원의 자금을 확보



하여 운영하였다.

기술개발자금을 융자하기 위하여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 한국기술진흥주식회사 등에서 기술개발자금을 投·融資, 리스 및 팩토링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92년 7월 1일자로 한국기술개발(주)를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로 확대·개편하여 기업의 기술개발 및 실용화 연구에 대한 금융지원 기능을 제고하여, 자본금을 1,500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증자·기술개발 채권발행 등을 통해 올해에는

7,700억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건설기술연구개발 5개년계획 마련

기술개발에 대한 직접투자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건설기술연구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동계획의 추진사업비 조성을 위하여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출연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최근 2년간 2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실적이 있는 민간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기술개발 투자

를 권고하고 있는데, 건설업자의 기술개발 투자액을 도급한도액 계산시 기술개발비의 10배를 가산해 주고 있으나, 내실있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기술개발 투자에 역점을 두어 적극적으로 기술개발을 해나가지 않으면 건설시장 개방을 앞두고 우리가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든 시점에 있음을 재인식하고,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경제정책연구소

의료보험 급여범위의 확대와 급여수준의 향상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1940년대 영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목표였다면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목표는 ‘요람 이전에서 무덤 이후까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보장제도는 한 나라의 경제 및 사회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보험급여의 범위와 수준이 시대와 경제수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회보장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어렵다.

89년 7월부터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우리나라는 1963년도에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과 의료보험법이 제정 공포되었으나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다가 60년대 후반부터 시범적으로 몇개 사업장에 대한 직장의료보험조합과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이 실시되어 왔다. 그후 76년 12월 의료보험법을 전면 개정하여 77년 7월 1일을 기하여 500명 이상 상시 고용 사업장과 공업단지 입주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로 의료보험이 의무보험으로 실시되었다.

79년 1월 1자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의

료보험이 실시되었고, 직장의료보험은 연차적·점진적으로 적용이 확대되어 현재는 5명 이상 사업장까지 혜택을 받고 있다.

한편 81년 7월 홍천·옥구·군위의 3개 군지역주민에 대한 농어촌 지역의료보험이 시범적으로 실시된 이후 이·미용사, 숙박업자, 개인택시, 의사 등 특정 직종에 대한 직종의료보험조합이 설립되었고, 88년 1월부터 전국 농어촌지역 자영자들에게도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토록 하였으며, 89년 7월부터는 도시 자영자 주민들에게도

의료보험 가입을 확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게 되었다.

보험급여의 현황

우리나라의 의료보험법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과 그 외의 국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의료보험법’으로 구분되어 있다.

연도별 보험재정 상태를 보면 직장, 公·敎公團은 모두 흑자이나 지역조합의 경우 90년도는 당기적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국고부담이 50%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91년도에는 예산에 반영되어 전체적으로는 흑자가 되었으나 92년도 상반기 현재 3개 지역조합은 적자 상태이다.

91년도 보험진료비에 대한 국고부담 상태를 보면 지역조합의 경우 조합부담 진료비의 35.73%를 국가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전국민에 대한 보험자부담 진료비 중 16.9%에 해당한다.

연도별 진료비 추이를 보면 89년에 비하여 91년도에 60.92%의 진료비가 증가하였으며 보험재정은 55.12%, 본인일부부담금은 71.71



양명생

보건사회부 보험급여과장

%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분만급여는 4.0%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요양급여와 분만급여로 분리하여 비교해 보면 91년도의 경우 진료건수의 99.5%가 요양급여이고, 분만급여는 불과 0.5%이나 진료비 비중은 요양급여가 96.0%,

보험급여 범위와 수준의 문제점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한 지는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보험급여 수준 향상에 대한 국민의 욕구는 증대하고 있다. 보험급여의 범위 확대와 수준 향상에 수반되는 것은 가입자 전체의 보험료 부담의 증가를 가져오고 특히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을 위한 국고부담의 증액이 불가피하게 된다.

의학의 발달로 첨단의료장비가 개발됨으로써 의료원가는 상승하게 되며 신약 개발과 신소재에 의한 각종 의료재료는 藥價와 재료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의료보험제도의 실시로 인해 쉽게 의료기관을 찾을 뿐 아니라 제3자와 공동부담으로 인한 受診者の 의료비 부담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경감으로 인한 수진율의 증가, 행위별 진료수가에 의한 보상방법과 방어적 진료의 상태에서 유발되는 과잉 진료와 과다 청구 등으로 인해 보험진료비 상승은 의료보험 진료수가 인상률과 경제성장률을 앞지르고 있는 실정이다.

91년도는 약 3조2천억원의 보험진료비 중 보험자 부담이 2조원이었으나, 92년도에는 약 3조6천억원의 보험진료비에 2조3,400억원의 보험자부담이 예상되어 보험진료비는 12.5%, 보험자 부담은 15.0%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국민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급여의 범위와 수준에서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다.

요양급여기간의 한정

첫째, 요양급여기간의 문제이다. 현행 제도는 상병의 종류, 진료형

〈표 1〉 연도별 보험자종별 보험재정 현황

(단위 : 백만원)

		89년	90년	91년
계	수입	1,811,979	2,432,063	3,206,679
	지출	1,585,109	2,164,039	2,483,898
직장	수입	948,131	1,080,259	1,313,375
	지출	849,773	842,258	989,951
공교	수입	304,566	357,786	433,717
	지출	262,067	314,277	346,031
지역	수입	531,077	994,017	1,459,588
	지출	433,942	1,007,504	1,147,917

註 : 결산기준임.

〈표 2〉 91년도 보험 진료비의 국고부담

(단위 : 백만원, %)

보험자종별		총진료비	구성비	보험자부담	구성비	환자 본인부담	구성비
계		3,200,996	100.00	2,006,081 (338.992)	62.67 (16.90)	1,194,915	37.33
지역	소 계	1,496,167	100.00	948,649 (338.992)	63.41 (35.73)	547,518	36.59
	농어촌	403,557	100.00	266,232 (109.638)	65.97 (41.18)	137,324	34.03
	도시	1,092,610	100.00	682,417 (229.354)	62.46 (33.61)	410,194	37.54
공교		407,261	100.00	254,079	62.39	153,182	37.61
직장		1,297,568	100.00	803,353	61.91	494,215	38.09

註 : 괄호 안은 국고부담액(비율)임.

〈표 3〉 연도별 진료비 추이

(단위 : 백만원, %)

	89년	90년	증가율	91년	증가율
총 진료비	1,989,168 (100)	2,927,822	147.19	3,200,996	160.92
보험자부담	1,293,259 (65.02)	1,889,495 (64.54)	146.10	2,006,081 (62.67)	155.12
본인부담	695,909 (34.98)	1,038,327 (35.46)	149.20	1,194,915 (37.33)	171.71

註 : 결산기준임.

증가율은 89년 대비 증가율임.

태(입원·외래), 요양기관, 보험자(조합), 자격(피보험자·피부양자)에 불문하고 국민 한 사람이 1년간 의료보험조합(보험자)에서 진료비를 부담하는 기간은 폐결핵을 제외하고는 18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질환·당뇨병·고혈압·백혈병·만성신부전증·혈우병·재생불량성 빈혈 등 1년 내내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환자는 반년치의 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첨단의료장비 이용시 보험 미적용
둘째, 전산단층촬영, 자기공명단층촬영, 초음파 검사 등과 같은 첨단 의료장비를 이용하는 진단이나 치료비용은 의료보험에서 제외되고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다. 이들 장비뿐만 아니라 개복수술을 하지 않고 신장결석을 제거 치료할 수 있는 신석쇄석기, 開頭術을 하지 않고 뇌수종 치료가 가능한 감마나이프, 디스크 치료를 쉽게 할 수 있는 레이저치료기기 등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 역시 시급한 과제이다.

특진비용과 상급병실 사용 부담
셋째, 지정진료(特診) 비용과 상



급병실 차액 부담으로 인한 본인부담이 과중하다는 것이다. 지정진료제는 종전의 특진제도가 규정화된 이후 실시 병원이 확대되고 특진을 및 부과행위의 증가로 환자 개인의 부담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들어 입원실 부족으로 입원을 위한 대기기간이 길어져 환자들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정부에서는 보건사회부장관 고시로 병원마다 일반병실을 50% 이상 확보토록 하고 있으나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

특히 3차진료기관의 경우에는

입원하기가 더욱 힘들기 때문에 상급병실 차액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더라도 입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자 부담이 가중된다.

제왕절개술에 의한 분만 증가
넷째, 제왕절개만출술에 의한 분만의 증가가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분만하는 산모의 신체적·의학적 이유로 부득이하게 제왕절개만출술을 실시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으나 현재는 정상분만이 가능한 경우에도 제왕절개만출술로 분만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93년도에 가면 제왕절개만출술이 약 25%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데, 주로 정상분만을 시행하는 산부인과 의원이 분만 및 입원실을 폐쇄하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다. 또한 정상분만이란 제왕절개만출술이란 의원급에 비하여 종합병원이 50% 이상 비싸게 나타나고 있다.

〈표 4〉 연도별 분만진료비(정상 및 제왕절개술 대비)

(단위 : 백만원, %)

	87년	88년	89년	90년	87년~90년 증가율
총 입 원	378,116	524,336	701,243	1,034,652	173.6
총 분 만	19,582	33,726	45,921	67,845	246.6
정상분만	12,878 (65.8)	20,990 (62.2)	27,259 (59.4)	37,570 (55.4)	191.7
제왕절개 분 만	6,704 (34.2)	12,736 (37.8)	18,662 (40.6)	30,275 (44.6)	351.6

자료 : 각 연도별 의료보험 통계연보

보험급여 범위 및 수준의 향상을 위한 대책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보험급여의 범위와 수준을 향상시키려면 무엇보다도 보험재정, 특히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추가 부담해야 할 보험재정의 확보 대책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동시에 國庫부담을 상대적으로 늘려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첫째, 180일 이내의 현행 급여기간의 완화 내지 폐지는 의료보험법 제30조(공·교의료보험법 제27조 제2항)를 개정해야만 된다. 그러나 180일 산정방법은 요양급여기준(보건사회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보험법 개정 이전에는 현행 산정방법(입원·외래 불문하고 月曆순서에 의함)을 입원 우선 산정후 외래 산정방법으로 하든지 매월간 진료비 중 고액부담 진료비부터 차감하여가는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택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전산단층촬영 등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 역시 보험재정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전산단층촬영을 급여하려면 자기공명단층촬영까지 하여야 하고 전산단층촬영보다 더 광범위하고 보편화되어 있는 초음파검사도 포함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 설치되어 있는 이들 장비를 보험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경우 연간 약 3,500억원의 보험재정이

현행 보험급여의 범위와 수준을 향상시키려면 무엇보다도 보험재정, 특히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추가 부담해야 할 보험재정 확보대책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동시에 국고부담을 상대적으로 늘려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추가로 필요하고 지역조합만 하더라도 약 800억원의 국고부담이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급여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게 되어 있다.

셋째, 현행 규정상 본인부담은 입원 20%, 외래 30~55%로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종별에 따라 본인부담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 평균 37.4%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보험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상급병실 차액과 지정진료비(특진비)까지 포함하거나 부분적이지만 비급여 대상 진료나 약품까지 합치면 본인부담이 지나치게 높은 현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에 해당된다.

상급병실 차액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현행 입원료를 대폭 올려주고 기준병실 확보율을 현행 50%에서 더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연구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특진비용부담은 특진을 받은 환자들이 특별한 진료를 받았다고 느낄 정도로 특색이 있고 보다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특진의사 이름만 신청서에 적어 놓고 실질적으로 특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특진료를 부과하는 잘못된

관행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진제도는 환자나 환자 가족이 어느 특정의사를 지정하는 현행 방법보다 진료담당의사가 판단하여 특진의사에게 의뢰하는 방법과 특진료 부과기준을 강화하여 특진료 부담 피해를 줄여야 할 것이다.

넷째, 분만급여 비용 중 제왕절개만출술의 상승으로 인한 분만급여비 증가문제는 규정이나 기준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분만자측 또는 의료기관측의 자의적 희망에 의한 제왕절개만출술을 억제하기 위하여 만약 보험자부담 분만급여비를 일정액으로 고정시킬 경우 제왕절개만출술을 꼭 필요로 하는 산모에게는 반대로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하기도 매우 곤란한 형편이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의 구성 및 운영

79년에 반전자교환기인 M10CN을 도입한 이래 遞信部에서는 전화망의 현대화, 대량보급 및 국산화 기술개발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이미 1가구 1전화의 시대를 넘어 전화신청 다음날 가설을 할 정도로 어느 나라에 못지 않은 전화공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화설비의 개발·생산에 있어서도 85년에 1만회선급 전자교환기의 국산화 개발에 성공, 공급한 이래 89년부터는 10만회선급 대용량교환기를 국산화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이들 제품을 수출전략제품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수출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컴퓨터와 통신을 근간으로 한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생활환경의 변화를 통하여 일반인들이 정보사회의 개념을 널리 이해하게 되었으며, 情報通信産業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산업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때에 정부가 범부처적으로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을 위한 국가전략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情報通信振興基金을 설치하여 정보통신 관련 산업 및 기술의 진흥을 추구하게 된 것은 때늦은 감이 있으나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에서는 체신부가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설치하게 된 배경과 9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중심으로 기금 운용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배경

우리는 현재 정보사회로의 진입 과정에 살고 있다. 정보사회란 사회 모든 분야의 국민경제·생산·유통 및 소비활동에 있어서 정보의 수집·가공·저장·이용 등 정보

활동에 소요되는 인력 및 비용의 비중이 다른 분야의 비중보다 큰 사회를 말한다.

이러한 정보사회의 진전을 가속화시켜 주고 정보의 수요증대와 다양화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바로 정보통신기술이다. 최근 들어 선진국들은 정보통신산업을 전략적 핵심산업으로 선정하여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및 시설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핵심기술의 보호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이전을 기피하거나 자체 개발 기술에 대하여 견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의 出捐金, 한국통신 주식배당금 등을 사용하여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능력의 확대와 핵심원천기술의 확보 및 새로운 고도 서비스의 발굴·실용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財源으로는 정보통신관련 민간기업에 대한 융자사업 또는 기술개발 지원에 있어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정보통신분야의 급격한 팽창 발전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재원확보와 다양한 지원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92년 12월 정보통신 연구·개발에 관한 법률(법



노희도

체신부 통신진흥과장

를 제4438호)을 제정하였고 이 법률에 의거,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93년부터는 이 기금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 방향

기술개발사업에 우선 지원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정보통신에 관한 기술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과 이의 실용화사업, 정보통신 설비 현대화 사업, 정보화 추진사업, 정보통신 인력양성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에 사용하게 된다.

93년에는 본 기금으로 기술개발사업과 설비투자사업만을 융자를 통해 지원하고, 정보화 추진사업, 정보통신 양성사업 등은 다른 재원으로 出捐을 통해 지원하기로 기금 운용계획을 확정하였다.

특히, 정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하여 대학·연구소·기업체간 협동연구 및 기술·정보교류의 촉진과 중소기업 기술개발 능력의 제고를 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자금의 수혜대상 사업자 선정시 産·學·研

정부에서는 정보통신분야의 급격한 팽창 발전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재원확보와 다양한 지원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92년 12월 정보통신 연구·개발에 관한 법률(법률 제4438호)을 제정하였고 이 법률에 의거,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93년부터는 이 기금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중소기업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기술개발과 제에 대해서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기금 운용·관리 전담조직 구성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관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기술력과 회계능력 및 전담조직 등을 종합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체신부는 정보통신전분야에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 전담조직을 갖추도록 하였다.

한국전자통신연구소는 앞으로 기

금운용·관리를 위한 세부요령을 작성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기금수혜대상자를 검토하여 체신부에 추천하게 되며, 기금수혜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의 사업진도 관리, 결과의 평가 등 사후관리에 관한 일체의 업무도 맡게 될 것이다.

기금운용 계획

체신부는 92년 10월 7일 93년 한해 동안의 기금운용을 위한 '93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였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보통신 관련 시설투자 및 기술개발분야에 총 1,0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금의 운용은 기술개발에 가장 큰 비중을 두어 자금의 70% 정도를, 設備投資에는 30% 가량을 할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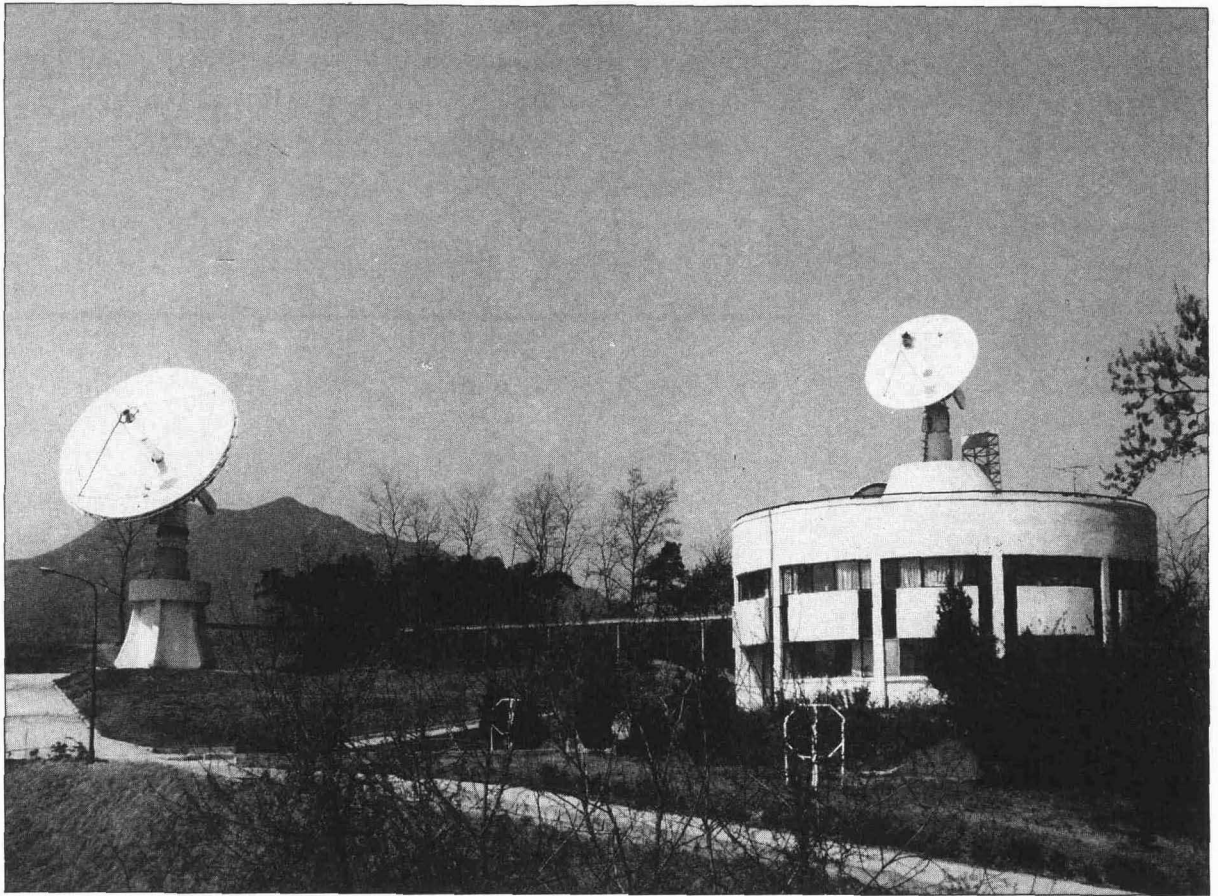
특히, 설비투자에 있어서는 주로 데이터베이스 사업자, 소프트웨어 개발업자 등 현재 有線通信에 비해 설비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가통신사업자들을 집중 지원하도록 하였다.

분야별 지원내용을 보면, 정보통신설비 구입 및 시설개체비 지원에 100억원, 국산 주전산기 보급확대

〈표〉 정보통신기금 운용계획

(단위 : 억원, %)

사업명	자금배정	이자율	융자기간	지원범위	비 고
정보통신설비 구입 및 시설개체비	100	6.5	5년 (2년 거치)	소요자금의 80% 이내	부가통신 70억원
국산 주전산기 보급 확대지원	240	6.5	5년 이내	소요자금의 100%	• 리스회사를 통한 간접지원 • 이자율은 리스회사에 대한 대출이자임.
정보통신기술개발	200	6.5	5년 (2년 거치)	소요자금의 80% 이내	
국책연구개발사업	500	6.5	5년 이내	소요자금의 70% 이내	



지원에 240억원으로 도합 340억원을 설비 현대화사업에 지원하고, 정보통신기술개발 지원에 200억원, 국책연구개발사업 지원에 500억원으로 도합 700억원을 기술개발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사업별 이자율, 융자조건 및 지원 범위는 <표>와 같다.

사업별 내용 및 지원방법

정보통신설비 구입 및
시설개체비의 지원
정보통신설비 구입 및 시설개체
비자금과 정보통신기술개발자금의

지원대상기업은 정보통신관련 부품 및 기기를 제조하는 기업과 VAN, 데이터베이스, 정보통신용 소프트웨어에 관련되는 기업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체신부의 공고내용에 따라 설비투자계획 또는 기술개발계획을 일정한 양식으로 작성하여 신청하면,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고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소는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의 필요성·기술수준·참여기업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신청내용에 대하여 1차 심사를 하고 체신부에 보고한다.

체신부는 그 심사 결과를 토대로 기금수혜대상기업 및 지원금액을 최종 확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원이 확정된 기업은 기금취급은행으로 지정 고시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에 필요한 일정조건을 갖춘 후 자금을 대출받게 된다.

국산 주전산기 보급 확대 지원

국산 주전산기란 87년부터 91년까지 정부 및 민간기업체가 635억원을 투입하여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중형컴퓨터로서 주전산기 I(톨러런트) 및 주전산기 II(타이

검)를 말한다.

정부에서는 지식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인 컴퓨터 산업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책개발사업으로 주전산기의 국산화를 추진, 제품화에 성공하였다.

이에 따라 체신부는 국산 주전산기의 수요확대정책, 홍보정책, 전문인력양성정책 및 국산 주전산기용 소프트웨어 개발정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왔다.

국산 주전산기 보급확대사업은 국산 주전산기 약 100대분의 구입자금을 확보하여 국산 주전산기의 수요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국산 주전산기 보급확대 지원자금은 리스회사를 지정하여 고시하고 고시된 리스회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원하는데, 정보통신관련 기업체뿐 아니라 국산 주전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 또는 단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체신부가 지정할 리스회사는 단순한 리스업무 외에 유지·보수 운영 등에 관한 기술상담 등의 업무도 병행함으로써 국산 주전산기의 보급 확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日本の 경우에는 50년대말 自國產 컴퓨터가 개발·보급되면서 국내 컴퓨터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자국산 컴퓨터보급 전문회사인 JECC(Japan Electronic Computer Co., Ltd.)를 61년 설립하였다.

JECC는 90년까지 3조3천억원의 컴퓨터 구입자금을 지원하여 자국산 컴퓨터의 판로를 지원하였다. 그 결과로 미국산 주도의 일본내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정보통신관련 시설투자 및 기술개발분야에 총 1,0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금의 운용은 기술개발에 가장 큰 비중을 두어 자금의 70% 정도를, 설비투자에는 30% 가량을 할당하였다.

컴퓨터시장을 自國產 주도로 전환 시킴은 물론 일본이 컴퓨터 大國으로 성장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국책연구개발사업 지원

國策研究開發事業이란 정보통신의 공통기술, 통신방식 등에 대하여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거나 高難度의 기술이어서 특정기관이 단독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보다 다수의 민간기업, 정부출연연구소 및 정부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정부가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책연구개발 사업자금은 현재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 디지털 이동통신시스템 개발 등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기술개발 프로젝트 중에서 참여기업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하여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정보통신산업 중장기발전계획(가칭)을 수립하고 이에 소요되는 핵심기술개발 과제를 발굴하여 이를 공고하고 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 업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노력 강화

정부에서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이 93년도초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기금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절차와 관련 양식을 마련하여 일간신문을 통하여 공고할 예정이다.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데이터베이스 관련 업체들이 대부분 적은 자본에 소규모의 기술인력 중심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기금수혜대상 사업자로 선정이 되어도 대출에 애로가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체신부는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技術信用에 대한 보증을 타 제조업체에 비해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의중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기금재원 확보와 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고도 서비스의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남원



경제정책연구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통한 환경의 보전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

현재 세계적인 현안과제로 대두된 폐기물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대량 소비사회 속에서 향후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될 자원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92년 정기국회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심의·의결되었다. 동법률은 92년 12월 8일자 로 공포되었다.

자원의 절약과 再活用 통한 환경보전과 경제발전 기반 마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환경처와 경제기획원·상공부·동력자원부 등이 공동으로 초안작성 과정에서부터 참여·협력하였으며, 91년 10월에 발효된 일본의 재활용관련법, 독일의 포장폐기물 규제, 미국의 자원재활용 등 외국의 입법경향을 검토하고, 국내의 각종 促進法과 支援法을 참고하여 입법안을 마련하였다.

국내 산업구조를

자원재활용체제로 전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폐기물 발생량의 급증과 매립지 확보의 곤란으로 기존의 처리방법으로는 폐기물의 관리

가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감량화시키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며, 생산·유통·소비·폐기단계 등에서 자원절약과 낭비제거 요인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 국내 산업구조를 자원이용체제로 전환하여 국내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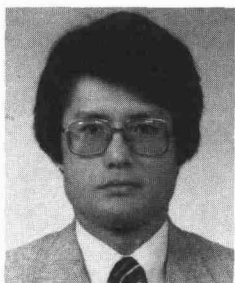
특히 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 등을 계기로 전세계가 ‘자원절약과 재활용 시대’로 나아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추진과 분리수거

제 정착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과소비형 사회구조를 자원절약·순환형 사회구조로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폐기물처리부담금제 도입

이 법률은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규제보다는 지원·지도 위주로 되어 있다. 특히 업종별·제품분야별 재활용 방향제시 및 권고와 폐기물 관리기금을 포함한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공업발전기금에 의한 재활용산업 지원, 공공분야의 재활용 제품 우선구매, 재활용단지 조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직접적인 재활용시책 추진과 아울러 간접적인 경제적 유도방안으로서 폐기물처리부담금제를 도입하였다. 폐기물처리부담금제는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위하여 생산단계에서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운용중인 預置金制度和 함께 원천적이고 사전예방적인 폐기물관리 수단의 일환으로서 도입된 것이다.



서동현

환경처 폐기물재활용과장

원천적 資源 재활용 기대돼

업종·제품별로

재활용촉진지침에 의해 지도

원료사용에 있어서 재활용을 촉진시켜야 할 자원재활용 업종에 대하여 연도별 재활용 목표를 제시하고,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제품의 구조·재질 등을 연구해야 할 제1종 지정제품 제조자에 대하여 재활용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품의 재질·성분 또는 분리수거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할 제2종 지정제품의 생산자에게 표시 기준을 제시하고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치가 있는 副産物을 지정하고, 이들 부산물에 대하여는 재활용 용도에 사용될 수 있는 규격이나 방법으로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각 업종·제품별로 지침에 따르도록 권고를 하고, 권고 미이행으로 자원재활용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에는 언론기관 등을 통해 발표하거나 필요한 措置命을 하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다.

폐기물의 감량화 및

분리수거 촉진

폐기물의 감량화를 위하여 상품 보호 및 특성유지 이상의 불필요한 과잉·과대포장을 억제하고 포장 폐기물의 감소를 위해 포장기준을 제정하며 그에 따라 제조자 등에게 조치명령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감량화시키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며, 생산·유통·소비·폐기단계에서 자원절약과 낭비제거 요인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 국내 산업구조를 자원이용체계로 전환하여 국내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일정규모 이상의 1회용품 다량사업 업종(음식점·목욕탕·백화점 등)에 대하여 1회용품 사용자제 등의 사항을 실천하도록 권고하며, 대규모 집단급식소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찌꺼기 등을 사료·퇴비화하여 쓰레기의 자원화를 촉진하도록 규정하였다.

분리수거 촉진을 위해서는 일반 폐기물 다량 배출자는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종류·性狀별로 분리·보관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적·지역적 분리수거체계를 구성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폐기물예치금 및 부담금제도 시행

현행 폐기물예치금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담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예치금은 재활용이 용이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부담금은 환경상 영향이 큰 제품·용기로서 재활용이 곤란한 품목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예치금 환불대상을 민간단체·수집상까지 확대하여 회수·수집을 촉진하며, 실제 회수·재활용 비용을 감안, 예치금의 料率을 조정하여 기업의 참여를 촉진할 계획

이다. 이와 함께 예치금 및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폐기물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폐기물관리능력 제고를 위하여 基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지원 조항 등을 신설하였다.

재활용산업의 육성

또한 폐기물관리기금 외에 공업발전기금·에너지합리화기금 등 관계부처의 관련기금 및 자금으로 재활용사업을 지원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토록 하였으며,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 사업의 실시, 자금지원,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 재활용제품의 품질·규격 기준제정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재활용사업자의 사업부지 제공 등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은 재활용 단지·집합장을 조성하고, 재활용사업자에게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장용지를 우선 공급하도록 하였고, 재활용제품의 생산자와 사용자 등은 자원재활용협의회를 구성, 상호협조하여 자율적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96년까지 1조 2,500억원 절감

이번 법률 제정으로 폐기물의 수집·운반비·매립비 등의 처리비를 절감하고 재활용에 의한 수입대체 및 원료조달 효과를 얻게 되었을 뿐 아니라, 사업자의 사업행위시 자원절약과 재활용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생산·유통단계에서의 원천적 자원재활용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쓰레기 재활용에 따른 효과로는 96년까지 재활용률 증가(7.4%→30%)에 따라 1,100만t의 쓰레기 감량이 예상되며, 쓰레기 감량에

따른 폐기물처리비의 감소 효과로 3,740억원, 폐기물 자원화 효과로 8,800억원 등 모두 1조2,54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폐기물이 비위생적으로 매립되고 있어 토양·수질에 환경오염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폐기물의 이동을 최소화하여 폐기물 발생장소에서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 이동시 발생하는 환경관련 민원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되었다. 사회문화의 구조도 과소비형에서 자원절약형·자원재순환형으로 형성·유지할 수 있게 될 것

이다.

정부에서는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 추진하고자 한다. 공공분야에서 재활용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와 재활용제품의 규격·품질기준 제정 등으로 재활용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고 적정한 가격을 형성토록 함으로써 제품의 신뢰도를 높여나갈 것이다. 이 외에도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재활용단지의 조성으로 재활용제품의 안정적 공급과 투자·영업활동 촉진의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나라경제



경제정책연구소

정밀측정체제 확립을 위한 計量法 개정

지난 2~3년 사이 우리 무역은 80년대말의 흑자기조로부터 급격히 후퇴하여 계속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보다도 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에 있다. 낮은 임금에 바탕을 둔 가격경쟁은 이미 그 한계에 와 있으며, 이제는 기술과 품질로 세계시장에서 싸워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제조업경쟁력 강화대책을 추진하고, 業界는 업계대로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에 힘을 모으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제품의 품질을 결정짓는 부품이나 원자재의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계량 측정기의 정밀·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정밀 측정기술의 개발·보급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산업 정밀도, 지식집약단계 수준에 도달해야

현재 우리 산업의 정밀도 수준은 현재 철강·TV 등의 생산에 필요한 기능집약단계(1/1,000mm의 정밀도)를 넘어 자동차·통신기기 등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집약단계

(5/10,000mm의 정밀도)에 있으나, 앞으로 인공위성·대형전산기·신소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知識集約段階(1/10,000mm의 정밀도)의 수준에 도달하여야만 선진국과의 경쟁이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세계 여러나라는 정밀·정확도 확보를 위하여 국가가 측정표준의 확립에 막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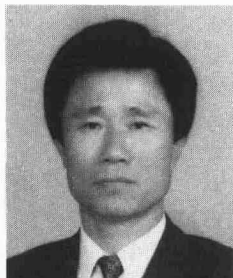
만약 대륙간을 날고 있는 여객기의 計器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그 여객기는 정상항로를 벗어나게 될 것이므로 이 경우 길이측정의 정밀

·정확도는 1만분의 1mm 이하가 확보되어야 하며, 로켓 발사시 각도 1도의 측정오차는 100km거리의 표적물에서 30m를 벗어나게 된다는 점은, 현대 고도정밀산업에서 정밀·정확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정밀·정확도 향상 위해 계량법 전면 개정

이처럼 우리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우리 제품의 정밀·정확도의 향상이 시급하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국가의 계량 및 측정에 관한 표준을 확립하고, 이의 체계적 보급과 통일적 적용에 필요한 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계량법을 전면 개정하여 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정비도 서두르고 있다.

지금까지의 계량법은 상거래에 사용되는 生活計量器에 대한 규제가 그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어 산업측정 분야가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선 法の 명칭을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로 고치고 산업의 정밀측정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는 한편, 생활계량기



김영창

공업진흥청 계량표준과장

에 대한 기존 행정규제는 대폭 완화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교정검사 효율화를 위한

제도 정비

첫째, 측정기의 정밀도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정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工業振興廳長이 교정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였다. 측정기의 교정검사는 산업체·연구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정밀측정기기를 그보다 더 정밀도가 높은 측정기와 비교하여 그 정밀도의 차이를 교정하여 정확한 측정값을 구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서 궁극적으로는 韓國標準科學研究院에서 확립한 국가표준과 일치시키기 위한 관리방법이다.

현재 이러한 교정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교정검사기관 274개를 지정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정밀도 확보에 필요한 측정설비·환경조건·기술인력 등 교정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기준과 방법을 새로이 개발하여 산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측정기에 대한 정밀도 유지에 기여하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하게 되었다.

표준물질의 인증제도 신설

둘째, 물질의 값을 부여하는 데 사용하는 표준물질의 수요 확대에 대비하여 標準物質의 認證制度를 신설하고 그 인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업진흥청장이 표

정부에서는 우리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우리 제품의 정밀·정확도의 향상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의 계량 및 측정에 관한 표준을 확립하고, 이의 체계적 보급과 통일적 적용에 필요한 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계량법을 전면 개정하여 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준물질의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표준물질의 개발·보급이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표준물질은 정밀도·정확도가 그 생명이나 그동안 표준물질에 대한 인증절차 등이 없이 제작 및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정밀·정확도를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앞으로는 권위와 능력이 있는 기관에서 표준물질을 인증토록 하여 공신력을 부여하고 그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산업의 고도화와 환경측정 분야 등 각종 정밀측정 분야에 대한 수요의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조 또는 수입된 표준물질의 시중유통을 억제하는 노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험·검사에 대한 신뢰성 확보

셋째, 시험·검사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국내외 시험·검사기관간의 상호인증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업진흥청장이 시험·검사능력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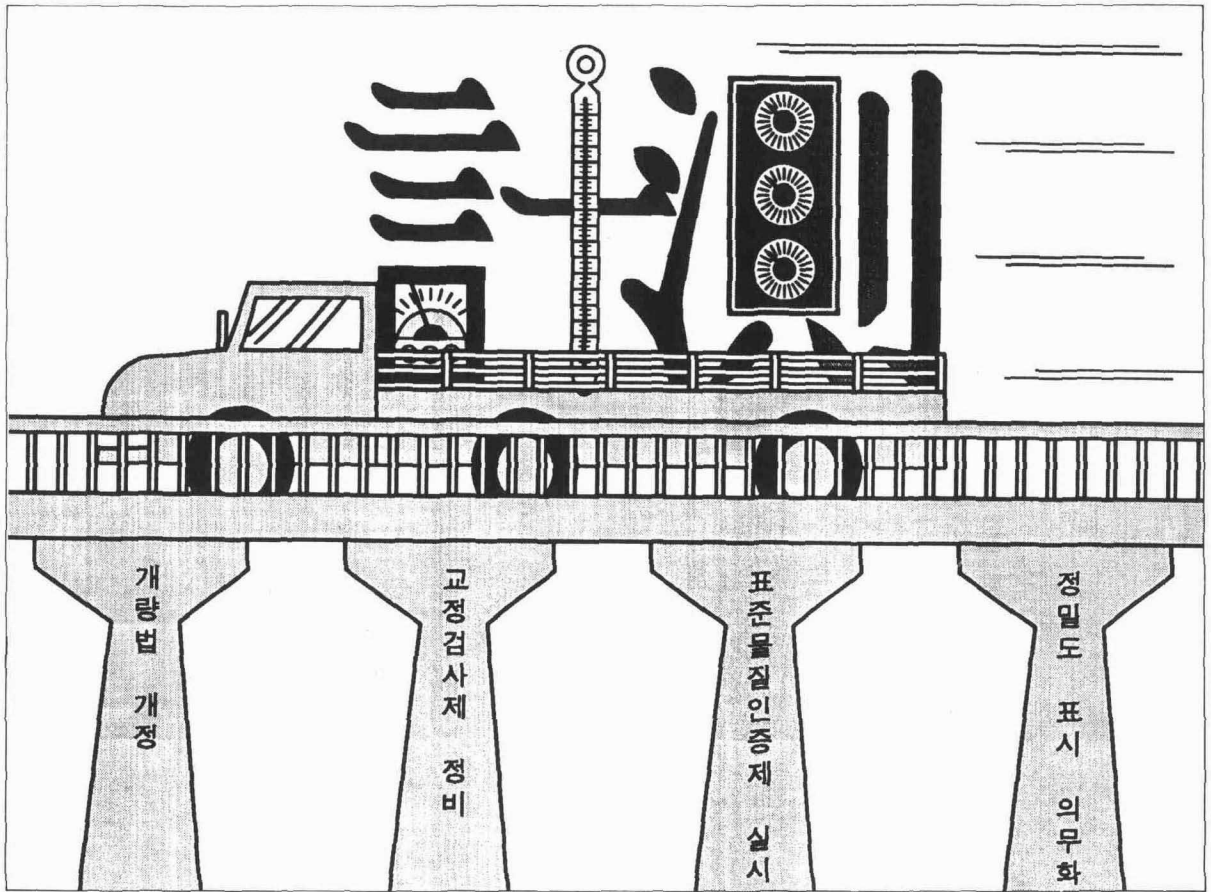
현재 국내에는 많은 시험·검사

기관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기술인력·측정설비·환경조건 등이 분야별 특성에 맞게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 시험결과의 통일성을 기하지 못하고 시험검사기관간 검사가 중복되는 등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여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상호인정을 위한 국내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무역에 있어서 기술장벽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계량기에 정밀도 표시 의무화

넷째,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계량기에 精密度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였다. 계량기 중 제작업 등록을 하도록 한 134개 품목 중 상거래나 증명용으로 빈번히 사용되는 18개 계량기에 한하여만 검정을 받아 판매나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모든 계량기에 대하여 정밀도 등의 표시를 의무화시켰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규제가 어려웠던 계량기에 대하여도 정밀도를 표시하도록 하여 불량계량기의 유통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 제작 계량기뿐만 아니라 수입계량기에 대하여도 정밀도



표시를 의무화함에 따라 불량·저질 계량기의 반입을 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측정기의 정밀도 및 정확도 유지와 향상을 위한 조치

이와 같이 계량 및 측정의 관리는 최종 제품의 품질을 좌우하는 원천적인 생산조건으로서 고도정밀 산업에 있어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절실한 분야이며,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超精密을 요하는 고부가가치제품 개발과 생산이 당면한 과제임을 감안할 때, 측

정기의 정밀도 및 정확도 유지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마련되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정부의 노력은 물론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다 함께 요구된다고 하겠다.

특히 모든 산업활동이 국제화 추세에 있고 품질관리 체제도 품질시스템 체제의 유지 여부를 요구하고 있으며, ISO 9000시리즈에서 요구하는 인증요건의 중요부문을 품질보증 모델로서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의 유지관리 상태와 국가공인 표준과의 검·교정 여부를 중시하고 있어 각 산업체에서 이에 대

한 인식과 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시점에서 추진된 이번 計量法 개정이 우리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관계기관과 업계에서도 법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기대한다. 국립

實需要者 위주의 주택공급체계 확립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

주택은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가장 필수적인 생활 수단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사업으로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아직도 주택에 대한 불건전한 賣買行爲가 근본적으로 해소된 것은 아니다.

정부에서는 주택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되도록 實需要者 위주의 주택공급체계를 확립하고, 주택건설사업자의 倒産이나 不實施工으로부터 입주자를 보호하며, 주택사업자로 구성된 協會 및 住宅事業共濟組合을 설립하여 주택산업의 전문화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住宅建設促進法을 개정하였다. 이와 함께 주택의 건설·공급제도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實需要者 위주의 주택공급체계 확립

현재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소형의 국민주택에 대해서만 轉賣 또는 轉貸行爲를 제한하고 있으나, 中型 이상의 민영주택은 제한이 없어 당첨 즉시 많은 웃돈을 붙여 거래하는 등 투기행위

가 이루어지고 있어 민영주택에 대하여도 당첨시부터 입주개시일 이후 60일까지의 기간동안은 轉賣 또는 轉貸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집이 없는 근로자나 서민들의 주택마련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주택조합의 경우, 현재는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에만 시장·군수의 認可를 받도록 하고 해산은 마음대로 하고 있어 조합의 해산후 조세부과 등 각종 행정처리에 어려움이 많고 조합주택 건설과 관련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법에서는 주택조합을 해산

할 경우에도 認可를 받도록 하였으며, 주택소유자 등 무자격자가 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無資格者가 있는 주택조합 등에 대하여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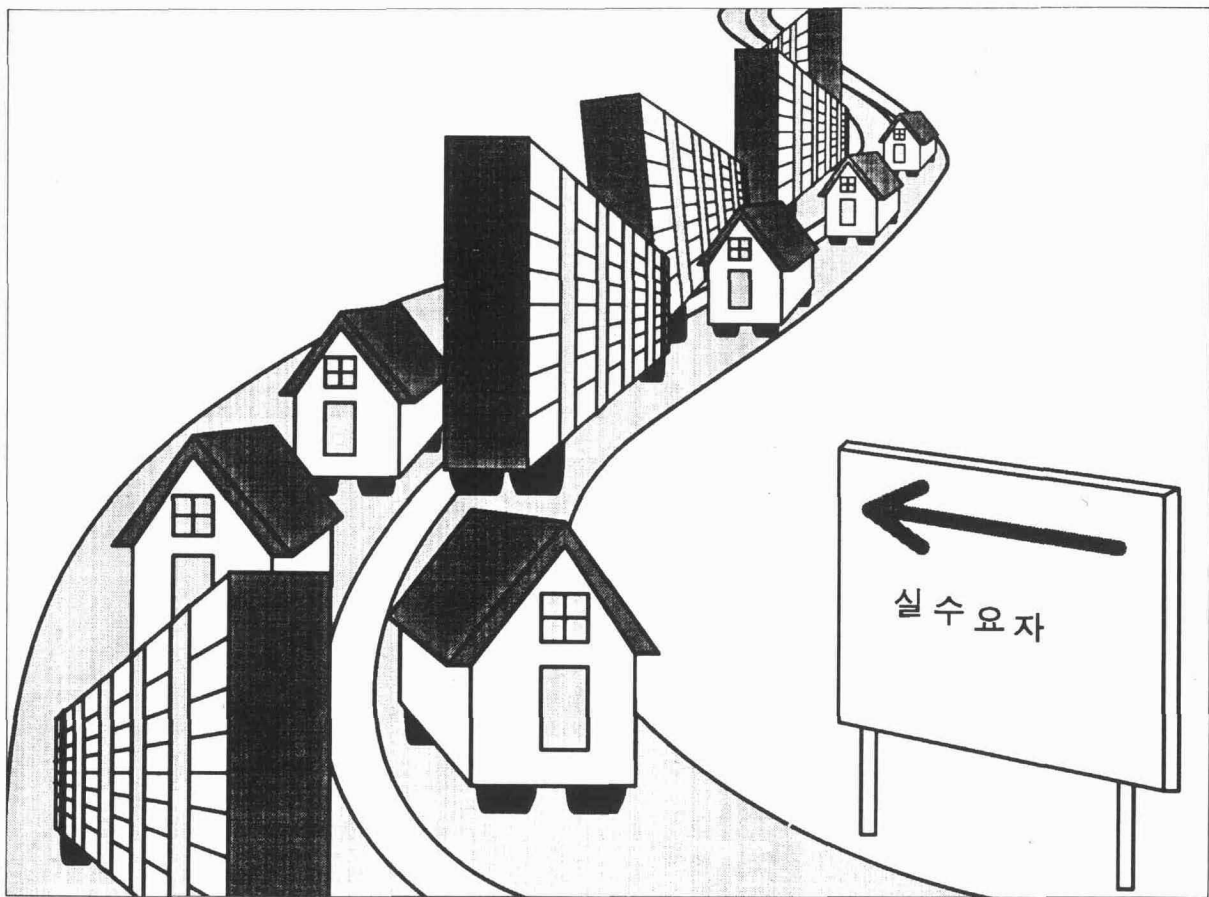
또한 현행 규정상에는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 등으로 너무 막연하게 표현하고 있어 법 적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개정법에서는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入住者貯蓄 등의 증서·住宅償還社債, 주택조합원 명의 등을 讓渡하거나 이의 양도를 알선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거나 이미 체결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入住者 보호 강화

현재는 주택건설업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주택을 압류함으로써 입주대상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 후부터 주택의 입주개시일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은 주택



최종수
건설부 주택정책과장



을 건설중인 垆地나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者의 동의 없이 抵當權 또는 假登記擔保 등 담보물권 및 傳貰權·地上權 또는 등기되는 不動產賃借權을 설정하는 행위나 매매·증여 등 처분행위를 금지하였다.

그리고 주택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업면허를 보유하지 아니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建設業法상의 시공·관리 및 벌칙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면허 등 주택건설 자격이 없는 자에게는 주택건설을 都給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주택건설등록업자들로 구성된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에서 분양 및 하자보증을 하도록 하여 입주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주택건설 촉진 제도

주택건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현재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공기업인 地方公社에게도 주택건설사업 능력을 부여하였다.

또한 현재는 大韓住宅公社 및 지정업자만이 발행할 수 있는 住宅償還社債를 앞으로는 자본금·주택건

설 실적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등록업자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 유도

주택산업의 전문화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民法上の 비영리법인인 한국주택사업자협회와 한국중소주택사업자협회를 각각 지정주택사업자협회와 등록주택사업자협회로 법정단체화하였다.

이와 함께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상호 협동조직을 통한 신용도를 높이고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분양보증

등 주택사업에 관한 각종 保證 및 주택사업 운영자금 등 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을 행하는 住宅事業共濟組합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위법행위에 대한 行政制裁 강화

등록업자·주택관리업자·주택관리사 및 주택자재 생산업자들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行政的 制裁를 강화하였다.

첫째, 주택건설등록업자의 등록증 대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登錄을 말소토록 하였고, 등록업자가 공사시공상의 하자로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등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6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강화하였다.

둘째, 주택관리업자가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12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였고, 공동주택의 관리상 하자로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등 위반사항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을 6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강화하였다.

셋째, 주택관리사가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였다.

넷째, 주택자재 생산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姓名 또는 商號를 사용하게 하여 주택자재를 생산하게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였고,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주택자재를 생산하는 등 위반사항

현재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소형 국민주택에 대해서만 轉賣 또는 轉貸行爲를 제한하고 있으나, 中型 이상의 민영주택은 제한이 없어 당첨 즉시 많은 웃돈을 붙여 거래하는 등 투기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민영주택에 대하여도 당첨시부터 입주개시일 이후 60일까지의 기간동안은 轉賣 또는 轉貸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에 대한 영업정지기간을 3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강화하였다.

다섯째, 등록업자·등록관리업자·주택관리사 및 주택자재 생산업자가 登錄證·免許證 또는 資格證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罰則 강화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들의 소득 수준 향상과 身體刑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자에 대한 罰金刑의 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하였다.

罰金刑의 경우 1천만원 이하는 2천만원 이하로, 500만원 및 100만원 이하는 1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과태료도 5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하였다.

주택투기 억제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 기대

금번 改正法律은 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이 法 개정으로 국민들의 주택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사업자의 부도나 부

실시공으로부터 입주자를 보호하며,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주택의 건설·공급과 관련한 불법적인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에서는 금번 住宅建設促進法의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금년 2월말까지 公布할 예정으로 住宅建設促進法施行令의 개정을 추진중이다. 

경제상담 안내

경제정책에 관한 건의나 경제통계에 대한 문의 등 경제관련사항 모두를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제상담전화 「우리의 경제」

이용전화 ☎ (02)507-2100

☎ (02)507-3100

일본의 국토면적은 전세계의 0.3%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작은 나라가 세계 GNP의 6분의 1(15~18%)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본인 스스로도 놀랄 만큼 굉장한 것이며, 그 원동력이 기술개발이었다는 것은 두 말 할 필요도 없다.

한 예로 우리 주변에서 인기있는 상품을 보자. VTR은 미국의 암팩스사가 방송국용으로 만든 위대한 發明品으로 당시의 가격은 2천만엔이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이를 200분의 1로 줄여 10만엔대의 가격에 대량 생산하여 세게시장을 석권하여 버렸다. 과연 누가 산

‘미국의 혁신’이라는 특집기사에서 “단번에 노다지를 찾는 혁신보다 매일 조금씩 개선해 나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큰 혁신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미국기업은 알고 있다. 즉, 제품개발(product innovation)보다, 공정개선(process innovation)을 실현해야만 무역적자도 줄어든다”고 이야기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기술분야의 새로운 용도의 발견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92년 5월 일본의 「과학기술 저널」에 나타난 국제간 기술마찰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기업의 연구활동조사를 보면 일본기업의 특허보유건수는 91년 현재 36만8,964건으로 이 중 국제특허가 27만3,997건을 차지, 전체의 74%를 점유하고 있어 기술개발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지배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일본은 이미 발명된 원리를 응용하여 새로 창출해 낸 산업기술을 세계로 확산시켜 나아가고 있으며,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의 세계시장을 상당부분 점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무엇이 일본의 과학기술주가를 이처럼 상승시켰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차세대 산업기반기술 연구개발전략은 무엇일까?

과학과 경제발전 병행시키는 정책 시행

60년대의 일본은 과학과 경제발전을 병행시키는 정책을 전개하여 일찍부터 과학기술진흥정책에 힘써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혀왔다.

70년대에는 산업계의 實需要에 부응하는 기술혁신을 꾀하여 왔으며,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기술개발방향과 개발목표를 다시 설정하였다.

80년대에는 기술혁신과 경제정책 상호의 혁신을 위한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연구개발보조금·知的財産權의 무역관련측면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경제성장과 사회개발에의 과학기술의 기여강화를 위한 기술혁신과 보급을 촉진하였으며, 경제활동 등 광범한 활동과 과학기술의 병합에 관한 검토를 시작하였다. 한편으로는

日本の 차세대 산업기반기술 연구개발제도

민태식 과학기술처 부이사관/駐日과학관

업용 VTR을 가전제품으로 만들 생각을 하였을까. 분명 미국사람은 아니었다. 또한 반도체 LSI도 미국에서 발명 당시에는 1개당 5만엔에서 10만엔 이상으로 미사일이나 위성에만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일본인들은 이를 전자계산기에 사용할 생각을 하였으며 가격도 200엔 정도로 낮추어 버렸다.

‘새로운 용도를 발견하는’ 日本의 기술개발

여기서 우리는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기술의 본질이 ‘새로운 원리를 계속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용도를 발견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89년 6월 미국의 『비즈니스 위크』誌가

貿易逆調에 대한 국가간의 분쟁을 우려, 국제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초연구에 대한 균형있는 공헌과 성과의 보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국가간 공동연구를 시작하였다.

90년대에는 기술혁신을 보급·촉진하는 것과 경제·교육·고용정책 등에의 일관성 부여, 기초연구에의 公의지원 확대, 그리고 기술혁신 시스템과 국제상호간 의존 등에 그 주안점을 두었다. 여기서 관찰되는 것은 일본의 과학기술개발은 시작단계에서부터 경제와 사회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상호 일관되게 수립·시행되어 왔으며, 평가되어 왔다는 점이다. 또한 전반적인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부의 책임은 기술개발을 위한 적절한 환경조성에 있으며, 기술개발대상의 선정은 실수요자인 기업의 의사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0년대 이후 개발분야연구에 치중

그러면 90년대에 일본이 집중적으로 추진중인 기술개발분야는 무엇인가?

우선 기초·응용·개발분야를 비교하여 볼 때, 60% 이상이 개발연구에 집중되고 있으며, 응용연구가 24%, 기초연구가 13% 수준이다. 정부와 민간의 투자비율은 91년 발간된 「과학기술백서」에 따르면 미국과 프랑스가 50 : 50, 서독과 영국이 65 : 35인 반면, 일본은 정부와 민간의 비율이 20 : 80으로 대부분이 민간투자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산업현장의 수요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에 의해 기술개발대상이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기초연구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히 국제적인 公共財를 축적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정부가 연구개발비를 주로 부담한다. 이것은 일본의 과학기술개발전력이 부가가치가 높은 부분은 국내 산업계에서 빈틈없이 장악하고 있는 반면, 국제적으로는 부가가치가 적고 세계가 공동으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택하여 공공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국제적인 위치를 격상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급속한 기술진보에 따라 산업발전이 크게 기대되는 분야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 우선 일본은 90년대의 기술혁신 공정의 다양화에 따라 기술간의 상호의존 및 보완이 이루어져 자체산업이 다양하게 발전될 분야로 신소재·정보처리산업·생명공학·에너지·항공·우주·건설·교통분야를 선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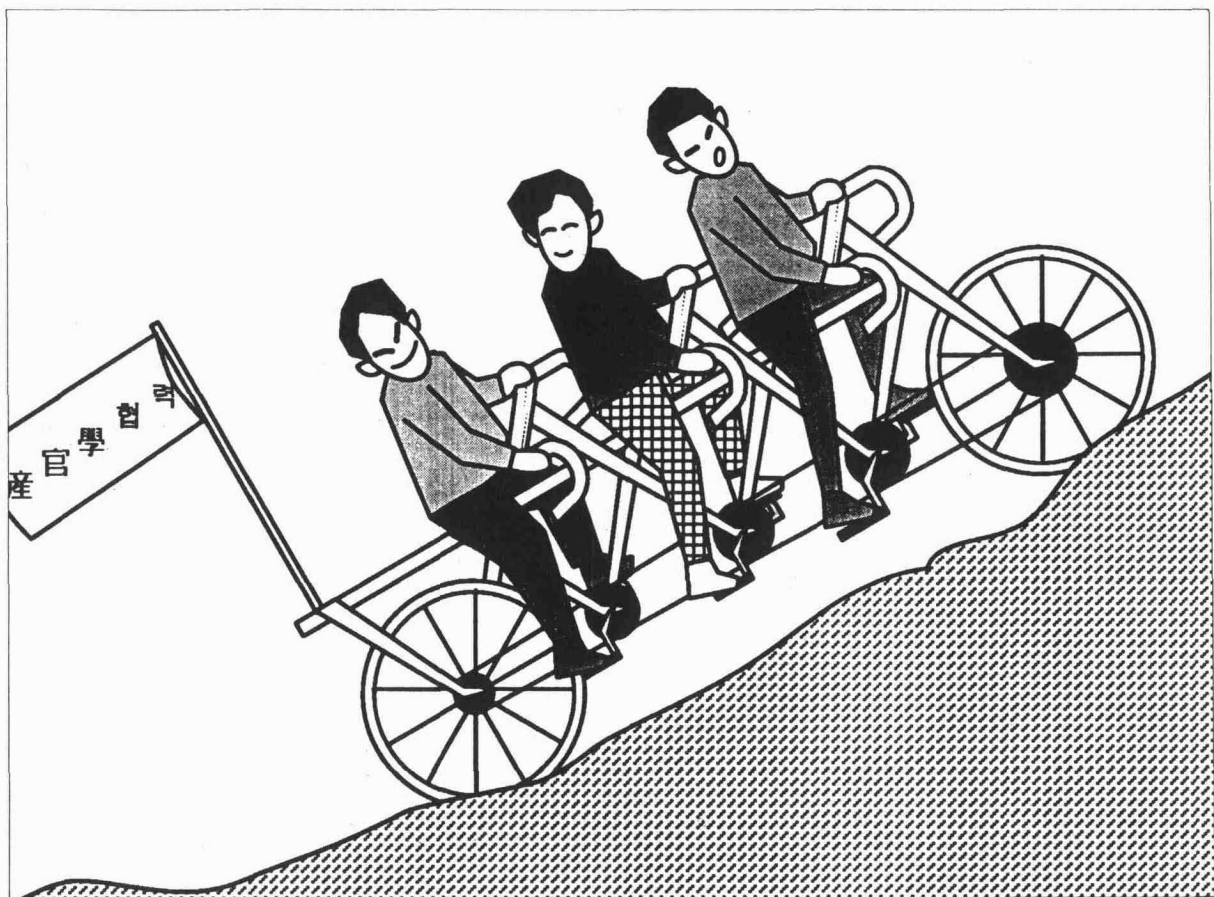
'차세대 산업기반기술연구제도' 도입으로 기술선진국 指向

이제 일본이 선진대열에서 가장 앞서고자 야심만만하게 설정하고 있는 '차세대 산업기반기술연구개발제도'의 내용을 살펴본다.

이 분야는 연구의 효율이 떨어지는 분야나, 차세대 산업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개발시켜 나가야 할 분야이다. 또 장기적인 연구개발계획과 대량의 연구개발투자가 요구되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기술개발능력을 최대한 활용, 철저한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産·官·學 기술활용체제로 규합시켜 나가야만 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초기에는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정부가 선도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하여 기존산업의 혁신과 신규산업의 창출, 그리고 첨단산업구조의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日本은 70년대말 △ 경제대국으로서의 국제적 공헌 △ 資源小國으로서의 제약의 극복 △ 활력과 여유의 양립에 산업기술개발방향을 두고, '경제안전 보장의 확립'과 '기술입국에의 길'을 국민적 목표실현의 중요과제로 정하였다.

그러나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에 따라 국민의 생활양식도 변화하였기 때문에 80년대에는 △ 인간간의 접근 △ 자원에너지의 제약 극복 △ 활동공간의 확대로 그 목표를 변경하였으며, 21세기까지 해결하여야 할 연구과제로는 자원·의료·복지·도시사회·환경보존·정보·재해방지·식량·생산의 9개 분야를 설정하였다.



産・官・學 기술활용체제 구축

81년 8월 일본 산업계는 △기초적인 발전단계의 기술이기 때문에 개발리스크가 큰 분야 △공동기반기술로서 그 개발성과가 광범위한 분야의 연구개발에 파급효과를 주는 것 △기술혁신의 기폭제로서 선진각국에서 주목을 받으며 국제적으로 선의의 경쟁이 확대될 수 있는 기술영역분야 △일본이 기반기술의 상당부분을 해외에 의존하여 왔으나今後로는 용이하게 기술을 도입할 환경이 적어지는 분야(신소재·생명공학·신기능소재 분야)를 주요 연구개발과제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이러한 기반기술의 구체적인 연구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82년 10월 '차세대 산업기반기술 연구개발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되

었을 때는 新材料·생명공학·신기능素子の 3개 분야로 12개 과제 27억엔으로 출발하였으나 92년 10월 현재 초전도·소프트웨어 등 2개 분야가 추가되어 5개 분야로 확장, 연구과제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11개 과제가 완료되었다.

또한 90년도부터는 동분야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을 설정, 혁신성이 매우 강하고 그 파급효과가 크며 광범위하게 정착될 기반기술분야, 연구개발에 대체로 10년간의 장기간이 소요되고 연구개발 자금도 많이 소요되며, 연구개발 리스크가 큰 기술, 장래 산업에서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기술에 선정의 주안점을 두고 적극적인 기술개발사업을 시작하였다.

신재료·생명공학·신기능素子 등

5개 분야 중점 추진

한편,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는 복수의 연구기관 및 복수의 방법에 의한 연구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 개발방식을 채용하는 한편, 연구개발 기본계획을 작성할 때 대체로 10년간의 전체 계획을 세운 뒤, 설정된 개발목표에 대하여 연구개발 상황과 성과를 평가하되, 연구개발 추진의 적정화를 기하고 있다.

현재 90년대에 추진할 차세대 산업기반기술 연구개발 분야는 超傳導 분야(초전도재료 및 초전도소자), 신소재 분야(화인 세라믹스, 고분자 재료, 금속·복합재료, 광전자재료), 생명공학 기술 분야(바이오 리액터, 세포 대량배양기술, 재조합 DNA 이용기술, 기능성 단백집합체 응용기술, 복합당질생산 이용기술), 신기능소자 분야(耐환경 강화소자, 초격자소자, 3차원 회로소자, 바이오소자, 양자화 기능소자), 소프트웨어 분야(신소프트웨어 구조화 모델)로서 첨단 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보급에 노력

그동안 차세대 산업기반기술 연구개발제도를 추진하여 얻은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초전도분야에서 초전도재료·초전도소자에서, 신재료분야에서는 화인 세라믹스·고효율 고분자 분리막 재료·도전성 고분자재료·고결정성 고분자재료·고성능결정제어합금·복합재료·광반응재료에서 좋은 성과가 나왔으며, 생명공학기술 분야에서는 바이오 리액터·세포대량 배양기술·재조합 DNA 이용기술, 신기능소자 분야에서는 耐환경 강화소자·초격자소자·3차원 회로소자·바이오소자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개발과 신제품 그리고 독창적 기술개발 가능성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도 도입 당시인 81년부터 90년 현재까지 특허등록건수는 540건(出願中인 것 포함시 2,945건), 국내외 학회 등에서 발표한 논문수는 8,400건에 이르고 있다. 연구개발 성과는 국내

외적으로 特許 등을 통한 공업소유권화에 치중되고 있으며, 기술개발 성과에 따라 얻어진 특허 등의 공업소유권을 국내외 기업에 일정조건과 함께 실시하는 것도 허락하고 있다. 또한 산업계로의 기술이전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일본 산업기술진흥협회를 창구로 연구성과의 활용·보급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한 프로젝트', 기술혁신방향 재창출 기대

이와 같은 日本의 경험을 감안하여 볼 때, 지난해부터 우리나라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 프로젝트(HAN PROJECT)'는 연구자체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다면 2000년대의 기술혁신 방향을 새로운 차원에서 재창출해 나갈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제품개발분야에서는 산업계의 당면 애로기술의 해결과 신제품개발에, 기술개발분야에서는 신기술 창출과 혁신제품 창출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많은 특허와 논문이 발표되어 기술개발의 집대성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이 분야는 국가가 선도적인 입장에 서서, 새로운 관리 및 평가제도에 입각한 개발정책의 추진이 꾸준히 요구되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개발비의 투자도 요구된다.

한정된 지면이기는 하나, 10년전에 시작되어 오늘에 이른 일본의 차세대 산업기반기술 연구개발제도를 되짚어 보면서 부러움과 뼈저린 자기관성이 교차되는 가운데, '과거는 영원히 정지해 있고, 현재는 화살처럼 빠르게 날아가고, 미래는 주저하면서 다가온다'는 옛 성인의 이야기가 문득 머리속에 스치고 지나간다. 현재와 미래에서 무한한 연금술을 창출해 낼 과학기술, 2000년대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과학기술의 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세계경제의 새로운 흐름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번영의 고삐를 잡고 정상에 올라선 국가는 세계경제 체제의 새로운 흐름에 남보다 한 발 앞서 편승한 국가이다.

과거 스페인·포르투갈이 주도하던 중상주의 시대에 金·銀은 國富의 상징이었다. 모든 나라가 이 금·은의 수집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직물·양모 등 제조업 육성에 꾸준히 눈을 돌린 것은 영국이었고, 그들은 18세기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이룩하였다.

산업혁명 후의 기계문명시대에서 세계에 군림할 수 있었던 나

한국경제, 아르헨티나처럼 되지 않을까(下)

안세영 상공부 서기관/ UNIDO 파견

라는 좋은 철강을 만들 수 있는 나라였다. 왜냐하면, 기계문명시대에 철은 자동차·조선 등 모든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의 核이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시대는 산업사회 후기, 정확히 말하면 情報化時代이다. 이 시대에 산업의 쌀은 반도체이다. 모든 제품이 기계식에서 전자식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공산품 생산비용의 10~20%는 반도체가 차지하게 된다. 말하자면, 반도체산업을 육성하는 국가는 세계 산업생산의 10~20%에 해당하는 광대한 시장에 대한 '自動的' 참여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반도체기술은 기억소자(D-램) 분야에서 세계정상을 뒤쫓고 있다. 앞으로의 세

계가 정보화시대이고 이 시대 산업의 쌀이 반도체라면 이를 생산하는 국가가 世界史의 주류에서 쉽게 탈락할 리는 없다.

마지막으로, 제조업기반을 가진 한국 같은 중진국이 가질 수 있는 유리한 점은 3元的 국제분업체제이다. 선진국·개도국으로 나누어지던 과거의 2元化된 국제분업체제와는 달리 오늘날은 선진국-중진국-개도국으로 3元化되어 있다.

이와 같은 3元的 국제분업체제에서 한국 같은 중진국의 비교우위는 相對化된다. 즉, 선진국에 대해서는 자본 및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비교우위를 가지는 반면, 개도국에 대해서는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비교우위를 지니고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비교열위를 가지는 것이다. 이 같은 비교우위, 상대화의 당연한 결과로서 무역에서 한국은 의류·신발 등 경공업제품에서 추격하는 중국·ASEAN에게 시장을 잠식당하게 되지만, 반대로 이들 국가에 대해 자본재·중간재 및 소재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수출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미 금년 들어서 對中國·對동남아에 대한 철강·석유화학·기계설비·부품 등의 수출증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과제는 이와 같은 3元的 국제분업체제 속에서 중진국의 위치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外債依存型 성장 전략

다국적기업 의존형 성장전략을 추진해온 중남미 국가의 산업구조를 한번 살펴보자.

중남미 상위 500개 기업의 90년도 총매출은 3,199억달러였는데 이것의 26.3%인 840억 달러가 多國籍企業의 매출이다. 국영기업을 제외한다면 다국적기업의 매출비중은 44.6%로 높아진다.

멕시코의 10대 기업 중 5개社가 지엠(GM)·크라이슬러·폭스바겐·포드와 IBM과 같은 다국적기업이다(〈표1〉 참조).

브라질은 더욱 심해서 10대 기업 중 9개가 쉘

(Shell)·지엠·카르푸르(Carrefour)와 같은 다국적기업이다(〈표 2〉 참조).

이들 국가의 앞날을 결정할 컴퓨터·자동차 등 기술집약산업을 볼 때 다국적기업의 진출은 더욱 두드러진다.

정보화시대의 핵심산업으로 일컬어지는 컴퓨터산업의 경우, 중남미 상위 5개사 중 브라질의 Serpro社를 제외한 나머지 4개社가 다국적기업이다(〈표 2〉 참조).

외국기업에 의한 産業主權 상실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꼽히고 있는 중남미 자동차산업의

〈표 1〉 멕시코와 브라질의 10대기업(현지기업과 다국적기업)

멕시코			브라질	
1	Telmex	(통신)	Autolatina*	(자동차)
2	Vitro	(유리)	Shell*	(정유)
3	GM*	(자동차)	Souza Cruz*	(담배)
4	Chrysler*	(자동차)	GM*	(자동차)
5	Cifra	(유통)	ESSO*	(정유)
6	Volkswagen*	(자동차)	Carrefour*	(유통)
7	FORD*	(자동차)	Pao	(유통)
8	Hylsa	(철강)	Texaco*	(정유)
9	Celanese	(석유화학)	Gessy Lever*	(화장품)
10	IBM*	(컴퓨터)	Nestle*	(식품)

註: 국영기업은 제외, *는 다국적 기업

자료: America Economia, 1991

〈표 2〉 중남미 컴퓨터산업에서의 상위 5대기업

(단위: 백만달러)

순위	기업명	소재지	구분	매출
1	IBM	브라질	다국적	1,448
2	IBM	멕시코	다국적	826
3	Serpro	브라질	현 지	534
4	IBM	아르헨티나	다국적	493
5	Unisys	브라질	다국적	322

〈표 3〉 중남미 자동차산업에서 上位 5大 기업

(단위: 백만달러)

순위	기업명	소재지	구분	매출
1	Autolatina	브라질	다국적	5,431
2	G.M.	멕시코	다국적	2,486
3	G.M.	브라질	다국적	2,394
4	Chrysler	멕시코	다국적	2,307
5	Volkswagen	멕시코	다국적	1,766

경우, 상위 5개사가 예외 없이 모두 서구 다국적기업이다(〈표 3〉 참조).

브라질의 Autolatina社가 조금 생소한 이름이지만 이 회사도 실은 미국의 포드와 독일 폭스바겐의 합작회사이다. 이들 국가에서 다국적기업의 비중과 역할은 막강하며 일부 산업의 심각한 獨寡占化를 유발하고 있다.

사실, 오늘날과 같은 地球經濟時代에 우리 기업이니 외국기업이니 하는 것은 낡은 사고방식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 클린턴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고문인 하버드대학의 로버트 라이시(R. Reich) 교수는 오늘날 기업의 국적을 따지는 것은 탈시대적 착오라고 말한다. 미국에서 생산활동을 해서 고용과 부가가치만 창출하면 됐지 구태여 'American-owned firm'과 'America-based firms'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경제학자의 주장에 불과하다. 정작 클린턴 대통령 당선자도 선거유세중 고소득층과 '외국기업'에 대한 課稅強化를 들고 나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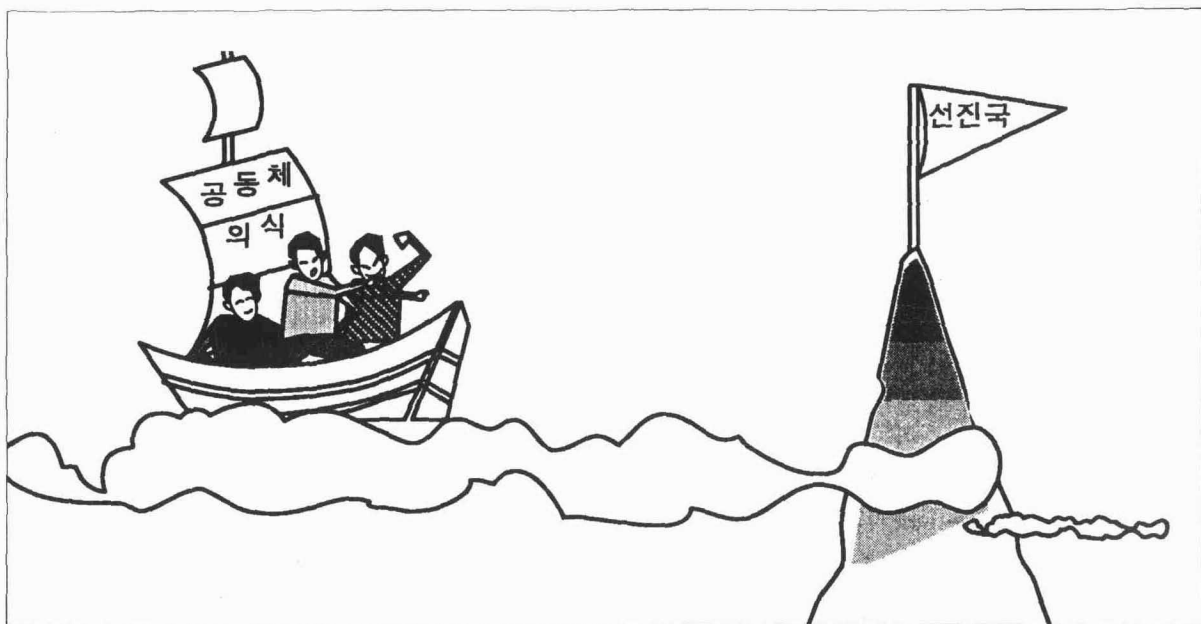
한국인은 우리 산업·우리 기업이라는 독특한 '우리 의식'을 가지고 산업화를 시작했다. 外債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으면 했지, 남의 나라 기업이 들어와 산업화를 이룩해주는 것은 못보겠다는 것이다. 한국인에게 얼마나 우리 의식이 강한가를 보여주는 일화는 많다.

대만정부 관리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세계 방방곡곡에 華僑가 나가 차이나타운이 번성하고 있는데 딱 두나라에서만 그렇지 못하다. 바로 한국과 일본이다.

옛날 명동에 있는 중국대사관 뒤 중국인거리를 가보면 아직 몇몇 중국집과 상점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대만 관리의 말대로 전혀 '번성하는' 차이나타운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미국의 L.A나 뉴욕, 심지어 워싱턴 근교 한국인이 모여 사는 지역의 '중국 음식점'에 가보면 분명 중국인인데 우리말을 하고 짬뽕·자장면 등 우리나라에만 있는 중국 음식을 내놓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에서 중국집을 하다 70~80년대 자의반



타의반으로 떠나 온 화교들이다. 배운 게 뭐라고 할 수 없이 메뉴에다 한글로 짬뽕·자장면이라고 써놓고 한국인을 상대로 장사는 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왜 왔냐'고 물어보면, 좀처럼 감정표현을 안하는 그들이지만 갑자기 눈을 치켜 뜨고 목청을 돋군다. 토지소유·병역 등 뭘지 모르게 먹고살기가 힘들어 한국을 떠나왔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오늘날과 같은 국제화시대에 우리로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새겨봐야 할 점인 지도 모른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국제화는 '더불어 사는 것'이 되어야지, 화교에게 경제권을 장악당한 필리핀·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와 다국적기업에게 産業主權을 양보(?)한 중남미 같은 국제화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魔의 루이스장벽 통과稅(!)

쿠즈네츠는 과거 美·英 등 선진국의 소득분배를 분석하면서 中進國 단계에서 소득불평등이 정점에 달하고 선진국에 진입함에 따라 다시 개선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루이스는 산업화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4천달러일 때 경제적 마찰과 대립이 極에 달해

많은 나라가 여기서 좌절한다고 보았다.

이들이 시사하는 것은 경제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중진국 단계에서 넘어야 하는 어려운 난관, 즉 '마의 루이스장벽'이 있다는 것이다.

한 나라 국민경제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벽이 있다면 문제는 두가지이다. 이를 통과하느냐 좌절하느냐, 만약 이를 넘는다면 어느 정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다행히 우리는 이 장벽을 무사히 넘었다. 문제는 어느 정도의 통과稅(!)를 치르고 넘었으며 그 과정에서 빚어낸 후유증을 얼마나 빨리 치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愚는 민주화건 선진화건 아무런 代價없이 거저 얻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지난 3~4년동안 스스로 이룩한 업적보다 마의 장벽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치러야 했던 대가에 너무 집착하게 함으로써 모두의 經濟意志를 저하시키고 있다.

과거 우리보다 먼저 중진국에 진입했으나 이 장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한 터키·이집트·중남미국가 등은 차치하고라도, 우리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의 권위주의적 통치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난 스페인이 어느 정도의 통과稅를 치렀나 알아보자.

1975년 지난 40여년간을 철권통치해 오던 프랑코가 죽고난 후 스페인은 견잡을 수 없는 민주화와 노사분규의 열기에 휘말렸다. 75년부터 79년 사이에 5년간 총 1만1,471건의 노사분규가 발생, 임금이 年平均 20.6%나 상승하였다. 생산성 증가를 수반하지 않은 이 같은 급격한 임금상승은 年平均 20%에 달하는 인플레이와 연결되었고, 68~74년간 OECD 평균 GDP성장률 3.9%를 웃돌던 6.8%의 성장률은 80년대 후반에 2.8%로 둔화되었다.

이와 같은 경제침체에 따라 얻은 것은 大量失業으로 70년대초까지 4% 미만에 머물던 실업률이 80년에는 12.3%, 85년에는 무려 21.9%에 달해 거리에는 200여만명의 일자리 없는 사람이 득실거리게 되었다.

다민족국가 스페인이 치른 대가에 비하면 우리가 마의 루이스장벽을 넘는 과정에서 지불한 통과稅가 엄청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본질적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이 오랜기간 동안 민족공동체로서 삶과 의식을 共有해온 단일민족이기 때문이다.

중남미는 물론이고 오늘날 舊소련이나 舊유고가 민족분규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의 단일성은 잘만 이끌어 나가면 우리 경제가 선진화하는 데 큰 강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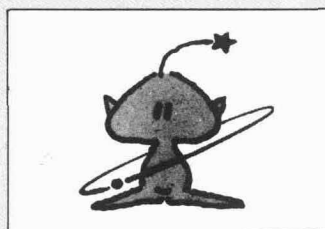
맺음말

어떤 사람은 자본주의체제의 특성상 제3세계 국가는 선진국대열에 들어설 수 없다고 말하며, 많은 사람은 한국경제는 선진국과 후발개도국 사이에서 샌드위치형으로 침몰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아르헨티나와 같은 중남미국가처럼 좌절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글의 끝을 맺으면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 글의 분석은 經濟內的 要因만을 가지고 한국경제의 앞날을 비취보았다는 데 그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만약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나 후발개도국의 추격 같은 外生的 요인이 아니라 우리 社會 스스로에서 제기되는 內生的이며 經濟外的 要因일 것이라는 점이다. 필필

“개도국에서는 처음 개최되는 공인 엑스포
풍요로운 미래로 가는 도약의 장입니다.”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135-03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39 전화:(02) 551-4670/1 Fax:(02) 551-1316

지난해 11월 브뤼셀에서는 ESPRIT 국제회의가 1주일동안 개최되었다. ESPRIT는 EC가 주관하는 정보통신분야 기술개발 프로그램이다.

EC가 한해에 R&D에 투자하는 비용은 연간 약 20억달러 정도 되는데 ESPRIT에 연 약 4억달러 정도가 투입되고 세부과제수는 1,259개, 기업이나 대학·연구기관 등 참여기관의 숫자는 2,370개에 이르고 있다.

말하자면 EC의 간판주자격인 프로젝트로서 매년 11월경이 되면 지난 1년간의 연구실적을 공개발표하고 개발된 결과를 전시하는 모임이 개최된다. 이

EC의 기술통합

최건모 과학기술처 공업기정/駐EC대표부 과학관

번에도 EC 회원국은 물론 EFTA 국가·동구권 국가·미국·일본 등 세계각국에서 2천여명의 전문가가 모이는 성황을 이루었다. 회의기간중 EC의 정보통신기술개발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강조한 것은 美·日에 대한 산업 경쟁력 확보이다.

한 연설자는 “우리는 기술경쟁력 확보에 대하여 비관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EC의 고민은 그가 덧붙인 다음 말에서 나타난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술격차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전시장에는 컴퓨터 제어장치를 갖춘 자동차,

컴퓨터에 의한 과일 맛 식별장치, ESPRIT 워크스테이션, EC가 개발중인 LCD장치 등이 소개되었다.

ESPRIT는 원래 산업화 이전 기초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겉으로 나타난 전시결과만 보고는 전문가가 보기 전에 그 성공여부를 간단히 판단할 수는 없으나, 참관자들을 크게 흥분시킨 제품은 없었으며 유럽인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소니 등 일본상표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하드웨어에 담겨 있는 등 외관상으로도 어느 정도 EC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었다.

美·日과의 산업경쟁력 싸움에 나서고 있는 EC의 모습에서는 피곤함도 엿보인다.

EC의 판독과 과학기술담당 부위원장은 “이제는 기술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소비자는 미처 기술속도를 따라갈 수 없고 따라서 신기술 제품은 시장을 확보하지 못해 정보통신산업은 새로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걱정했다.

EC는 단일시장 구축까지 비교적 순탄하게 통합의 과정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제 더 나아가 화폐통합·정치통합을 향하여 가면서 험난한 내부 시련을 겪고 있다. 각 회원국의 주권문제, 회원국내 생활수준, 생활기반의 불균형 등은 EC 통합과정에서의 걸림돌이다.

EC의 기술통합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EC가 회원국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R&D에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은 회원국 전체 R&D 비용의 4%에 불과하다. EC의 R&D 정책의 성격도 겉으로는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아직까지는 회원국간 과학자·기술자·기업가간의 교류에서 더욱 의의를 찾고 있는 형편이다.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에 EC는 R&D 목표를 산업기술 향상에 두고 있으며, 이의 실행을 위하여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추진전략 제안서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EC의 R&D 목표를 기초연구에 둘 것인가 응용연구에 둘 것인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논쟁도 아직 끝이 나지 않고 있으며, 위의 제안서는 각 회원국 과학기술장관들



사이에서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다. 독일·프랑스·영국 등 기술선진국들은 자국내 대기업들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응용기술투자를 선호하고 있으나, 첨단기술을 수용할 만한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들이 부족한 스페인·포르투갈·그리스 등은 기초기술투자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각국의 R&D 전략에서도 많이 볼 수 있지만 EC의 R&D 전략 중에는 중소기업에 보다 많은 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조향이 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영국 BBC의 한 기자는 이런 질문을 던져 청중을 웃겼다.

“시실리섬에 사는 한 여자가 낸 세금이 어찌하여 프랑스의 한 중소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올리기 위한 R&D 투자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는가?”

향후 EC 회원국들이 정치통합을 둘러싸고異見을 보이면 보일수록 기술통합의 길도 순탄치

않을 것이다. 기술에 있어서도 각 회원국의 이해관계는 다르기 때문이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미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EC 공통의 목표가 최근 EC의 기술통합을 지켜주는 받침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EC 기술통합의 방향과 방법에는 이론이 분분하겠지만 미국·일본과의 산업경쟁력 다툼에서 이겨내지 못하는 한, EC 공동의 R&D 노력만큼은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

이번 회의에서는 예상외로 中國人들의 모습이 눈에 많이 띄었다. ESPRIT 프로젝트와 직접 관련도 없고 경제사정에 여유도 없는 그들이 이렇게 대기 참여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들의 신분을 보니 북경·상해 등 각 지역의 대학교수들이 많았다.

한국의 대학교수는 물론 한명도 없었다.

우리의 정보통신기술 수준이 이미 높아져 EC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자신감 때문일까? 남원



미래를 통찰하는 교통행정을

정기환

중앙경제신문 기자 / 교통부

교통부가 세들어 있는 서울역 옆의 철도빌딩은 지은 지 20년이 넘어선 상당히 퇴락한 건물이다.

이를 일러 어떤 이들은 지난 20여년간 근본적인 처방이 미루어진 채로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 교통문제의 한 상징물이라고 우스갯 소리를 한다.

豫算當局의 드높은 건축재정 외

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교통부의 총 세출예산은 8,500억원으로 올해보다 무려 217%나 증가했다.

그나마도 경부고속철도·영종도 신공항 등 주요 투자사업비의 경우, 당초 요구액보다 절반 이상씩 깎인 결과가 이 정도다.

이 중 95% 정도가 고속철도·신공항·지하철 건설 등 교통시설 투자사업비다.

바야흐로 교통행정의 밀린 숙제 해치우기가 본격화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익히 경험했듯이 시험을 앞둔 벼락치기 공부를 어찌 앞날을 대비한 꾸준한 준비에 비할 것인가.

수십조원에 이르는 재원조달은 갈수록 나라살림을 빼듯하게 할 터이고, 이 같은 시설이 운행단계에 이르기까지 겪어야 할 불편과 國民經濟에 미치는 비경제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최근 들어 차량증가속도는 연간 100만대에 이르고 있으나 20년 전만 해도 2만대 안팎이었다.

항공·철도수요 역시 마찬가지로 추세다. 열차표는 주말의 경우 한 달전에 바닥나기 예사고, 공항에 가면 여객터미널 입구에서부터 장사진을 이룬다.

서울도심의 평균주행속도가 20km 안팎으로 떨어지는 등의 생활상의 불편은 오히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불과하다.

재화의 가치는 그 수요처를 찾아 물흐르듯 흐를 수 있을 때에만 제 값을 찾을 수 있다.

현재 우리 경제가 부담하고 있는 화물유통 비용은 GNP의 14.3%로 美國의 10.3%에 비해 4%포인트

트 높은 편이며, 이는 日本·대만 등 주요 경쟁상대국들에 비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는 곧바로 산업활동의 원가부담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제조업의 매출액은 89~90년간 18.4% 증가한 데 반해 물류비용은 21%나 증가, 원가 중의 物流費 구성이 경쟁력 약화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직접비용 이 외에도 세계 무역전쟁의 시대에 물류체증으로 국내외 시장환경의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데 따른 간접비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머지 않아 交通大亂이라는 말이 과하지 않게 될 상황이다. 가히 갈 길은 먼데 해는 저물어 가는 형국이다.

이러한 때를 당해서도 수십년간 미래에 대한 비전을 잃어왔던 국가 交通行政은 아직 그 판단이 흐리고 대처가 미흡한 느낌이다.

60년대말의 경부고속도로 건설 반대론자들을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다시 경부고속철도를 결사 반대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앞으로의 국가경영은 통찰력의 싸움이라는 말이 있다. 특히 교통행정은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바탕으로 늦었지만 새출발을 다짐해야 할 시점이다. **중앙**



‘郵政事業 자율화’를 기대한다

김 홍

조선일보 기자 / 체신부

대개의 정부부처는 국정감사가 열릴 때마다 어떤 잘못이 지적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기 마련이다. 체신부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체신부는 여러 업무 가운데 우정사업에서만은 오히려 ‘지원사격’을 받는 때가 많다.

국회의원들은 처음 우편서비스의 부실을 성토했면서 체신부를 질타하기 시작한다. 체신부는 국내

우편사업이 공공성에 너무 치중돼 운영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우편서비스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대답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협조가 뒤따라야지 체신부 혼자서는 역부족이라며 은근히 ‘힘없는 부처’임을 강조한다. 그러면 대개 국회의원들은 문제해결을 위한 체신부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협력자’로 변신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우편은 1884년 신식 우정제도가 도입된 이래 국민의 기본적인 통신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꾸준히 담당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전화와 컴퓨터 같은 전기통신수단이 발전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지위가 약해진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국가통신의 주요기반이 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앞으로도 우체국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무기 삼아 종합정보서비스센터로 발전할 잠재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

그럼에도 우체국의 위상은 정부당국자와 국회의원 모두가 인정하듯 형편없이 떨어져 있다. 열악한 임금조건과 과중한 업무부담 등으로 우체국을 떠나는 일손이 해마다 늘고 있다. 왜일까?

근본 원인은 우정사업의 만성적자에 있다. 우편은 국민의 정보교환을 위한 公益事業에 속한다. 그러나 정부가 지나치게 공익성을 강조하다 보니 우편요금은 원가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에서 책정되고 있으며, 요금을 현실화하려는 체신부의 노력도 정부의 물가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인상억제 방침에 따라 그 실현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우편요금의 평균 원가보상

률은 53.3%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1종 우편물은 72.4%로 다소 높은 편이나, 3~4종 우편물은 25%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정사업의 적자액은 해마다 1,100억원 정도로 만성적이다. 그것도 체신부가 체신금융사업에서 벌어들인 이익금과 정부투자기관인 한국통신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일반회계의 지원금 등을 우정사업에 보전하고 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다면 우정사업 적자는 엄청난 액수에 이르게 된다. 체신부 수입의 상당액을 이 같은 郵政赤字 補填에 쓰다 보니 정작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는 첨단 정보통신 기술 연구개발은 소홀해지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우정사업의 만성적자를 해소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기업적 운영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우정사업은 조직·인사·요금·예산·회계관리 등 모든 운영면에서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다. 체신부는 오래 전부터 우정사업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회계나 獨立採算制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시도해 오고 있으나, 다른 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만 거듭했다.

내년에는 국회 交遞委 위원들을 중심으로 특별법을 반드시 의원입법하겠다고 하니, 정보통신의 사회간접자본적 중요성을 인식하는 체신부 출입기자의 입장에서 걸기대해 보기로 한다. **남관**



감속성장으로 안정과 경쟁력 강화의 토대 마련

고형권

경제기획원 동향분석과 사무관

최근 우리 경제는 지난 수년 동안 과열양상을 보였던 內需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정되면서 成長은 둔화되고 있으나, 물가와 국제수지가 크게 개선되는 등 안정화시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장이 감속되면서 한계기업들이 도산하고 설비투자가 둔화되는 등의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으나, 91년도와 92년 두 해 동안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는 안정기조 회복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산업경쟁력 배양에 있었다. 경제정책의 중점도 이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었음을 감안할 때, 최근 우리 경제의 모습은 보완할 사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수진정으로 成長率 낮아져

92년 1/4분기중에 7.4%를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은 2/4분

기에는 5.9%로 낮아진 데 이어 3/4분기중에는 3.1%로 낮아졌다.

이렇게 3/4분기 성장이 급격한 둔화세를 보인 것은 경기순환, 구조조정, 안정화시책의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3/4분기 成長을 支出側面에서 살펴보면, 먼저 소비는 부동산가격이 계속 하락해 왔고 증시도 침체되어 자산가치 감소효과가 작용한 데다 소비절약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면서 내구소비재와 의류·장신구 등에 대한 지출을 중심으로 5.9%로 크게 둔화되었다.

투자는 주택건설과 상업용건물 건설이 줄어 건설투자가 2/4분기의 -2.9%에서 3/4분기에도 3.6% 감소하였고 설비투자도 석유화학·철강 등 대단위 투자가 91~92년중에 일탈된 데 대한 상대적 영향으로 3.2%가 줄어 전체적으로 3.4% 감소하였다.

한편, 상품수출은 시장다변화 노력과 화학·선박·자동차 등의 중화학 공업제품을 중심으로 11.0%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한 반면, 상품수입은 내수 진정에 따른 원자재 및 자본재 수요 감소로 5.2%가 줄어들었다.

3/4분기 성장을 다시 산업별로 살펴보면, 농림어업은 축산업이 견조한 증가세를 보인 데다 어업생산도 증가하여 91년 같은 기간보다도 높은 4.1%의 成長을 보였으나, 제조업은 내수둔화와 在庫調整 등으로 3.2% 성장에 그쳤고 건설업은 2/4분기에 이어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했고, 서비스부문도 도소매 및 부동산의 둔화로 성장률이 크게 낮아졌다.

국민계정을 통해 3/4분기중의 우리 경제의 모습을 조망해보면 내수가 진정되면서 성장률이 이례적으로 낮아졌으나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여 내용면에서는 건설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임금과 인력난이 크

게 개선되지 못한 상황에서 전년동기중의 높은 증가에 대한 反落효과가 크게 작용했지만 설비투자가 둔화되는 것은 우려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92년 9월에 93년 상반기까지 총 5조원에 달하는 설비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생산·수요구조 자본집약업종과 수출중심으로 변화

92년 10월중의 산업생산과 출하도 각각 1.5%, 3.1% 증가에 그쳐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를 업종별·용도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생산과 수요 구조가 노동집약적인 소비재 관련 업종에서 자본·기술 집약적인 생산재업종 중심으로, 내수 위주에서 수출 위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산업생산에 있어서는 음식료·가구·의복 등은 감소하고 있으나 화학·석유 등은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출하구조에 있어서는 내수용은 크게 둔화된 반면 수출용은 비교적 높은 증가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92년 10월중 생산자재품 재고증가율은 업계의 재고조정 노력으로 8월의 15.3% 증가, 9월의 13.6% 증가에서 11.5%로 낮아져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제조업평균가동률은 76.7%를 기록하여 9월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한편, 10월중에 설비투자관련 지표인 국내기계수주, 기계류 내수 출하 등은 감소세를 계속 하였으나, 건설투자 관련지표인 건축허가 면적은 큰 폭의 증가세로 반전되었다.

〈표 1〉 경제 성장의 추이

(단위 : %)

	91년 1/4~3/4	92년 3/4	92년 1/4~3/4
경제성장률	8.8	3.1	5.4
민간소비	9.1	5.1	6.8
총고정자본형성	12.8	-3.4	0.7
(건설)	12.9	-3.6	-1.3
(설비)	12.5	-3.2	3.0
상품수출	7.5	11.0	11.9
상품수입	19.5	-5.2	2.5
농림어업	3.2	4.1	5.5
제조업	7.7	3.2	6.5
건설업	13.1	-3.0	-0.9
서비스업	10.8	4.8	6.9

〈표 2〉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 %)

	92년 1/4	2/4	3/4	10월	1~10월
전 산업	8.3	8.9	3.1	1.5	6.2
음식료품	2.5	0.7	-3.1	0.6	-1.2
의복	-1.5	-7.2	-8.6	-8.7	-6.1
신발	11.5	-2.3	-9.5	-22.2	-2.8
산업용화합물	32.9	26.4	18.1	20.8	25.0
석유정제	43.9	30.0	20.7	22.8	30.0
운수장비	11.1	29.7	13.4	-0.4	15.8

〈표 3〉 출하 동향

(단위 : %)

	92년 1/4	2/4	3/4	10월
전체출하	10.9	9.1	5.0	3.1
내수용	11.7	8.7	3.4	2.1
수출용	7.8	10.8	11.1	7.1

〈표 4〉 재고 및 가동률 추이

(단위 : %)

	92년 1/4	2/4	7월	8월	9월	10월
재고증가율	14.1	17.9	17.3	15.3	13.6	11.5
제조업평균가동률	81.3	79.9	79.2	74.5	76.0	76.7

물가, 부동산가격 현저한 안정세 시현

92년 11월중에 소비자물가는 10월의 0.1% 하락에 이어 또다시 0.5%의 감소를 기록함으로써 91년말 대비 4.2% 상승에 그쳐 연말까지도 4%대에서 안정되어 최근 6년중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일 전망이다.

11월중 도매물가 역시 전월대비 0.3% 하락하여 지난 8월 이후 연속 4개월째 내림세를 지속

함으로써 91년말 대비 1.5% 상승에 그치고 있다.

금년 들어 물가가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안정화정책 등으로 내수가 진정되면서 그간의 초과수요 압력이 대폭 완화되었기 때문인데, 특히 생활물가를 나타내는 생필품가격·신선식품 가격 등도 크게 안정되어 있어 지수물가와 피부물가 간의 괴리폭이 크게 축소되고 있다.

아울러, 8~9월에 이사철을 맞아 다소 상승했던 주택가격은

10월에 하락세로 반전된 후 11월 들어서도 0.5% 감소하였으며, 토지가격도 2/4, 3/4 분기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물가와 부동산가격이 안정세를 계속함에 따라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하였던 투기와 인플레이 기대심리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임금·금리 등이 하향안정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산업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

〈표 5〉 투자관련 지표 추이

(단위 : %)

	92년 1/4	2/4	3/4	10월	1~10월
국내기계수주액	-4.0	-1.7	-13.1	-5.4	-6.6
기계류내수출하	0.3	1.3	-3.9	-8.4	-1.5
건축허가면적	-15.5	-36.6	-25.4	45.8	-22.1

〈표 6〉 소비자 및 도매물가상승률

(단위 : %)

	91년 11월		92년 11월	
	소비자	도매	소비자	도매
比 전월	0.4	0.1	-0.5	-0.3
比 1년전	9.1	2.4	4.2	1.5
比 전년말	9.7	3.2	4.4	2.1

〈표 7〉 생활물가지수 상승률

(비전년말, 단위 : %)

	91년 11월	92년 11월
신선식품	20.8	-8.1
20개기본생필품	9.2	5.5
월1회이상구입품목	15.1	2.7

〈표 8〉 주택가격 동향

(단위 : %)

	92년上	8월	9월	10월	11월
매매가	-3.7	0.1	0.7	-0.2	-0.5
전세가	5.4	0.7	1.5	0.1	-0.5

1~11월중 수출입적자 54억달러 개선

92년 1~11월동안 수출은 8.6%의 견조한 신장세를 유지한 반면 수입은 0.2%로 둔화되어 수출입적자가 52억달러로서 작년 같은 기간중의 106억달러 적자에 비해 54억달러가 개선되었다.

92년중에 수출이 견조한 신장세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내수진정으로 수출공급여력이 확대되었고, 물가·임금·금리 등이 91년에 비해 안정된 데다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가격경쟁력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수입이 크게 둔화된 것 역시 내수진정으로 수입수요가 둔화된 데다 원자재 가격안정·환율상승 등의 요인이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출을 상품의 성질별로 나누

어보면, 경공업제품은 부진한 반면 중화학공업제품은 높은 증가세를 계속하고 있어 여기에서도 구조변화가 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금사정 및 증시, 호전추세 지속

내수가 진정되면서 물가와 국제수지가 크게 改善된 것처럼 안정화 시책의 효과는 자금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M2 증가율이 당초목표

인 18.5% 이내에서 안정되어 있으면서도 시중금리로 지칭되는 회사채 수익률이 91년말의 19%대에서 최근에는 13%대까지 낮아지고 단기금융시장금리도 3%포인트 정도가 하락하였다.

이렇게 금리가 하향안정되고 있는 것은 물가안정, 자금흐름의 개선, 내수진정에 따른 초과 자금수요의 해소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시중금리와 규제금리의 격차축소를 통해 금융자율화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자연스럽게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증시동향을 보면, 92년 8월 21일에 450대까지 하락했던 주가지수가 최근에는 정부의 증시 안정대책, 시중금리의 하향안정 등에 힘입어 600선을 넘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증시는 앞으로도 금리안정, 국제수지 개선, 정치·사회여건 개선 등으로 꾸준히 활력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다져온 안정기조, 경쟁력 강화로 결실얻어야

최근의 우리 경제의 흐름을 다시한번 종합해 본다면, 지금의 우리 경제는 내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는 데서 기인하는 고통도 있지만, 물가와 국제수지가 크게 개선되고 경제구조가 건실화되는 등 여러면에서 바람직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물가·임금·금리 등의 절대 수준은 아직도 외국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며, 이는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크게 개선하지 못하고 개방과 국제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안정기조는 계속되어야 하며 그것은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결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한다. 

〈표 9〉 수출입 동향

(단위 : 억달러, %)

	91년 1~11월	92년 1~11월	10월	11월
수 출	641.7	696.7	71.5	66.5
(증 가 율)	(10.7)	(8.6)	(7.7)	(-0.3)
수 입	747.1	748.5	71.7	64.1
(증 가 율)	(17.9)	(0.2)	(1.2)	(-13.0)
수 출 입 차	-105.5	-51.9	-0.2	2.5

〈표 10〉 제품별 수출증가율

(단위 : %)

	89년	90년	91년	92년 1~11월
총 수 출	2.8	4.2	10.5	8.6
경 공 업 제 품	3.5	1.5	0.6	-1.1
중화학공업제품	2.2	7.2	15.7	14.4

〈표 11〉 시중금리 동향

(단위 : %)

	91년 12월	92년 3월	6월	9월	11월
회사채수익률	19.05	17.69	17.12	15.91	13.80
콜 금 리	16.84	14.70	14.92	14.87	13.63

〈표 12〉 종합주가지수 추이

(단위 : P)

	91년말	92년 8월 21일	9월말	11월말
주가	610.9	459.1	513.8	663.4



美·日의 수출입 동향과 전망

신현수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92년 들어서 美·일간 貿易收支 불균형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 91년도에 654억달러까지 크게 줄어들었던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92년 3월 이후 점차 확대 추세에 있는 반면, 일본은 월별 흑자규모가 계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對日 무역불균형 시정과 관련하여 미국은 향후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클린턴 차기 대통령은 외국, 특히 일본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압력수단으로서 지난 90년말에 효력이 종료된 通商法 수퍼 301조를 다시 부활할 계획임을 시사한 바 있다.

또 최근에는 '일본에 대해 강경책을 취하고, 일본경제의 장점을 배우며, 일본경제를 미국경제의 규정에 맞춘다'라고 하는 對日 通商 3원칙을 설정하고 앞으로 일본에 대해 한층 강도 높은 압력을 가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일본은 미국의 압력에 대응하

여 미국으로부터의 수입확대 정책을 실시하여 통상압력을 줄여 나가는 한편, 미국과의 교역비중을 점차 낮추고 NIES·ASEAN·중국 등 아시아국가와의 교역을 점차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美·일간 무역불균형의 심화로 인해 향후 미국의 통상정책 강화와 미국·일본의 교역구조상의 변화 등 국제무역환경상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에서는 최근 미·일의 수출입동향과 특징,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美國, 무역적자폭 확대될 듯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가 확대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주요 교역국인 일본과 독일을 비롯한 EC 각국의 경기침체로 92년 3월까지 증가추세를 보였던 수출이 4월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반면, 수입은 국내경기의 점진적인 회복 속에 민간부문

지출의 증가로 꾸준한 증가를 나타내었기 때문이다.

공업용원자재와 자본재 수출 부진

이러한 제품용도별 수출입추이를 살펴볼 때 첫째, 미국의 주요 교역국인 일본과 EC 각국의 경기부진으로 인해 미국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업용원자재와 자본재의 수출이 비교적 저조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업용원자재에 비해 자본재의 수출은 중남미국가들과 아세안국가들의 높은 성장과 경제개발정책 수행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신장세를 유지하였다.

소비재 및 자본재 수입 증가

둘째, 수입에 있어서는 91년 이후의 일련의 금리인하조치의 영향과 민간부문의 소비여력 증가 등으로 인해 소비재의 수입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자본재의 수입도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반면, 자동차 및 동부품의 수입은 민간소비부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낮은 증가율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90년대 들어와 미국자동차의 제품 다양화 및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국산제품 선호사상 등이 겹쳐 外國産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독일 및 EC국가에 대한 수출 부진

한편 지역별 수출입추이를 보면, 수출에 있어서는 일본과 독일을 비롯한 EC 국가들의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미국의 수출이 크게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92년 1~9월중 일본과 독일에 대한 수출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0.3%, 1.5%가 감소함으로써 미국의 총수출에서 일본과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년의 12.3%, 4.8%에서 동기간중 10.8%, 4.8%로 줄어들었다. 반면, NAFTA의 추진과 함께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수출은 급격히 늘어나 동기간중 304억달러를 기록, 전년동기대비 26.1%라는 상당히 높은 증가를 나타내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멕시코의 비중은 90년의 7.2%에서 동기간중 9.1%로 증가하였다.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가 확대된 이유는 주요 교역국인 일본과 독일을 비롯한 EC 각국의 경기침체로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반면, 수입은 국내경기의 점진적인 회복 속에 민간부문 지출의 증가로 꾸준한 증가를 나타내었기 때문이다.

멕시코 및 중국·

ASEAN으로부터 수입 증가

수입에 있어서는 92년 1~9월중 일본과 독일·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비교적 낮은 신장세를 보인 반면, 멕시코와 중국, ASEAN으로부터의 수입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수입구조에서 일본·EC·NIES 등의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 멕시코와 중국·ASEAN 등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게 된 이유로는 첫째, 90년대에 들어와 美國景氣의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소득감소로 低價品에 대한 수입을 선호하게 되어 일본·EC 등 선진국 高價제품의 수입이 둔화되었으며 둘째, 저가제품에 대한 수출에 있어서 중국이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여 한국·홍콩 등 NIES 국가들의 對美 시장점유율을 잠식하였으며 셋째, 멕

시코와 ASEAN의 경우 이들 지역에 진출한 미국·일본 기업들의 현지생산 증대로 이들 국가의 對美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올해도 美國의 무역적자는 다소 확대될 듯

지난해 10월 발표된 IMF와 WEFA의 보고서에 의하면, 93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모두 92년 규모를 다소 상회한 800억달러 내외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출(물량기준)은 미국의 주요 교역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수입수요 증대 외에도 최근의 엔貨 강세 및 달러貨 약세로 인한 미국기업의 경쟁력회복,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에 대한 시장개방압력 강화 등이 예상됨에 따라 8% 내외의 높은 신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동시에 수입도 미국경기의 회복으로 인해 7% 내외의 신장세를 보일 것이 예상됨에 따라 전체적인 무역수지는 다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美國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 80년대 중반 이후의 연간 1천억~1,500억달러 수준에 비하면 그다지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지역별 수출입 구조상의 변화와 通商政策의 기조상의 변화를 살펴볼 때, 93년

의 수출입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미국정부는 수입억제보다는 수출확대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예상하는 것은 지난 90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경기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부시행정부가 수출확대를 적극 강조해 왔으며, 민주당도 大選 승리 이후 미국의 교역상대국에 대한 시장개방압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퍼 301條의 부활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입규제는 당해제품을 중간재로서 사용하는 미국산업의 비용상승을 초래함으로써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대책이 되기가 곤란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예상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둘째, 미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수입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데다가 최근 지속되고 있는 엔貨 강세의 영향으로 일본의 대미수출은 다소 줄어드는 대신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아시아 NIES국가들의 대미수출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NAFTA의 체결과 미국과 중남미국가들간의 自由貿易協定 추진 움직임 등의 영향으로 미국과 중남미국가들과의 교역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92년중 미국에

**92년에 일본의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간으로는 사상
최고치인 1,050억달러 내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한 제2위 흑자국으로 부상되었던 중국과의 교역은 클린턴 행정부 등장 이후 무역불균형 축소 및 인권문제가 맞물려 있어 현재보다 다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日本の 최근 무역동향 및 전망

92년에 일본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92년 9월까지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91년 연간수준을 상회한 779억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간으로는 사상 최고치인 1,050억달러 내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2년 1~9월 기간동안 수출(f.o.b.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9.2%가 증가한 2,506억달러를 기록한 반면, 수입은(c.i.f. 기준) 오히려 전년동기에 비해서 1.1%가 감소한 1,733억달러를 기록하였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에 있어서는 일본산 제품이 국제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품목, 예컨대 컴퓨터(16.5% 증가), 반도체(18.2% 증가), 사무용기기(12.1% 증가), 자동차(13.2% 증가), 일반기계(9.8% 증가) 등의 자본재·내구소비재의 신장세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신장세는 일본기업들이 내수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해외판매활동을 강화한 데다가 ASEAN지역 일본 현지법인의 수입이 증가한 데 기인하였다. 또 엔貨 강세로 인해 달러貨表示 수출가격이 상승한 것도 수출증가에 기여하였다.

수입에 있어서는 국내 경기침체로 대부분의 품목이 전년수준을 하회하였으나, 특히 국내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철강(34.1% 감소) 및 알루미늄(25.2% 감소)의 감소세가 두드러졌으며, 원유의 경우도 상반기의 원유가격 안정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1.3%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통상압력 영향으로 수입규제를 완화하였던 육류 등 식료품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년동기대비 10.8%라는 높은 수입신장률을 기록하였다.

지역별 수출입추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對美 수출 비중은 88년의 33.8%에서 92년에는 27.9%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NIES와 ASEAN

의 수출비중은 각각 88년의 18.8%, 8.1%에서 92년에는 21.1%, 11.8%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輸出先多邊化政策의 적극적인 추진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나, 동시에 NIES와 ASEAN 국가들에 대한 일본의 現地投資증가로 현지법인의 일본산 부품 및 자본재 수입이 증가하고 있고, 또 이들 국가들이 수출지향형 공업화과정에서 일본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을 한 결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일본으로부터 자본재 수입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과 ASEAN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은 88년의 5.3%, 12.0%에서 92년에는 7.1%, 13.4%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NIES로부터의 수입비중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종전 NIES로부터 수입하였던 의류 및 가전제품 등을 ASEAN 지역의 現地法人으로부터 수입하거나 임금이 저렴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데 기인하고 있다.

셋째, 지역별 수출구조의 변화로 인해 對NIES 무역수지 흑자가 91년 이후 연평균 20% 내외의 높은 신장률을 나타냄으로써 對美黑字를 상회하게 되었으며, 또한 對ASEAN 무역흑자도 연평균 50% 이상의 상당히 높은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91년중 0.7% 증가에 불과하였

**對日交易에 있어서는
일본경기의 회복과
수입확대정책의 추진 등
수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국과
ASEAN 현지법인과
경쟁을 여하히 극복하느냐가
對日수출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던 對美 무역흑자는 92년 1~9월중에는 다시 16.5%의 높은 증가를 나타냄으로써 무역수지 불균형으로 인한 통상마찰의 확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수출신장세 둔화될 듯

92년에 크게 확대되었던 일본의 무역수지 흑자는 93년에는 수출신장세의 둔화와 내수회복으로 인한 수입의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다소 줄어든 950억달러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입은 국내경기 회복에 따른 수입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데다가 미국·EC 등으로부터의 시장개방압력 증가 및 이들 국가와의 무역수지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수입확대정책 실시 등이 예상됨으로써 금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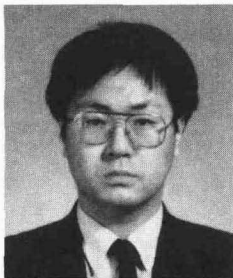
수출은 미국의 對日수입규제 강화가 예상되고 엔화 강세의 영향으로 일본기업의 수출경쟁력이 다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본제품의 높은 국제경쟁력과 93년의 전반적인 세계경기의 회복이라는 수출확대요인에도 불구하고 신장세가 금년 수준을 다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교역에 미치는 영향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93년 美·日의 무역환경이 우리나라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상존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對美交易에 있어서는 미국경기의 회복과 경쟁국인 일본의 엔화 강세의 영향,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강화 예상 등으로 수출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通商法 301條의 부활 등으로 인해 농산물·서비스 등에 대한 국내시장개방 압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對日交易에 있어서는 일본경기의 회복과 수입확대정책의 추진 등 수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국과 ASEAN 현지법인과 경쟁을 여하히 극복하느냐가 對日수출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문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계층별 소비지출구조



박성동

재무부 저축심의담당관실 사무관

소득계층별 소득분포

우리나라의 91년 근로자가구의 소득분포를 90년과 비교해 보면,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90년의 94만3,300원에서 91년에는 115만8,600원으로 2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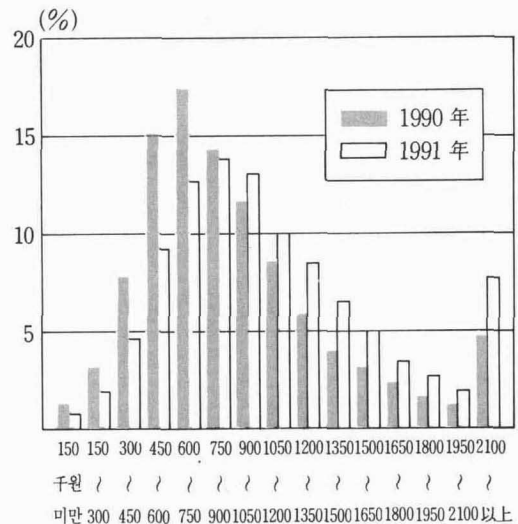
이에 따라 소득분포도 상향이동하면서 근로자가구의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1〉 91년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

(단위 : 천원, %)

	금 액	비전년증가율
소 득	1,158.6	22.8
근로소득	986.2	21.8
기타소득	172.4	28.7

〈그림 1〉 근로자가구의 소득계층별 분포



한편 우리나라의 도시근로자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균등한 가구수로 5분하여 저소득층으로부터 I·II·III·IV·V 분위로 나누어 계층별 소득점유율을 비교해 보면 91년은 근로자가구 전체의 소득에서 상위 V분위 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38.0%로 나타났다. 이는 하위 I분위가 차지하는 비율 8.5%의 4.47배를 차지하여 90년의 4.62배보다 감소한 것으로서 소득격차가 90년에 비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로렌즈 곡선으로 표시해 보면 소득분배의 불평등도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2〉 근로자가구의 소득5분위별 소득점유율

(단위 : %)

	I	II	III	IV	V	V/I
	저소득층				고소득층	(배)
83년	7.9	12.8 (20.7)	16.7 (37.4)	22.4 (59.8)	40.2 (100.0)	5.09
85년	7.8	12.9 (20.7)	16.8 (37.5)	22.5 (60.0)	40.0 (100.0)	5.13
90년	8.4	13.2 (21.6)	17.1 (38.7)	22.5 (61.2)	38.8 (100.0)	4.62
91년	8.5	13.5 (22.0)	17.4 (39.4)	22.6 (62.0)	38.0 (100.0)	4.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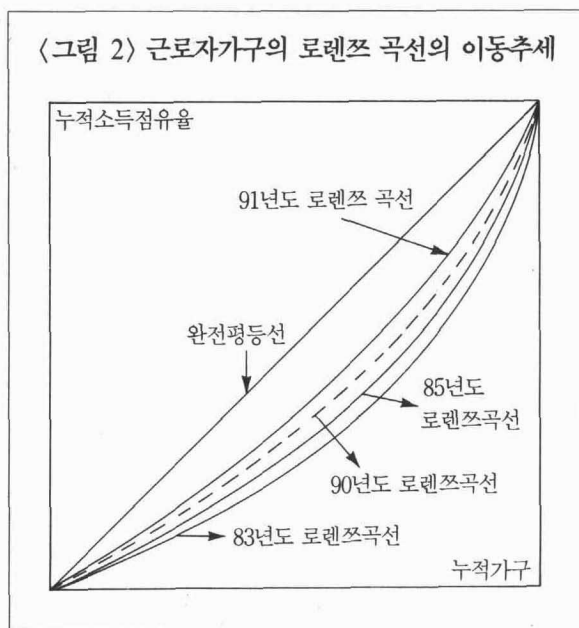
註 : 괄호안은 누적비율임.

〈표 3〉 소득계층별 소득구조

(단위 : 천원, %)

	I	II	III	IV	V
소 득 (A)	493.9	778.2	1,005.6	1,311.9	2,202.8
근로소득 (B)	441.1	698.9	878.2	1,139.7	1,773.0
기타소득 (C)	44.7	66.1	99.5	132.6	347.5
(재산소득)	(5.8)	(9.2)	(18.4)	(29.7)	(75.9)
(수증 및 보조소득)	(11.0)	(13.9)	(20.9)	(27.2)	(86.0)
근로소득의 비중 (B/A)	89.3	89.7	87.3	86.9	80.5
기타소득의 비중 (C/A)	9.1	8.5	9.9	10.1	15.8
(재산소득)	(1.2)	(1.2)	(1.8)	(2.3)	(3.4)
(수증 및 보조소득)	(2.2)	(1.8)	(2.1)	(2.1)	(3.9)

〈그림 2〉 근로자가구의 로렌즈 곡선의 이동추세



식료품비를 제외하고는 근로자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육교양오락비로서 이는 각 소득계층에서 교육비 지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즉,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83년도에 비해 85년도, 90년도, 91년도로 진행함에 따라 로렌즈곡선이 완전평등선에 더욱 가깝게 접근하고 있다.

소득계층별 소득구조와 소비지출 구조

우리나라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계층별 소득구조를 보면 근로소득이 가구소득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II분위 소득수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로소득 비중은 I분위 89.3%에서 II분위 89.7%로 증가하였으나 III·IV·V분위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I분위는 受贈 및 보조소득의 비중이 다소 높으며, III·IV·V분위로 갈수록 재산소득이 포함되는 기타소득의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표 3〉 참조).

소득계층별 소비지출 구조

교육비 지출, 높은 비중 차지

근로자가구의 소비지출구조는 식료품비·주거비·광열수도비·가구집기·가사용품비·피복 및 신발비·보건의료비·교육교양오락비·교통통신비·기타 소비지출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계층별 소비지출 행태를 살펴보면 소비지출 중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인 앵겔계수가 I분위 계층은 36.3, V분위 계층은 27.7로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식료품비의 지출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주거비·광열수도비·보건의료비 등 기본생계를 위한 지출도 소득탄력성이 낮아 소득수준이 높아감에 따라 지출비중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교육교양오락·교통통신·피복신발·가구

가사용품비 등은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일수록 지출비중이 증가하여 자기의 개성을 나타내거나 생활자재를 즐기려는 지출이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식료품비를 제외하고는 근로자 가구의 소비지출에

〈표 4〉 근로자가구의 소득5분위 계층별 가계소비 (91년 기준)

(단위 : 천원, %)

	I	II	III	IV	V
금 액					
가 계 소 득	493.9	778.2	1,005.6	1,311.9	2,202.7
가 처 분 소 득	468.2	733.4	946.4	1,224.3	2,023.2
소 비 지 출	453.4	585.8	705.2	864.2	1,228.8
평균소비성향 (%)	96.8	79.9	74.5	70.6	63.7
소 비 지 출 구 성 비					
식 료 품 (영 겔 계 수)	36.3	34.8	33.6	32.1	27.7
주 거	7.2	4.7	4.6	3.7	3.8
광 열 수 도	5.4	4.8	4.6	4.0	3.3
가 구 가 사 용 품	5.0	5.4	5.5	5.6	6.7
피 복 신 발	7.5	7.9	8.0	8.1	8.4
보 건 의 료	6.0	6.0	5.5	5.3	4.7
교 육	9.4	11.8	12.5	13.2	13.0
(교 육)	(5.8)	(7.0)	(7.6)	(8.2)	(7.9)
교 통 통 신	6.9	7.5	7.4	8.8	10.9
기 타 소 비 지 출	16.3	17.1	18.5	19.2	21.5
소 비 지 출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5〉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5분위별 선택적 소비지출 비중 추이

(단위 : %)

	I	II	III	IV	V
저소득층			고소득층		
85년	6.8	7.0	7.7	8.5	10.3
86년	6.6	7.5	7.8	8.8	10.5
87년	7.1	8.0	8.4	8.9	11.5
88년	7.7	8.2	10.0	10.6	13.8
89년	8.8	10.3	11.4	13.5	17.6
90년	8.2	10.0	11.1	13.9	18.7
91년	8.6	11.3	12.1	14.2	19.4

〈표 6〉 I, V분위 가계의 선택적 소비지출 비교 (91년 기준)

(단위 : 천원, 배)

	I분위	V분위	V/I
개 인 교 통 비	3.3	87.3	26.5
장 신 구	3.2	16.8	5.3
외 의	18.1	67.3	3.7
교 양 오 락	14.6	47.2	3.2

소득분포가 상향이동되면서 근로자가구의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추세에 있으나 재량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外衣·교양오락·장신구 및 개인 교통비 등에서의 선택적 소비지출의 비중이 고소득층에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고소득층의 소비지출은 축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서 공통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육교양오락비로서 이는 각 소득계층에서 교육비 지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식료품비·교육교양오락비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가계의 소비지출 행태를 살펴보면 최하위소득계층인 I분위계층은 피복신발·주거·교통통신·보건의료 순으로 지출비중이 나타나고 있어 생계에 필수적인 費目이 주요항목을 차지하고 있다.

II·III분위계층은 피복신발·교통통신·보건의료·가구가사용품비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I분위계층에 비해서 월세 등의 주거비 비중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주거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IV·V분위계층은 교통통신·피복신발·가구가사용품 등의 순으로 소비지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교통비·外衣 등에 지출비중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4〉 참조).

고소득층, '선택적 소비지출' 증가

또한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당장 긴급하지 않은 '선택적 소비지출'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소비지출항목 중 소득탄력성이 상대적으로 큰 外衣·교양오락·개인교통비 및 장신구의 합계를 '선택적 소비지출'로 보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재량적 선택범위가 넓은 선택적 소비지출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88년 이후 V분위 고소득층의 '선택적 소비지출'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표 5〉 참조).

V분위계층의 선택적 소비지출을 개별항목별로 I분위계층과 비교하여 보면 V분위계층의 개인교통비는 I분위계층에 비해 무려 26.5배에 달하고 있어 고소득층의 차량유지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신구·外衣·교양오락에 대한 소

비지출에 있어서도 V분위 계층이 I분위계층에 비해 각각 5.3배, 3.7배, 3.2배를 차지하고 있어 고소득층의 선택적 소비지출이 저소득층에 비해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표 6〉 참조).

고소득층에 대한 저축유인책 수립해야

소득분포가 상향이동되면서 근로자가구의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추세에 있으나 재량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外衣·교양오락·장신구 및 개인 교통비 등에서 선택적 소비지출의 비중이 고소득층에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고소득층의 소비지출은 축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계층별 소비지출 행태를 볼 때 고소득층의 경우 저소득층에 비해 저축을 늘일 수 있는 여력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므로 우리나라의 저축증대를 위해서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저축상품을 개발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저축유인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인 부담

본고는 통계청에서 월평균 4,280가구를 표본으로 도시가구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여 92년 6월 발행한 91년 도시가계 연보를 이용하여 소득계층별 소비지출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저축증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임.〈필자 註〉

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나라경제』를 애독해 주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그간의 제작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나라경제』를 구독할 수 있도록 창간 당시 책정된 가격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만,
제작비 및 발송비용의 상승 등으로 인해 부득이 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점 독자 여러분의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나라경제』가 더욱 충실한 잡지,
꼭 필요한 잡지가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정기구독중인 분은 구독기간중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 인상전 가격 : 2천원(연간구독료 2만원)
- 인상후 가격 : 2천 5백원(연간구독료 2만 5천원)
- 적용시기 : 93년 1월호부터